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4시 4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록

- 대구지하철 참사
- 삼성 백혈병 등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사망 사고
- 용산 참사
-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 세월호 참사
-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을 실명 사고
-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망 사고
- CJ E&M의 tvN 이한빛PD 사망 사건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 집배노동자 과로사 및 과로자살
-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故 김태규 님 산재 사망 사고
-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건
-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사고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들의
기록과 증언



주관 생명안전 시민넷

1부 기록과 증언

- 대구지하철참사 (2003.02.18) 6
- 삼성 백혈병 등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사망 사고 (2007.03.06) 14
- 용산 참사 (2009.01.20) 27
-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2011.07.27) 41
-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08.31) 66
- 세월호 참사 (2014.04.16) 68
-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2015.02.02) 84
-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망사고 (2016.05.28) 102
- CJ E&M의 tvN 이한빛PD 사망사건 (2016.10.26) 111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2017.03.31) 123
- 집배노동자 과로사 및 과로자살 (2017.07.06) 141
-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2018.12.10) 150
-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님 산재 사망 사고 (2019.04.10) 168
-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건 (2019.05.15) 178
- 한국마사회 고 문종원 기수 (2019.11.29) 192
-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2020.04.29) 203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2020.05.23) 215

2부 모색과 토론

[발제 1]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상황과 개선 과제 226

오민애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 2]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31

박래군 | 인권재단 사람 소장, 4·16재단 운영위원장

[토론] 참석자들 다함께

참사 기록 개요

2021.04.13

	참사명	발생일	기록자(단체)	당시 대책위 또는 지원단체
1	대구지하철참사	2003.02.18	윤석기 (유가족,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위원장)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2	삼성 백혈병 등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사망 사고	2007.03.06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 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3	용산 참사	2009.01.20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4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2011.07.27	최영도 (민하 아버지,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대책위원회
5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08.31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 참여연대 선임간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연대 (현재는 피해자단체 27개)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	세월호 참사	2014.04.16	윤경희 (단원고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7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2015.02.02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8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망사고	2016.05.28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9	CJ E&M의 tvN 이한빛PD 사망사건	2016.10.26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CJ E&M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1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2017.03.31	허영주 (실종선원 가족,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대한변협
11	집배노동자 과로사 및 과로자살	2017.07.06	허소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선국장)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12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2018.12.10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사)김용균재단 대표) 권미정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13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故 김태규 님 산재 사망 사고	2019.04.10	김도현 (김태규 누나)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4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건	2019.05.15	김장희 (태호 아빠,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팀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15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2019.11.29	오은주 (문중원 기수 부인)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국장)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16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2020.04.29	권미정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이천 한익스프레스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대책위원회
17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2020.05.23	조혜연 ((사)김용균재단 활동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1부

기록과 증언

대구지하철참사 (2003.02.18)

- 참사의 본질과 풀어야 할 과제야 할 과제

기록 : 윤석기

(유가족,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위원장)

1. 대구지하철참사 개요

1) 참사의 발생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하였다. 이날 아침 대구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출발하여 안심역 방향으로 가던 1079호 전동차가 9시 53분경 중앙로역에 막 도착하였다. 이때 지하철에 타고 있던 50대 승객 김○○이 미리 준비하여 가방에 넣어 두었던 휘발유에 1회용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전동차 바닥에 던졌고 이 불은 불을 끄려던 승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전동차 벽면을 타고 번졌다. 놀란 승객들은 마침 열려 있던 전동차 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였으나 전동차에 붙은 불길은 한명의 기관사가 진압하기엔 너무 거세게 타오르다 몇 분 뒤에 반대편에서 진입한 1080호 전동차로 옮겨 붙었다.

2) 피해 규모

두 기관사와 대구지역 거의 모든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동차에 옮겨 붙은 불길은 사그라지지 않고 맹렬히 타올라 1079호 전동차 6량, 1080호 전동차 6량 등 12량 모두를 뼈대만 남기고 모두 불에 타고 더 이상 탈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순간에서야 꺼졌다. 이로 인해 승객과 철도노동자, 청소노동자와 시민 등 192명(확인된 최소 희생자숫자)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와 수백억의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

2. 대구지하철참사의 주요 원인

1) 불쏘시개 전동차를 허용한 잘못된 법과 제도

① ‘지하철(전동차)은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사망자와 부상자의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전동차가 불에 탈 때 내뿜는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후, 전동차가 불타는 열에 의해 희생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뉴스 속보를 통해 전파된 화재 소식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고 일반 시민은 물론 10여년 넘게 지하철에 종사한 노동자들조차도 전동차가 불에 탄다는(그것도 소방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끌 수 없을 정도로 잘 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대도시 시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지하철, 전동차는 철 구조물로 되어 있어 불이 아예 붙지 않거나, 설령 광고전단 등에 불이 붙더라도 전동차는 쉽사리 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②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제작 업체의 안전불감증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각국의 전동차 제작에 관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불에 타지 않는 소재(불연재 不燃材)로 만들 것.

둘째, 불이 쉽게 붙지 않는 재료(난연재 難燃材)로 만들 것.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두 번째를 택하고 있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참사의 인명 피해가 커진 원인은 전동차가 불에 타며 내뿜는 치명적인 유독가스였다. 진짜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불타지 않는 전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리는데 있었다. 이미 국내 업체들은 불타지 않는 전동차를 만들어 해외에 비싼 값에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과 관련 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거나, 위정자들이 무관심한 탓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쏘시개 전동차를 타고 다니다 참사를 겪게 된 것이다.

2) 지자체장과 지하철공사 경영진의 잘못-안전에 대한 안일과 이윤우선

① 최소의 안전 기준은 최대의 위험 초대장

지하철을 건설,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단체장의 의지로 보다 안전한 전동차, 불타지 않는 지하철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우리나라 자치단체장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소 수준의 안전을 선택한 결과로 시민들에게 최대치의 불안과 위험을 강요한 결과가 대구지하철참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웃나라의 동일한 범죄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 다음해인 2004년 홍콩지하철에서 대구와 거의 유사한 방화시도(50대 승객이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전동차 바닥에 던진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홍콩지하철은 불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었기에 불길이 전동차로 번지지 않았고 유독가스를 내뿜지도 않았다. 당연히 사망자도 없었고 질식한 승객도 없었다. 대피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친 가벼운 부상자 10여명이 있었을 뿐이다.

불연재가 아닌 난연재 전동차는 대구지하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에 잘 타며, 단순히 불에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치명적인 맹독가스를 내뿜어 순식간에 사람을 질식사시킬 수 있는 화학무기와 같다.

② 화재에 대비한 내용 자체가 없는 안전 매뉴얼

참사 당시 지하철공사의 안전 매뉴얼에 화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었다. 이것은 당시 경영진들이 전동차의 소재나 재질, 지하철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알려 준다. 또한 관련업계 동향 정보에도 둔감했음을 알 수 있다. 홍콩지하철방화사건 이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홍콩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홍콩지하철의 경우 불연재 전동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지하철이 선로를 운행하고 있을 때 불이 난 경우, 승강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불이 난 경우 등 상황별로 대응 요령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③ 부실한 안전 교육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1079호 기관사의 행동, 1080호 기관사와 사령실 근무자의 대화와 행동을 두고 언론과 시민들은 마녀사냥식 감정적 대응을 하기에 바빴고, 사법기관까지 나서 법리적 접근보다 일반인의 상식에 기댄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지하철 경영진들의 안전을 우습게 아는 자세와 정신에서 기관사와 사령실 직원들의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경영진들에 대한 분노가 우리 유족들에게 있었음을 밝힌다. 당시 경영진들은 화재 대비 안전 매뉴얼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정 안전교육 조차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안전교육은 평상시 반복 숙달을 통하여 위기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경영진들은 소위 '전과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교육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대표로 뽑아 이들에게 약식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배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대표로 뽑힌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리 없고 또 전달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몸으로 익혀야 할 안전교육을 입으로 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④ 1인 승무제

위의 부실한 안전교육, 소위 '전과교육'은 현장인력 부족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뽑지 않고 현장인력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경영 수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1인 승무제, 나아가 무인시스템이 도사리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1079호에 기관사가 2명이었다면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안전인력 확보 대신 인원 감축이 경영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평가다.

3. 대구지하철참사의 주요 상징-현장훼손, 은폐 축소, 책임 전가, 거짓말, 범죄자 매도

1) 현장훼손, 은폐 축소

참사 당일 대구광역시장은 전동차를 현장에서 차량기지로 옮기고 다음날 군 병력 수백 명과 지하철공사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현장을 청소해 버린다. 일부 지역은 물청소까지 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실종자 유족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청소쓰레기로 버려진 야적장에서 희생자 신체 14점과 140여점의 유류품이 발견되어 현장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과 경찰, 대구시, 지하철공사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이심전심으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2) 거짓말, 범죄자 매도

① 추모사업 합의 -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 약속을 바탕으로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2003년 3월부터 유족들은 4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4대과제

1. 희생자문제의 완벽한 해결
2.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3. 철저한 원인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4.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추모사업 추진

당시 국무총리(고건)와 유족대표(희생자대책위원장)의 면담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약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참사의 법적 가해자요 수습의 행정책임자인 대구시와 피해자단체(희생자대책위)의 추모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2003년 3월 31일), 이 후 대구시와 유족단체간 지속된 회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모공원 조성, 희생자 묘역, 위령탑 건립, 재단 설립 등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

② 이면합의 - 대구시의 애원에 마지못해 수용하는 유족단체

2003년 3월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추모공원 조성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문화재 출토라는 변수가 등장하여 지부진하자, 2005년 10월경 대구시는 유족대표(희생자대책위)에 이른바 ‘추모사업 이면합의’를 제안한다.

“추모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하려면 인근 주민들에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으니 아예 대구시 소유 땅에 추모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대신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몇 달간만 대외적으로 추모 사업을 포기하고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한다는 가짜 합의문을 발표하자.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러한 이면합의 제안을 받은 유족단체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였지만 대구시(소방본부)의 간곡한 부탁과 직업정신을 걸고 맹세하는 소방공무원 정○○의 열의에 감복하여 마지못해 이면합의를 수용해 주었다.

③ 천안함 재단과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재단 - 천안함 재단을 해산·해체해 달라 외치는 천안함 유족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추모재단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유족들의 제사라는 틀 속에, 까닭 없이 숨겨진 망자들이 남겨진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라는 염원으로 어제의 울음을 풀어 내일의 웃음을 피어내는 산실이라 생각한다.

2005년 11월에 진행된 추모사업 이면합의에 따라 2008년 12월 29일 추모공원(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개관식, 2009년 10월 27일 희생자 묘역(수목장) 이장, 2009년 12월 29일 추모탑 제막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2010년 초부터 추모재단 설립을 두고 피해자(단체) 간, 피해자(단체)와 대구시가 여러 갈래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재판 결과(2004년~2008년, 원고-부상자, 피고-대구시, 직접이해당사자-유족, 추모재단과 부상자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자신들의 뒤통에서 부상자들을 위하여 배려한 것에 대해 부상자는 감사함을 표한



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피해자인데 왜 부상자는 재단과 상관없는가? 반문하지만 부상자들은 2003년 손해배상 및 국민성금 배분협상 과정에서 추모사업 대신 당장의 금전적 이득을 요구하여 이를 성취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본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 100% 패소를 눈앞에 두고 유족들과 당사자 간 합의를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대구시와 재판부의 부탁에 따라 유족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조정판결에서 재단(설립용 국민성금)과 부상자는 아무 상관없다고 부상자들 스스로 인정한 후, 유족들의 선처를 구하여 수십여 억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다.)를 기준 삼아 당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추모재단 설립이 추진되었다.

추모재단 설립이 본격화 되던 2010년 당시는 마침 천안함 재단이 한 발짝 앞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다. 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단체)와 대구시는 각자의 시선으로 천안함 재단을 받아들인 결과가 대구지하철참사의 비극을 10년 넘게 현재형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 2:18안전문화재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단이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설립한 추모재단이다.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명백히 설립의 주체와 운영의 주체가 있었지만 전문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유족들의 선택으로 소위 지성인으로 대접받던 교수,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들이 재단이사에 포함되어 2010년 12월 24일 추모재단창립총회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단창립총회 직전부터 '천안함 재단' 사례를 들먹이며 "우리(대구시)도 추모재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며 사전에 대구시와 합의한 재단창립총회를 일방적으로 취소, 연기하는 한편, 유족대표에게 물러나라, 재단에서 손 떼라 등등 갖은 협박을 하다가 끝내는 시청 출입 형사들에게 유족대표와 단체를 포함하는 자료를 건네며 형사처벌할 것을 사주하였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해당 정보형사가 직접 유족단체 사무실로 찾아와 백배사죄하면서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의 만행이 드러났다.)

무려 14가지 죄목으로 수십 명의 유족들이 6개월간 경찰로 검찰로 불려 다니며 조사받았으나 13가지 혐의는 무혐의 내사 종결되었고, 대구시의 제안(2005년)에 따라 사전에 대구시와 합의하에 진행(2009년)한 수목장이 줄지에 불법암매장으로 매도되어 유족대표 3명이 형사처벌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나 3년여 재판 끝에 무죄 확정되었다.

④ 천사의 얼굴이거나 사탄의 마음일수도 - 시민사회단체대표

결국 2010년 12월 24일 창립총회를 마친 재단은 대구시의 농간에 가로막혀 표류하다 6년 후에 겨우 출범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직접 재단을 운영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사회를 장악하여 대리 운영하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의도를 충실히 대행하며 재단 이사회를 속이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한을 심어준 당사자는 참사 직후부터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 자랑했던 시민사회단체 대

표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부하직원이 2014년 여름에 느닷없이 연락해서 나에게 했던 말을.

“이미 재단의 무게 중심은 ○○님께 넘어왔다. 무릎 꿇고 백기투항해라. ○○님은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면 보살 피 주지만 아니라 판단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손본다.”

들었던 말이 환청은 아닐까? 싫어 되묻고 또 물었고 같은 말을 다시 들었던 그 해 여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높으신 ○○님이 직접 나에게 했던 이 말을.

“이면합의 존재를 주장하지 마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전부를 취하하라“

“그건 부당거래, 그것도 아주 불량한 부당거래”라며 거부했던 초라한 나의 양심을 탓해 본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권익위의 중재로 진행될 대구시와 재단의 협상대표 자격을 유족대표에서 본인으로 바뀐 이후부터 놀라움과 당황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다 재단이사회 전원 합의로 결정된 최종 협상안을 버리고 대구시가 요구한 모든 것을 수용하여 자격 없는 자, 유족을 범죄자로 매도한 자, 대구시를 대리하는 자 등을 다수 재단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이면합의를 해 놓고는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에겐 허위보고를 하였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고했으나 지금까지 그 합의서를 본 사람이 없었고 결국 수개월이 지난 후 대구시가 별도로 만든 합의서에 서명하여 재단에 제출한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

4. 앞으로의 과제

1) 추모사업의 제자리 찾기

추모공원을 둘러싼 대구시의 거짓말을 바로잡아 대구시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임을, 테마파크 잔디광장에 모셔진 32분의 희생자 유골이 불법암매장이 아니라 대구시가 제안하여 실행한 수목장임을, 안전상징조형물이 추모탑, 위령비임을 대구시 스스로가 공표하도록 하는 일이 유족(단체)의 남은 일 중 하나다.

또한 재단을 강탈하려던 대구시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야합하여 장악한 재단 이사회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유족(단체)의 또 다른 숙제다.

2) 또 다른 피해자 구명과 참사 원인 제대로 밝히기

① 지하철 노동자를 세상 밖으로 -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의 위해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는 일, 유족의 누명을 벗는 일과 더불어 또 다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 생각한다.

참사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기관사와 사령실 근무자들에게 지워진 죄의 굴레는 적절한가? 우리는 죄목이 잘못되었거나 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참사 직후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에 지하철노동자와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할 수 있었다. 안전한 지하철을 바탕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② 진짜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제대로 된 정부라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불타는 지옥철에서 탈출하는 모험을 강제로 시켜선 안 된다.

제대로 된 경영진이라면 종사자들이 시킨대로 하면 문제없이 자신의 삶과 고객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일터를 가꾸어야 한다. 노동자 누구라도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며 '나는 오늘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나는 오늘나의 고객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 나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근본원인이 방화범, 기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화범이 책임질 부분과, 기관사, 사령실 직원이 감당해야 할 무게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걸 제대로 밝혀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 생각한다.

2021.04.07.

안전의 성지! 생명의 도시!! 새로운 대구 건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삼성 백혈병 등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사망 사고 (2007.03.06)

-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투쟁

기록 : 이종란

(노무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사건 개요

2007년 3월 6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이던 황유미 님(23세)이 사망했다. 이미 2006년 8월 같은 라인에서 2인 1조로 같이 일을 했던 동료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였다.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은 딸의 죽음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다 노출된 화학물질과 방사선 때문이라 의심했고, 삼성을 상대로 산재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며 위로금 500만 원으로 무마하려 했다.

황상기 님은 삼성의 부당한 제의를 거절하고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수원에 있는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법률원)에서 황상기 님의 호소를 듣고 대책위 결성을 제안, 2007년 11월 20일 건강한 노동 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9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대책위를 발족하였다.

2008년 대책위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으로 개명하고 백혈병, 뇌종양, 여러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계속된 피해 제보를 집단산재 신청으로 조직하고, 산재 인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을 상대로 계속된 싸움을 이어갔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황유미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첫 산재 인정 판결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다시 3년간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했고(이 과정에서 삼성은 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통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감), 마침내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2021년 3월 현재까지 반올림을 통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노동자

156명이 산재 신청을 하여, 71명이 인정을 받았다. 반올림은 산재인정 투쟁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의 유해 위험한 문제를 노동자나 지역사회에 알리기, 국내의 산재 피해자들 간의 교류,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선 노동자들의 연대 등 활동들을 이어나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은 세계 최고의 안전을 자랑한다며 오랫동안 직업병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반올림에는 암과 직업성 질환 제보가 수백 건에 이르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황상기님,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과 김시녀 어머님 등 피해자들이 앞장서고 노동 시민사회단체들, 시민들의 연대의 힘으로 2018년 7월 삼성전자로부터 중재합의를 끌어냈다. 핵심 요지는 삼성전자가 되도록 많은 피해자가 포괄되도록 보상을 하고(2028년까지 독립적인 지원보상제도 운용),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를 하며, 예방대책을 위해 삼성전자 안전보건공단에 500억 원을 기탁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 안전보건 센터를 건립해서 중소하청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와의 협상은 2018년 마무리되었지만 반올림은 삼성뿐 아니라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공단을 통한 산재 인정이 더욱 쉽도록 제도를 바꾸고, 또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 자녀의 질병 피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도록 하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직업병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황유미 씨는 2003년 10월 속초고등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에 입사, 3라인 디퓨전(확산) 공정 오퍼레이터 직무를 배정받아 하루 8시간씩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시작하였다. 일할 때 더워서 땀이 많이 났다고 했고, 바빠서 실수하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일한 지 1년 8개월만인 2005년 6월 어지럽고 구토가 올라오고 체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 아주대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병가 휴직을 받고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하였고 골수이식(조혈모세포 이식)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가을쯤 병이 재발했다. 재발 전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2006년 7월에 디퓨전 공정에서 함께 2인 1조로 일하던 이숙○님이 같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삼성전자 인사과에서는 속초의 황유미 씨의 집까지 찾아와 백지사직서를 받아 갔다.

3라인은 노후화된 라인으로 수동 작업이 많았다. 황유미는 디퓨전 설비에 웨이퍼를 장착하기에 앞서 세정작업을 했다. 불산, 황산, 불화암모늄 등 여러 화학물질이 담긴 식각 조(수조)에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담갔다 뺐다 하는 세정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반복했다. 오픈 형태의 수조 앞에서 일하면서 고글을 쓰고 앞치마를 입어 산 종류

의 화학물질이 튀어 생기는 화상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호흡용 보호구(방독면)는 지급되지 않았고, 반도체 보호용 얇은 종이 마스크만 착용했을 뿐이다. 방진복 또한 제품 보호구일 뿐,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작업자의 몸을 보호해주는 의복은 아니었다. 따라서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유기화합물의 노출을 막을 수는 없었다.

디퓨전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들이 주되게 하는 작업은 세정작업(전처리) 외에도 800~1,200℃의 초고온 디퓨전 설비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넣고, 고온 작업이 끝나면 식혀서 빼는 작업(언로딩) 하는데, 이러한 고온 작업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들(반응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황유미 씨의 작업 과정에서 노출 가능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방사선도 백혈병을 비롯해 모든 암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인데 황유미 씨가 일한 클린룸에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설비들이 있고 역학조사에서 방사선 노출 정도를 측정해본 결과 1개 지점에서 일반인 노출선량보다 약간 높은 지점이 있었다. 또한 소아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극저주파자기장의 경우 반도체 공정에서 워낙 많은 설비들의 사용이 되는 등 전력소비량이 매우 높고 고에너지원이 많기에 높은 세기로 노출이 된다. 황유미 씨가 일한 디퓨전(확산)공정도 다른 공정보다 극저주파자기장이 더 높은 공정으로 최근 확인이 되었다.

미세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이루어지는 작업공간을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이 클린룸은 제품 기준에서 먼지 없이 깨끗한 공간을 의미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유해한 작업환경이다. 클린룸은 외부공기 유입률이 10~20%로 적고, 내부의 화학물질로 오염된 공기가 재순환하는 공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화학적, 물리적 유해인자가 가득한 곳이 클린룸 인 것이다.

황유미 씨를 비롯해 작업자들은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 유해성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은 사용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공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서류는 삼성 측의 영업비밀 주장으로 어떠한 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3. 관계 당국(또는 책임 있는 회사)의 대응

2007년 6월 유족의 산재 신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는 한차례 보류되었다. 이유는 당시 3라인 현장 측정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인 1조로 일하다 둘 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일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8년 반도체 제조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실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개인별 역학조사와 구분 지어 집단 역학조사라 하였다.

1) 2008년 집단 역학조사

집단 역학조사 결과, 삼성을 비롯해 우리나라 6개 반도체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1.3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해 삼성은 환영했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는 곧바로 백혈병과 작업환경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바로 인과관계와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발병률이 매우 희박한 암(백혈병은 인구 10만 명당 2~4명 걸리는 희귀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오랜 기간을 관찰해야 하는데 2008년의 역학조사는 1997년에서 2005년까지의 발병률을 확인한 것으로 관찰기간이 짧았고, 좀 더 분명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백혈병과 같은 계통의 혈액암인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2008년의 조사에서 발병률이 2~4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보통 노동자 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건강한 집단이기에 암이나 백혈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건강노동자효과'를 고려한다면 반도체 노동자들이 일반인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1.3배 높고, 림프종 발병률이 2~4배 높은 것은 매우 높은 발병률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다. 오로지 백혈병 발병률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만이 주목받았다. 삼성이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황유미 등 5명, 산재 신청 결과

2008년의 집단 역학조사 결과에서의 불분명한 확인 및 개인별 역학조사 결과는 업무 관련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은 소수로 밀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정위원회(당시 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는 황유미 씨를 비롯해 당시 백혈병 집단산재 신청을 제기한 5명 모두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했다. 공단본부 심사, 노동부 재심사청구를 거쳐 (모두 불승인), 2010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적극적으로 산재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공단(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마침내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고 황유미, 고 이숙○ 님의 백혈병 사망을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산재 인정이라는 기적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언론은 산재 피해자가 삼성을 상대로 이겼다고 보도했다.

산재 신청한 지 4년 만에 내려진 기적 같은 산재 인정 판결이 확정되도록 반올림에서는 피해자 가족들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농성을 했다. 제발 항소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항소를 제기했고, 삼성 백혈병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3년을 다투게 되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더는 근로복지공단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황유미, 이숙○ 님의 백혈병 사망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6명 중 1명은 삼성의 방해로 도중에 취하하였고, 나머지 5명 3명은 불인정 되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1) 회사의 태도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마라(황상기 아버님에게는 급기야 10억 이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올림과 멀리하라. 전화번호를 바꿔라, 산재 신청을 취하하라, 소송을 취하하라 등등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집요하게 금전으로 회유하여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방해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 박지연 님이 또다시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이 문제가 언론에 등장하자, 본격 대응에 나섰다. (1) 해외에서 유명한(친기업적 연구를 하기로 유명한) 안전보건 컨설팅회사 ‘인바이런사’를 고용하여 1년간 백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조사를 시키고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2) 각계 언론사 100여 군대를 초빙해 반도체 공장 견학을 시켰다.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 주요 보수언론들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장” 이미지를 기사로 많이 내보냈다. (3) 박지연 님의 유가족을 회유하여 백혈병 소송을 취하시켰다. (4) 공장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올레길을 만들고 외벽을 칼라 페인트로 칠하고 “공장”이나 “사업장” 대신 “나노 캠퍼스”로 불러달라고 이미지 개선사업에 나섰다. (5)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2011년 처음으로 퇴직자암 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다만 보상대상이 협소해 실제 구제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 대신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인 반올림 흠집 내기, 피해자 갈라치기, 언론 동원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등 여러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다. 특히 2014년~2015년 반올림과 삼성전자와의 협상 과정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의 의제로 진행된 교섭)에서,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분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상병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우선 보상으로 회유하거나 반올



립과 피해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피해자들이 포함된 반올림의 실체를 부정하고 분리하는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하였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집단 역학조사 결과

2008년 집단 역학조사를 한 이후, 10년 뒤인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 실태 역학조사(암 질환 중심)” 결과를 다시 내놓았다. 2008년에 지적되었던 짧은 추적 기간, 건강노동자효과의 한계를 인정하고 10년 더 추적 조사를 한 것이다.

반도체 소자 제조업 6개사와 9개 반도체 사업장의 전, 현직노동자 20만 명을 상대로 1998년에서 2015년까지 조사한 결과,

- 『① 백혈병은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사망위험은 유의하게 높았다.
- ② 비호지킨 림프종은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암 발생 및 사망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 ③ 갑상선암, 위암, 유방암, 뇌 및 중추신경계 암, 신장암 등도 위험비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으며,
- ④ 피부의 악성흑색종, 고환암, 췌장암, 주 침샘암, 뼈관절 암, 부신암, 비인두암 등도 사례 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생비가 높게 나타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 ⑤ 암 질환들의 원인은 현재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클린룸 내의 위험 요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 ⑥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림프종과 백혈병 발생 위험증가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나, 클린룸 안의 작업환경 중의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추정한다.
- ⑦ 그밖에 현재 발암성이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 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복합적 효과가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반도체 제조공정의 암 발생 위험의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결론 내렸다.

2) 형사처벌에 대해서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대기업인 사업주들의 비협조, 영업비밀로 유해성 정보의 차단, 첨단산업에 대한 미지의 영역(무엇이 위험한지 밝혀진 게 많지 않다), 의학과 과학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병의 원인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 지금까지 직업병 발생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미지수다.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과거 환경은 점점 더 빨리 변한다. 새 공정과 새 물질이 생겨나고 새 제품들 (반도체에 이어 LCD, led, OLED 등)이 점점 빠르게 출시되고 또 빠르게 소멸해간다. 자본은 산업기술보호법을 국회를 동원해 개악시키고 작업 환경상 문제에 대해 알권리를 막아서기도 한다. 영업비밀 주장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인과관계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복되는 직업성 암과 여러 직업병 문제에 대한 구제책은 요원하다.

3) 산재 판단 기준의 완화와 현재까지의 산재 인정자 수

산재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 적, 자연과학적 엄밀성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봤을 때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정도의 인과관계다.

즉 사회적, 규범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법원의 소 제기로 좀 더 분명해졌다. 특히 2017년 대법원은 이런 점을 분명 하게 밝힌 판결을 내렸다. (2015두3867, 2017.08.29. 선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기존보다는 산재 인정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반올림 에서 제기한 산재 신청만 보더라도 현재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백혈병, 암, 난치성질환 피해자 156명이 산 재 신청을 하여 71명이 인정을 받았다(71명 중 54명이 암 피해자임. 71명 중 공단에서 인정된 분은 48명이며 공단의 불승 인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인정을 받은 분은 모두 23명), 41명은 현재도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 불인정 된 분은 38명이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개선 등)

1)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집단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9년 집단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노동자들의 암 발병 위험이 크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역 학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다.

① 반도체 사업장 내 보건관리 시스템 개선 권고로 근무 현황, 장기근속자 건강실태 파악, 건강 이상 상담 활성화, 클린룸 출입 시간, 교대근무 관리, 화학물질 노출 기록 모니터링, 장기적 누적 보관 등의 사업장 내 보건관리 시스 템 개선 권고.

- ②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 현황조사, 작업환경 관리 방향 제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 예방연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필요
- ③ 일부 암종별 실태조사, 암 외 질환에 대한 질병 감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복합 유해 요인 노출에 의한 건강 이상, 현재 관리대상 이외의 화학적 물리적 요인의 노출 현황과 특성 등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의 건강 영향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권고이다.

2) 삼성전자 등 기업의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2007년 황유미 씨 아버지의 호소로 시작된 반도체 직업병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은 정부를 상대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앞에서 소개),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대책 요구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 중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과,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은 2018년에 제3차 중재합의로 일단락이 되었다.

일련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면 황유미 백혈병 사망에 대해 유가족 황상기 씨의 호소로 반올림 결성 → 피해 제보자 찾기, 집단 산재신청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인정 투쟁 → 법원을 통한 산재 인정 → 삼성전자와의 집단 협상(의제: 공개 사과,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책 마련) → 2015~2018년 삼성본관 앞 농성 → 2018. 7월 중재합의 약속으로 농성 마무리 → 2018. 11월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와 중재판정 이행합의서 서약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 이루어진 중재합의의 요지는 되도록 많은 피해자가 포괄되도록 보상을 하고(2028년까지 독립적인 지원보상제도 운영),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공개 사과를 하며, 예방대책을 위해 삼성전자가 안전보건공단에 500억 원을 기탁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 안전보건 센터를 건립하여 중소하청노동자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전자산업 안전보건 센터의 건립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미래전문기술원 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건설, 서비스 산업까지 아울러서 예방대책을 전문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밑그림을 그렸다. 협약을 체결한 지 3년째 되었지만, 아직 미래전문기술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방대책의 상은 정확하지 않다. 최근에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대해 노동자가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을 고안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반올림과 시민사회는 이 미래전문기술원이 전자산업 등 노동자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일을 수행하도록, 촉진자 또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7. 지원 또는 연대

2007년 처음에는 19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를 결성했고, 2008년부터는 이름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으로 바꿔 불렀다.

반올림은 2011년에 1인 상근 시작, 2013년에 3인 상근자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고(대책위 성격 유지), 2017년부터 4인 상근 체계가 되었다가 2018년 중재합의 이후 대책위 성격(여러 단체의 지원)은 해소하였다. 노동자, 피해당사자, 시민들의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대응 관련해서는 점점 늘어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반올림 지원 노무사 모임(네트워킹 방식의 단체)을 만들었고, 소송대응팀을 구성했다.

초기 소송 대응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민변에는 처음에 산재팀이 없었는데, 반올림 사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산재팀이 생겼고 현재 반올림 소송사건은 민변 산재팀에서 주되게 논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삼성은 언론의 최대 광고주이다. 특히 2016년 촛불 이전의 언론은 왜곡이 심했다. 삼성의 보도자료 베끼기에 급급한 보도도 많았고, 노동자 측에 유리한 것은 보도가 축소되거나 안 되기도 하는 등 삼성의 언론통제는 투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2015년 10월 삼성본관 앞에 농성을 들어가기까지도 언론의 힘이 한몫했다. 언론은 이미 삼성의 주장대로 삼성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보상, 사과 등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거짓 보도를 하였다. 삼성 일방대로 처리되었을 뿐 마무리된 것은 없었다. 박근혜 정권하에 천막조차 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가피하게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언론이 막힌 상황에서 진실을 알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할 유일한 희망이 거점을 정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는 농성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9. 추모 사업 (공공차원 또는 피해자 차원)

매년 3월 6일 고 황유미 씨의 기일을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로 정해 기려왔다. 반올림의 3월 추모 사업은 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투쟁계획을 발표하거나 집중사업을 3월에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그동안 수백 명의 피해당사자 혹은 유가족들이 반올림에 제보해 왔다. 법적 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현재까지 156명이 신청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제기하였고 그중 일부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산재 인정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반올림 투쟁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가족이 죽고, 당사자가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데 국가(정부)는 제대로 규명도 못 하고, 산재 인정도 안 된다면 (그것이 시효의 문제이든, 인과관계 규명의 문제이든) 아무리 정의로운 투쟁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지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8년 중재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중재합의란 반올림과 삼성이 직접교섭대신 중재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합의였고, 그 결과 반올림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하였다. 10년의 문제 제기, 오랜 교섭과 3년의 농성 끝에 겨우 마련된 중재합의이고 거대기업 삼성을 상대로 끌어낸 합의라는 의미가 크다고 하지만, 피해자들로서는 평가가 제각기 다르다. 특히 다양한 암과 생식 질환, 자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보상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질병의 종류, 진단 시기 등에 따라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있다. 무엇보다 직업병 피해가 집중되었던 반도체와 LCD를 넘어 삼성의 다른 전자산업 노동자들에게까지 지원보상을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원대상의 폭을 넓힌 대신 보상수준이 낮은 부분도 비판의 지점이 되고 있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유가족이나 피해당사자이나, 현재 투병 중이냐 완치가 되었냐, 산재가 인정되었냐 아니냐에 따라 건강과 트라우마,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의 회복 정도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누구도 완전한 회복은 없다. 다시는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재해당사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의 기능이 중요한데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보험으로 기능은 매우 부족하다.

- 산재 승인 이후의 문제점 : 산재 인정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암, 난치성질환 통원 기간에 휴업급여가 부지급 된다든지(생계에 큰 타격), 비급여 항목이 요양비 처리가 안 된다든지, 산재보험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산재 요양비 처리가 안 되고 건강보험마저도 산재 영역이라며 적용 안 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업주 눈치 보기를 더 하는 태도가 재해노동자들과 유가족에게 많은 불편함

과 억울함을 초래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제대로 된 사회보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꼭 필요하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 1)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직업성 질환 피해자들의 제보 (뱀치않는 백혈병, 뇌종양, 희소암 등 피해 제보)
- 2) 여전히 쉽지 않은 산재 인정의 문턱 (긴 역학조사 기간,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 3) 산재 승인 후 보험급여 적용의 문제 (잘아플 권리의 부재)
- 4) 일부 피해자의 경우, 2018년 중재합의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

13. 현재의 과제 (참사 관련 또는 피해자들의 과제)

반올림은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인정 투쟁의 확장, 2세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응 및 알권리 보장 투쟁, 산재보험 제도개혁, 전자산업 작은 사업장 권리 찾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공동 대응, 대만 전자산업 피해자 교류 등 사업 등을 2021년 올해 과제로 삼고 있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 1) 2세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2) 산재 인정기준 완화, 신속한 처리
- 3)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문제 개선
- 4)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 바로잡기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연대로 반올림 투쟁이 이만큼 진전했다. 다만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억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바란다. 일단 억울함을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이렇게 단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공감과 위로의 말이 오가면 혼자서는 싸울 엄두가 나지 않던 일도 한 걸음 뚝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내 편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는 생각으로 두려움 떨치고 한 걸음씩 나설 수 있기를.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07년
 - 03월 06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 백혈병 사망
 - 06월 산재 유족급여 신청
 - 07월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진상규명 호소
 - 11월 대책위 (반올림) 결성. 제보자 찾기 운동 시작.
- 2008년
 - 04월 첫 집단산재 신청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 2009년
 - 02월 근로복지공단, 황유미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모두 산재 불승인
- 2010년
 - 01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 측 보조참가)
- 2011년
 - 06월 황유미, 이숙0 백혈병 산재 인정. 나머지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 07월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제기 (삼성전자 측 보조참가 신청)
- 2013년
 - 03월 삼성전자와의 공식적인 협상 시작
- 2014년
 - 08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 1심 유지 (황유미, 이숙0 산재 인정 확정)
- 2015년
 - 07월 삼성전자 일방의 보상대책 발표
 - 10월 반올림, 삼성본관 앞 농성 시작
- 2016년
 - 11~12월 촛불 항쟁 ; 이재용 부회장 국회 청문회 대응. 광장에서의 대응

● 2017년

08월 대법원 희귀질환 판결, 노동부에서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도입발표

● 2018년

07월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합의 약속. 농성 마무리.

11월 중재판정 이행 협약식 (반올림 대표 황상기,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기남)

● 2019년

03월 제14차 집단 산재 신청

05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집단 역학조사 결과 발표

● 2021년

03월 현재까지 156명 산재 신청(인정 71, 불인정 38, 조사 중 47명)

용산참사 (2009.01.20)

기록 :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1. 사건 개요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 지역(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이하 '용산4구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으로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빈 건물을 점거해 농성을 돌입하자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의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철거민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용산참사)이 발생했다.

철거민 세입자들은 사망 사건 발생 전날인 1월 19일 새벽 용산 한강로 변 빈 건물(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¹⁾를 세우고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철거민 세입자 36명(용산4구역 철거민과 같은 처지의 연대 지역 철거민)이 농성에 돌입했고, 경찰은 19일 당일 농성 진입계획을 수립해 20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배치, 50여 명의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과 함께 물대포를 쏘며 진압 작전 개시했다.

성급하고 무리한 과잉 진압 작전의 정점은 점거 농성 개시로부터 불과 25시간 만인 1월 20일 06시 30분 대테러진압을 전담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5개 제대 99명)한 것이었다. 특공대투입을 통한 강제진압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망루 안에서 발화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참사가 발생하였다.

철거 세입자들의 농성과 여섯 명의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용산참사 원인은 대책 없이 진행된 도시 재개발사업과 성급하고 무리한 강제진압에 있다. 서울시는 2002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서울 도심 광역개발 방식인 뉴타운재개발을 시작하면서, 강제 철거 문제 등 서울 곳곳에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 졌고, 2006년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용산통합개발과 한강르네상스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용산 일대의 대규모 빠른 개발을 부추겼다. 참사가 발

1) 방어용 혹은 감시용으로 지어진 가설 또는 상설 건물(위키백과)

생한 용산 4구역은, 통상 4년 정도가 걸린다는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조합설립 이후 고작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빠른 개발은 더 빨리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에 상주하며 이주를 중용한 철거용역들은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강요와 함께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성희롱 등을 일상적으로 자행하였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였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철거 세입자들은, 용역폭력을 피하고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 건물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토끼몰이 하듯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의 강행은, 비극을 불러왔다. 당시 경찰의 조치는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았고, 경찰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 집행 매뉴얼'도 무시하며 조기 검거에만 혈안이 되었다. 특히 안전을 위해 경찰 스스로 계획한 장비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진압을 미루거나 변경하지 않고 강행했으며, 1차 진입 시 투입된 특공대원들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해 보고했지만, 경찰 지휘부는 작전 변경이나 철거민 설득 없이 바로 2차 진입 강행을 명령, 참사가 발생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웠다. 일 년이 다되도록 시신을 냉동고에 모시고 있어, 장례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이에 남아 있는 철거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장례 합의를 개발 조합과 한 후 355일 만에 서러운 장례를 치렀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싸움들을 이어가고 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자, 잘못된 도시 재개발, 성급하고 무리한 과잉진압이 부른 사망 사건이다.

2. 당시 피해 상황

참사 당일 기준 피해 상황은 6명(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경찰 17명, 철거민 6명)이 부상당했다. 철거민 부상자는 골절 등 중부상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으나, 경찰 부상자는 경상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철거민 중 골절 이상의 중상자는 6명이었는데, 2명의 부상은, 몇 해 동안 반복된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남았다. 이들의 부상은 망루 안에 발생한 화재로, 망루 4층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1차 부상을 입었고, 검거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망루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람 중에는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구조되지 못하고 기절한 채 망루 근처에 있었다. 1명은 망루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다친 후에도 불에 탄 망루가 자신 쪽으로 쓰러지려 하자 건물 4층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건물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중부상을 입었다. 망루 4층에서 한 번, 건물 4층에서 또 한 번 뛰어내린 그는 다행히 패널 위에 떨어져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영구장애를 피할 수는 없었다. 망루 농성자 대부분은 옥상에서 연행되었지만,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리 하나가 부러진 부상자가 다리 두 개가 다 부러진 부상자에게 구급차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정부와 서울시, 경찰, 검찰은 ‘사인 간의 문제’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철거 세입자들을 불법 폭도로 몰아세우는데 치중했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정부는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에 의한 사망 사건이라는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의 과격한 불법행위로 돌리며, 참사 당일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를 구성했다.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검찰과 경찰 단독으로 부검을 강행해, 시신 발견 6시간 만에 6구의 부검을 완료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비상식적이었다. 특히 신분증이나 실종자 명단, 여러 정황으로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검 동의 및 부검 참관을 요청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사망 경위에 대한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청와대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덮기 위해, 당시 군포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언론 홍보지침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경찰청홍보실에 보낸 메일에는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미국 드라마 CSI와 비교하라는 등, 쏫불시위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라는 등 구체적인 여론조작 홍보지침을 하달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관련 후속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특공대는 2009년 7월 2일, 대테러 종합전술훈련을 시행하면서 용산참사 상황을 재현하는 훈련을 해, 철거민들을 ‘테러범’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경 진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재개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2009년 12월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2010년 11월 제도개선 토론회를 하는 것 외에, 제도개선을 이루지 못했고, 당시 상가세입자들의 영업손실보상금 3개월분을 4개월분으로 1개월분 증액하는 개선에 그쳤다.

서울시의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유가족들은 서울시 오세훈 시정이 무리한 도시개발의 책임자로서 서울시가 참사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재개발조합과의 “사인 간의 문제”라며 외면했다. 오히려 참사 발생 한 달여 만인 2009년 3월 10일,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참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재개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장례를 치를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부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당시 부시장은 “시간은 돈이다, 철거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해, 오세훈 서울시정의 용산참사 외면과 토건개발 중심의 태도를 명확히 했다.

4. 당시 피해자(유족 등)에 대한 지원(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앞서 언급했던 정부나 서울시 등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무리한 개발의 책임이 있는 재개발조합이나 건설사(삼성물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 특히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는 2009년 3월 10일부터 철거 공사를 강행했고, 조합은 2009년 8월 “용산4구역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신문광고와 책자 형태의 유인물 제작 배포하는 등 철거민 세입자들의 보상을 노린 전문 시위꾼으로 비난하고, 유가족 등에게 공사방해에 대해 약 9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용산참사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한편,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2009년 연내에 문제 해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2009년 9월 말 신임 총리(정운찬)가 임명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후보가 해결에 나설 의지를 보이게 되고, 이후 2009년 11월경부터 서울시가 조합에게 장례를 위한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2009년 12월 31일, 남아 있던 상가세입자 23가구에 대한 임시상가(공사장 함바식당 공동운영권) 제공 및 유가족에 대해 피해배상(조합은 위로금으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장례를 355일 만에 치르게 되었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검찰의 편파·짜맞추기식 수사

유가족 동의 없이 신속한 강제부검을 단행한 검찰은, 참사 발생 20일 만인 2009년 2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주된 원인을 철거민 농성자들이 진입 특공대를 막기 위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망루 내부 아래로 투척해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이유로 농성자 24명을 기소했고, 발화자를 특정할 수 없어 화재 발생 이후 검거된 농성자들에게 공동정범으로 경찰을 죽였다 죄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경찰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진압 작전 지휘 책임자인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이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경찰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결론 내려, 공권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경찰이 철거용역들과 합동 작전을 펼치며 물대포를 쓰고, 남일당 건물 진입도 경찰과 용역이 합동으로 했으며, 철거용역들이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가구를 태우며 불길과 연기를 옥상으로 올려 보내는 불법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과 용역 합동 작전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MBC 피디수첩을 통해 합동 작전이 드러나자 뒷북 수사로 일관했다. 검찰은 수사하기도 전인 초기에,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겠냐”며 언론 인

터뷰를 통해 경찰 무혐의의 속내를 드러냈다. 철거민들의 불법에 대한 응징의 의지는 드높았던 반면 진압 경찰과 철거용역업체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관용을 베푸는 이중적 잣대를 사용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검찰의 수사는 다수인명피해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최대 가해 집단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2)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한편, 참사 발생 직후 법률, 인권단체들이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현장조사, 농성 철거민 심층면담, 남일당 빌딩 주변 상가 및 주민 인터뷰, 각종 언론의 영상 분석, 다량의 사진 분석, 농성 철거민들의 검찰 조사 밀착 입회, 용산4지구 재개발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2009년 2월 23일 진상조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19일 상황이 성급하게 진압에 나설 정도로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농성을 풀기 위한 충분한 설득과 대화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9일 오전 철거용역과 경찰의 진입 시도 시 충돌이 있었을 뿐, 정오부터는 평온한 소강상태로, 남일당 건물 아래에서는 종일 과일 노점상이 장사했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과 검찰은 19일 상황이 온종일 화염병이 난무하는 위험 상황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경이 공개한 영상들은 주로 20일 새벽 경찰특공대가 전격 투입되면서 강하게 대치했던 장면들이었다. 진상조사단은 강경 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3) 불공정한 재판 과정과 정치적 판결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 2009년 2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구속된 철거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하여 배제 결정을 요구하였고, 의도적으로 방해해 무산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심리시간의 최소화와 쟁점 정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로 총 115.5시간이 필요하다며 증인을 61명이나 신청하여, 배심원들을 일정 기간 격리해 집중 심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물리적으로 불가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재판 무산되고 통산 재판으로 전환되자 검찰은 일부 증인을 취소하는 등 의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 약 3,000쪽의 열람·등사를 거부해, 수사기록 은폐 문제로 용산 사건의 재판은 파행을 거듭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자, 변호인들은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도 2009년 4월 14일,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법원 명령도 거부하며 수사기록 3,000쪽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결국, 검사의 수사기록 은닉이

라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존철거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재판을 받아야 했다.

과행을 거듭하던 재판은 결국 수사기록 3,000쪽 없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발화와 화재 참사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다른 발화의 가능성들이 존재했지만, 검찰은 유일한 증거인 경찰특공대원 일부의 진술만으로 화염병으로 단정 지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망루 안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봤다고 초기 진술한 특공대원들도, 재판 중인 신문에서 불 붙은 화염병을 보지 못했고 “적개심을 느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등, 화염병이 화재 원인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되었다. 또한, 1월 19일 상황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만큼 심각한 정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리한 작전이 감행되어 참사가 빚어졌음도 진술을 통해 입증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기소 자체는 핵심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검찰은 징역 5년~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없었고, 발화원인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무너진 만큼, 정치적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이라면 경찰을 죽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무죄가 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로 징역 5~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4~5년이 선고되었다. 양승태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판결도, 철거민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

특히 용산참사는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사건이지만, 재판은 경찰특공대 1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만 다뤘다. 5명의 철거민은 생존한 철거민들과 함께 경찰특공대 1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만 언급되었다. 5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기각되거나, 죽어서도 책임을 뒤집어쓴 원통한 판결이었다.

4)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 25일 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를 의결해,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5일,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 없는 조기 특공대투입과 과잉진압 강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 위반했으며, 당시 진압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로, 검찰 수사 및 여론에 조직적 대응하였고,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한 조직적 여론조작을 해, 경찰법 위반, 직권 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가 성립하며 민주 헌정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이동상황조 운영), 청와대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적극 활용 홍보지침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내진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고, 경찰청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그에 앞서 2017년 12월 12일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 등에 대해 재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들이 현직 고위 검사로 있어,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해 민간 조사위원이 사퇴해 재구성하는 등 과행을 겪었다. 2019년 5월 31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 진압이 건박한 진압 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협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고,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리한 진압 작전의 결정과 졸속으로 작전을 변경, 실행의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사건의 실제 규명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김석기 등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의지가 없거나, 부실했다는 점 역시 밝혀졌다. 그리고 화재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당시 특공대의 망루 내부 촬영 원본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당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부실 수사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 외 용역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고, 영장 없는 강제부검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가족 동의 없이 진행해, 결국 의혹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 모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도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권고에 머물렀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권고 이행에 있어, 경찰은 권고 당시 경찰청장인 민갑룡 청장이, 유가족과 생존철거민들에게 직접 대면 사과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사과도 없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금까지 없다. 그 외 2012년 1월 용산참사 3주기에 보궐선거로 취임한 고 박원순 시장이, 용산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서울시정의 책임자로 공식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사망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의 사과는 전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자들 중 철거민 외에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당시 남일당 건물 3층에 불을 피운 철거용역들뿐이었는데, 1명에게 집행유예를, 4명에게 벌금 각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고작이었다. 오히려 국회의원이 된 진압책임자 김석기는, 경찰과 검찰의 재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용산참사 10주기에 기자회견을 자처해, "지금이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 망언했고, 무리한 개발을 추진한 오세훈 전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용산참사의 본질은 임차상인들의 과도한 폭력"이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철거 세입자들에게 돌리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개선 등)

인권·법률·빈곤 단체들은 용산참사 이후 참사의 근본 원인인 개발사업에서의 재정착 대책을 보장하지 않고 추진되는 강제퇴거를 금지하고자 대안 입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제퇴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한국 정부의 사회권 관련 심사에서 지속해서 '한국의 강제퇴거 실태에 대한 우려와 이를 위한 예방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인권·법률·빈곤 단체들이 2년여 동안, 세미나,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고, 용산참사 3주기를 앞둔 2012년 1월 18일, 정동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33인의 국회의원이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강제퇴거 금지의 목적과 일반 원칙, 특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원칙도 명시해 개발사업 관련 법률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돼, 제정되지

못했다.

그 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개정들이 있었지만, 상가세입자의 손실보상을 1개월분 증액하거나,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등 소폭의 법률 개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세입자들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용역폭력 문제와 관련한 「경비업법」 등의 개정이 있었지만,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실태조사를 거쳐, 2013년부터 강제 철거 예방 대책으로 동절기 철거금지, 사전협의체 조례화, 구역지정 요건 강화(정비비수제 도입), 갈등조정관, 인권침해감시단 등의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강제 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리한 신규 정비구역의 지정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세입자 등 원주민 이주대책과 관련한 상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철거 예방의 실효적 적용에 한계가 많았다.

7. 지원 또는 연대

참사 당일 각계의 단체에서 모여 긴급 상황실을 꾸려, 당일 낮 2시 긴급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살인진압 규탄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저녁에는 참사 현장에서 긴급 촛불 추모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참사 다음 날인 2009년 1월 21일, 1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때까지 1년여 동안 유가족들과 순천향병원 장례식장과 용산참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싸움을 이어갔다.

용산범대위를 중심으로 각계 분야에서 유가족과 철거민들의 싸움에 연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참사 당일부터 기소된 철거민들에 대한 변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범대위 투쟁으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법률 지원도 담당했다. 인권단체들은 법률가들과 함께 초기에 진상조사단을 구성, 사건을 조사해 의혹들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편파 수사를 드러냈고, 2009년 10월 18일에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을 개최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용산참사 현장에 많은 시민이 모일 수 있도록, 각종 공연, 미술품 전시를 1년 동안 지속했고, 전국 순회 전시, 도서발간(‘여기 사람이 있다’ 등), 유가족 돕기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 희망’을 개최하는 등 용산참사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 빈민단체들도 참사 직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를 구성해,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인 잘못된 개발정책을 폭로하는 집회, 용역폭력 증언대회, 공동연대투쟁 등을 전개했다.

정치권에서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으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도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천주교,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방어하고 신자들을 참사 현장에 모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9년 1월 31일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천주교계와 신자들이 현장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2009년 3월 28일부터는 문정현 신부님이 남일

당 현장에서 상주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생명평화미사를 드리며, 용산참사 현장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학습장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

용산범대위는 2010년 1월 9일, 355일 만에 장례를 치르며, 진상규명 등의 과제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대책위 구성을 준비했으면, 2010년 3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가족들 및 생존철거민들은 별도의 당사자 대책위를 구성하지 않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참사 당일 아침 주요 공중파 뉴스는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참사 발생”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농성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진압은 이례적이었기에,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오후부터 보도 방향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을 행위자로 등장시켜 철거민, 희생자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배후세력에 대한 보도를 확대 재 생산하고 수사의 초점을 배후세력으로 돌려버리는 보도 양태를 보였다. 방송도 MBC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반면, KBS는 경찰 진압의 문제를 시위대의 과격성과 함께 거론해 양비론적 시각을 보였으며, 과잉진압 문제는 간단하게 다룬 반면, 외부세력 배후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해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프레임 그대로였다.

검찰이 보였던 것처럼, 언론도 화제의 원인에만 집착해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개발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세입자들이 땅투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왜 세입자들이 전철연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초점은 없고 전철연의 개입만을 부각시켜, 외부세력 개입 프레임을 덧씌웠다. 뿐만 아니라 용산 4구역의 대표 컨소시엄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문제를 다루는 보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언론의 광고수익 중 부동산 광고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후 청와대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덮는 여론조작 지침과 경찰이 제공한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내용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 보도의 양태를 보였다. 유가족들은 취재기자들에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곤 했는데, 일선 현장 기자들은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올리지만 데스크에서 잘린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한다며 취재하곤 했다.

9. 추모사업 (공공차원 또는 피해자 차원)

용산범대위가 전환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참사가 발

생한 1월 20일을 전후로 추모주간을 설정해, 다양한 기억과 추모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기일에는 다섯 철거민들의 묘소가 있는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추모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장례 협상 당시 참사 현장에 추모비를 조성하는 것을 서울시와 조합에 제시하며 협상했으나 끝내 거부해, 아파트 단지 조성 시 공원부지에 추모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었다. 그러나 용산4구역 공사가 부동산 경기 하락 및 조합원과 시공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장례를 치르기도 7년 동안 허허벌판으로 철거만 하고 공사가 지연되어, 합의 이행이 늦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조합 임원진과 시공사가 교체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원이 조정되지 않는 형태로 변경되어 추모 수목 식재에 난관이 생겼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참사 6주기인 2015년 1월 20일에,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한 백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을 발간하고, 서울시청 로비에서 용산참사 6주기 추모 전시를 진행하면서, 추모 수목을 대신해 향후 참사 현장에 조성되는 공공복합건물 1층에 용산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2021년 1월에 참사 현장에 ‘용산도시기억관’을 조성하면서 ‘용산참사(기억과 성찰)기억관’을 개관했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유가족과 생존철거민들은 여전히 2009년 1월 20일 추운 겨울에 갇혀 있다고 한다. 10년 만에 경찰과 검찰의 재조사가 있었지만, 수사·기소의 권한 없는 조사의 한계와 공소시효 등으로, 일부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그쳤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경 차원의 과거사 재조사나, 서울시 차원의 백서 발간 및 사과 등으로, ‘도심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벗은 것 같은 위안도 있고, 많은 시민이 10여 년 동안 함께 해 줘서 이만큼 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미완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책임자 처벌도 없이, 오히려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진상규명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잊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도 한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참사 발생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매년 1월이 다가올수록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참사 발생 10년이 지난 2019년 6월 23일, 망루농성 생존철거민 김○○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생지옥과 같았던 망루 불구덩이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의 트라우마가 심한데, 김○○은 그중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었기에 더 충격을 줬다. 그 역시 평소 살아남은 것에, 사망한 이웃들에게 죄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특히 이 시기는 경찰과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자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가해자 검색기가 “지금이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부정한 이후 몇 개월 후였다. 10년 만에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진상조사가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헛된 기대가, 10년이 지나도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종결된 결과가 그를 죽였다. 그 외에도 지금도 생존철거민 중 출소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술로 지내며 지금까지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피해자도 있다.

특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개인의 트라우마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으로도 나타났다. 용산4구역 유가족과 연대 지역 유가족, 유가족과 생존자, 유가족과 4구역 철거 세입자, 농성 가담 세입자와 그렇지 않았던 세입자 간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참사 발생 수년이 지나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참사 발생 이후 355일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은, 유가족과 4구역 철거민들, 그리고 대책위 활동가들, 천주교 신부님들이 동고동락하며 지냈다. 피해자들에게는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함께 의지하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장례 이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유가족들은 이전의 삶이 파괴된 상태에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더욱 괴로운 시간이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유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트라우마 치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은커녕 당시 책임자 김석기, 오세훈 등이 승승장구하며 tv에도 자주 등장하고,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모독하고 있는 현실에 더욱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차라리 모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어서 더욱 괴로움을 호소한다.

13. 현재의 과제

경찰과 검찰의 과거사 조사 결과는 진상규명의 첫 실마리를 연 것에 불과하다.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조직의 사건 은폐·조작 혐의가 발견된 만큼, 권한 있는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 이명박, 김석기, 오세훈, 수사 검사 등 당시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책임자 처벌 없는 진상규명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또한,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재개발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과 개선도, 토건과 부동산 중심의 사회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자체 개혁 주문에 따른 셀프조사 성격의 지난 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화해,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법안도 재·개정해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12년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잊힐 수도 있다. 2009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켓 문구 중에는 “용산 참사, 어제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내일”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용산참사를 잊는 순간, 그 참사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일이 될 수 있다. 용산참사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남겨두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흐른다면 먹먹해 질 수 있다. 완전히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잊을 수 없기에, 먹먹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우리 피해자들이 있는 한, 우리 곁에는 함께 해주는 이들이 늘 있다. 우리가 버티는 힘이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09년

01월 19일 오전 3시00분 용산4구역 철거 세입자 등 남일당 건물 망루 농성 돌입

01월 19일 오전 5시30분 경찰 투입 및 대치 시작

01월 19일 오전 8시30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주재 회의 (경찰특공대 투입 결정)

01월 19일 오전 9시00분 경찰특공대 2개 제대 등 출동지시 (9시34분 현장 도착)

01월 19일 오전 10시30분 철거용역 남일당 건물 진입 후 3층 계단에서 방화 및 옥상 진입 시도, 세입자 농성자들

최초 화염병 투척

- 01월 19일 오전 12시30분 김수정 서울경찰차장 주재 현장대책회의 (20일 특공대 진압작전 결정)
- 01월 19일 오후 7시00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주재 대책회의 (세부계획 및 특공대투입 시간 결정)
- 01월 20일 오전 5시30분 현장에서 진압 작전계획 변경됨 (크레인 1대, 사다리차 등이 확보되지 못함)
- 01월 20일 오전 6시30분 경찰특공대 진압 작전 시작
- 01월 20일 오전 7시06분 망루 1차 화재, 경찰특공대 일시 철수
- 01월 20일 오전 7시18분 특공대 2차 진입
- 01월 20일 오전 7시25분 망루 전체 대형 화재 발생
- 01월 20일 오전 9시38분 철거 세입자 5명, 경찰특공대 1명 시신 발견
- 01월 20일 오후 2시00분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사현장 긴급규탄 기자회견 및 현장 임시 분향소 설치
- 01월 20일 오후 3시00분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1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확정)
- 01월 20일 오후 3시50분 국과수 부검 실시 및 완료
- 01월 20일~ 용산범대위 주최 추모대회 등 각종 진상규명 투쟁 전개
- 02월 09일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발표, 경찰 무혐의, 철거민 기소 (철거민 7명 구속 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 10월 28일 용산 1심 재판 선고, 망루 생존철거민에 전원 유죄 5~6년 형 선고
- 12월 30일 총리 정책 개선 담은 유감 표명 담화문 발표. 장례 협상 타결 수용

● 2010년

- 01월 09일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서울역광장), 노제 (용산), 마석모란공원 안치
- 01월 25일 1주기 추모제(20일)를 끝내고, 유가족, 철거민, 범대위 참사현장 철수
- 03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 05월 31일 용산 향소심, 망루 생존철거민에 유죄 판결 4~5년 선고
- 06월 24일 헌법재판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결정
- 09월 28일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10월 20일 고법, 용산4구역 관리처분 무효 판결
- 11월 11일 대법원, 망루 생존철거민 7명에 원심(4~5년) 확정판결

● 2012년

- 01월 18일 용산참사 3주기 추모콘서트, 박원순 시장 참석. 시정 책임자로서 유족에 공식 사과.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대책 마련 약속
- 01월 18일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국회발의(대표발의 정동영)
- 04월 07일 용산참사 유가족, 김석기 경주총선 출마 선거사무소 앞 천막농성 돌입. 낙선운동
- 10월 26일 구속자 8명 중 2명, 3년 9개월 만에 가석방 출소

● 2013년

01월 31일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유가족 이충연 등 구속 철거민 5명 특별사면

10월 07일 용산 진압책임자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 유가족 출근저지 농성투쟁 돌입

● 2018년

09월 05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발표. 경찰 과잉진압 인정

● 2019년

05월 31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발표. 경찰 과잉진압 및 검찰 부실수사 인정

● 2021년

01월 20일 용산참사 12주기 추모제 (마석 모란공원)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학생 산사태 참사 (2011.07.27)

기록 : 최영도

(유가족,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1. 사건 개요

2011년 7월 27일, 춘천 마적산 산사태로 13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그 중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명은 인하대 학교 학생들이었다. 19살에서 26살까지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발명캠프를 진행하고 숙소(민박집)에서 자던 중 산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다.

사고 직후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인천시장, 인하대 총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과 행정책임자들이 방문하였고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 억울함이 없도록 원인을 밝히라고, 유족들은 이들이 한 약속을 믿고 인하대가 제안하는 대로 합동장례식을 치렀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행정당국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5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참사 직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이 이야기 하던 정치가, 행정가들이 모른 척 했습니다. 당시는 도움을 청할 사회단체도 없었다. 민변과 환경단체 등을 찾아가 보았으나 '산사태'를 인재에 의한 참사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경황없고 슬픔에 젖은 부모들이 인하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아이디어뱅크,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모여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방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유족들은 사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 조사를 하여 산사태 원인을 밝혀냈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그곳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으로 그야말로 위험지역이었다. 그런 곳에 배수로도 안 만

들고 물길을 막아 민박집을 지어 영업했다. 그리고 전날 밤부터 침수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어 담당 공무원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춘천시의 책임이 명백하다.

2) 군인들이 훈련을 위해 파놓은 산 정상에 반공호가 물을 버금은 폭탄이 되었다.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다. 산 관리 책임은 강원도에 있으며 국방부 또한 책임이 있다.

3) 1차 산사태 후 26분 후 2차 산사태가 일어났다. 동일 민박집에 함께 묵었던 8명은 1차 산사태 후 이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대피해 살 수 있었다. 민박집 운영에 관한 법대로 주인이 그곳에 있었다면 마을 사람들의 비상연락망을 통해 모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박집 주인은 법을 어기고 따로 집을 마련해 살면서 1차 산사태 후 대피하라는 주민들의 비상연락을 받고도 숙소에 알리지 않았다.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학점제도로 운영하면서 인하대학교는 학생 단체보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인하대학교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져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건축을 하고 숙박영업을 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도 대비도 하지 않았던 행정 당국과 관련자들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법대로 합시다. 법으로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간당 내린 비의 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하는 법은 피해자 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행정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다. 유족들은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사회적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춘천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6개월 이상 이어갔고 주말마다 춘천시내에서 집회를 했다. 선전물을 만들어 춘천시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집집마다 전달했다. 천전리 산사태는 인재이며 춘천시장이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선전했다. 춘천시민들은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믿기 시작했다.

이즈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다.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편지쓰기, 자료 보내기, 보좌관 면담 등으로 사전 준비를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춘천시장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의원까지 나서 춘천시장을 질타하고, 시장이 태도로 보아 춘천시는 답을 내놓을 의지가 전혀 없으니 강원도가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강원도와 교섭이 시작되었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있었던 참사 관련 자료들을 찾아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었다. 씨랜드, 인천 콜라텍 참사, 역새축제 참사, 부산 오락실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결국 1년 6개월 만에 강원도 조례 제정으로 투쟁은 마무리되었다. 조례 내용은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남은 것이 있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춘천시장. 유족들은 500원 소송을 걸었다. 돈 바란다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춘천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의 화해로 춘천시장은 강원도 방송사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13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다. 모두 외지인이었다. 그리고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명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중중부상자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을 네 번이나 할 정도였다.

첨부 1, 발생원인은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별도 첨부함.

유족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조사팀을 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임. 이 보고서를 들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춘천시 선전전과 여론전, 국정감사 대응, 강원도와의 협의 등에 활용하였음.

3. 관계 당국의 대응

1) 119소방관을 중심으로 신복읍 부녀회까지 총동원되어 구조와 수습에 나섰다. 실종자 없이 희생자 시신을 찾을 수 있었고 하루 만에 진흙더미를 치웠다.

2) 이 해 서울, 동두천 등 전국적으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했고 정부는 긴급재난기금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신복읍 산사태 현장은 도로정비, 배수로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다.

3) 문제는 희생자들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조치였다는 것에 있다. 민박집 주인은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하여 보상받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또 다른 민박집을 지어 영업을 시작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1) 없었음

2) 인하대의 장례 지원과 위로금 모금 / (추후 투쟁결과) 강원도 조례 제정과 위로금

; 책임을 인정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도의적 위로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가해자의 사과 여부: 민박집 주인은 사과하지 않았고 춘천시장은 법원 화해결정에 따라 사과했지만 그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 당의 요구에 밀려 한 사과였다.

2) 진상조사를 방해한 요소들: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은 허구였다. 상황을 모면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 가해자가 결합된 진상조사 기구는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힐 수 없다.

3) 조사보고서나 백서 여부: 유족들이 조사해 발표한 조사보고서가 있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유족들의 요구로 인하대학교는 전교생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동아리 지원, 부상자 지원을 했다. 강원도는 마적산에 재발 방지를 위해 방공포대 철거, 사방공사와 전석수로 설치, 신북읍 119안전센터 건립, 강원도내 190개소의 재해정보시스템 증설 등을 합의하여 재발 방지책을 수립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이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를 하였다. 2013년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재난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이들의 희생과 유족들의 투쟁이 제도를 마련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7. 지원 또는 연대

- 1) 당시는 참사에 대한 인식이 낮았음. 민변, 환경단체, 참여연대 찾아가 보았으나 도움을 받기 어려웠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정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유족들이 논의하여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 2) 춘천시청 공무원 해고자들, 강원도 민주노총 지역본부, 강원도 시민단체, 지역 시민신문 관련자들이 함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3) 참사 피해자들이 모두 외지인이라 지역 정보가 부족했다. 춘천시청 공무원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지역주민을 만나 참사 당일 이야기, 신북읍 산사태 경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 선행만을 보도할 뿐 사건의 진상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는 없었다.

9. 추모 사업

- 1) 강원도와 협의하여 공적비를 봉사 활동 했던 상천초등학교에 건립했다.



2) 춘천봉사활동인하대희생자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상천초 장학금 지급 등 활동을 하고 있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피해자 스스로 참사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 받고 정치적 사회적 책임과 응징을 하였기에 초기부터 방향성 설정을 잘하고 실천하며 마무리를 잘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유족들이 매 사안 토론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건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큰 분란 없이 대책위를 운영할 수 있었다.

기념사업회는 [네 꿈을 기억할게]를 발간했다. 이 책은 대책위 활동과 아이들에 관한 기록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 참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유족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책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타 여러 참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책을 본 이들이 연락을 해 온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우리나라에도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관련 단체가 만들어져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기념사업회를 동아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족들은 2개월에 한 번 친목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참사 초기 어떻게 싸워 나갈 지에 대한 방향설정의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의 어려움과 지지체장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관변의 행동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극복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13. 현재의 과제

인하대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기념사업회의 활동이 원활히 잘 운영되는 것이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참사가 발생하였을 시 참사와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 정부 담당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모든 참사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법으로 해결하지는 말을 믿거나 정치인이나 정부, 지자체를 믿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겼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법을 잘못 활용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본인들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정한 내용을 가지고 싸우며 선전하고 시민이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싸우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길이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1년

07월 25일 인하대학교 ‘아이디어뱅크’ 회원 35명이 발명캠프 개최(상천초교)를 위해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 옴

07월 26일(화) 1일차 발명캠프를 진행하고 숙소인 춘천민박(천전리 38-33번지)으로 돌아옴. 26일(화) 저녁

7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07월 27일 새벽 0시 8분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뒷샘밭 시내버스 종점 인근 일명 떡갈봉(해발 350m)의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1차 산사태 발생

07월 27일 0시 21분경 2차 산사태가 나서 학생들이 묵던 춘천민박 2개동, 춘천여행 1개동이 완파됨. 이로 인해 인하대생 10명을 포함하여 1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함

07월 29일(금) 오전 유족 등 60여명이 춘천시장(이광준) 향의 방문. 협의 결과 유가족과 춘천시는 추모비를 상천초교에 설치하고 사고조사위원회(춘천시와 유족 각각 3인씩 추천) 구성 합의. 보상비에 대한 선지급 후처리 요구에 대해 춘천시는 인천시가 연평도 포격사격으로 민간인 사망 시 처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의사자 신청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장례비도 중앙대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덧붙임

07월 31일(일) 오전 9시 8인 합동 장례(학교장) 영결식 거행

08월 13일 제1차 전체 유족총회를 영등포에서 개최함

- ▲ 대책위 명칭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약칭 대책위)
- ▲ 학교에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기로 함.
- ▲ 활동자금 마련에 대해 논의함.

08월 09일(화) 2시 조사위원회 간담회, 참관 및 유족 측 입장 전달

08월 19일 조사를 위한 전문용역업체 선정 관련하여 기술부문 조사위원들이 합의하여 과업지시서(과업 및 예산)를 작성하여 춘천시에 제출하자, 춘천시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08월 24일(수) 오전 10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조사위원회가 개최됨

08월 24일 유족들 기자회견과 춘천시장 항의방문

09월 06일 발명진흥회 대표를 방문하여 발명캠프 주최 측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사과, 이후 유사 행사에 대한 개선(재정 지원 확대 및 사후 책임과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함. 이후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음.

09월 08일(목) 오후 2시 춘천시청 본관 앞에서 유가족들과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7.27 춘천 참사 사고조사위원회 활동 정지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그 자리에서 항의농성과 피켓팅에 들어감

09월 09일 농성 돌입 후 09월 09일(금) 11시 3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긴급하게 소집됨. 사고조사위원회 6인 전원이 춘천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사고조사위원회가 해체됨

09월 13일 49재 지냄

08월 25일~09월 16일 유족들이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규명 작업 진행

- 조사 작업
 - 춘천 사고현장 조사 및 지역 주민 구술 작업 진행
 - 봉사활동 학생 대상 구술 및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면접
 -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 회장(임종인) 면담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09월 21일(수)부터 춘천시청 앞 일인시위 돌입.

09월 24일(토) 춘천시내(남춘천역에서 춘천시청) 상여 투쟁 및 선전전
유족, 지인, 인하대 학생 등 150여명 참석, 노인회 등 이광준 지지세력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시청에 동·반장들을 동원하여 유족들에게 시비를 거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함

09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동일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중앙운영위)에서 설명회 개최

09월 26일 26일자 춘천시보에 왜곡 허위 기사 게재

10월 17일 춘천시청 앞 사진전 시작. 주말에는 명동에서 사진전을 열고 춘천 전 지역 유인물 배포

09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국정감사에 이광준 춘천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1시간이 넘는 질의와 질타가 이어짐. 이광준 시장은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고 증인석으로 불러 나오기도 했으나, 태도의 변화가 없자 의원들은 강원도지사에게 해결하라고 종용하고 국정감사가 마무리됨.

09월 30일 09:30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지역제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10월 04일(화) 강원도지사에게 강원지역제시민사회단체 요구서한 전달

10월 07일 대책위와 강원도지사가 만났으나, 당사자인 춘천시장이 말을 듣지 않아 실질적으로 풀기 어려움을 유족들에게 토로함.

10월 17일 강원도와 실무협의체(도 국장급 3인, 대책위 3인)를 구성하여 1차 회의, 10월 25일 14시 2차 회의 진행 함
- 유족 요구 중 재발방지 대책은 배수로 규정 신설, 방공포대와 군사도로 원상회복, 불법적인 민박영업에 대한 제재이며, 유가족 보상은 부상자를 포함하여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과 참사에 대한 위로금 지급임.

- 인하대학교에는 1) 학생지도 책임기관으로서의 유감 표명 2) 전체 인하대학교 학생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3) 동아리 활동지원 4) 춘천시와의 대응에 있어 인하대의 지원 5) 부상자들의 후유증 치료와 특별장학금 지급을 요구하여 협의를 진행, 인하대학교 전체학생에 대한 보험 적용, 동아리지원, 부상자 치료와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약속을 받아 부상자문제, 추모비 문안 등 다소 문제가 있으나 학교와 대화를 통해 정리하기로 함

11월 17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를 방문하여 특별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강원도와 협의 진행함. 대책위는 강원도지사의 의사상자법 개정 작업이 법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의사상자로 지정되기가 어렵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도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위임조례에 대한 부분도 현행법 상 어렵다는 결론을 낸. 이런 과정에서 특별조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강원도에 정식으로 요구함. 특별조례에 대한 여론 확산 및 내부의 투쟁 집중도 강화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전국적인 서명 작업을 시작함

11월 26일(토) 춘천 가두서명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춘천시민 대상의 서명 작업. 상가방문 및 명동 거리 서명 작업

서명 작업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4만 7천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도지사와 면담이 진행된 12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조례의 당위성을 설명함. 09월 30일 국정감사 이후 최대의 기자들이 참석하여 전국에 기사화 되었고, 도지사와 만나 '특별 조례와 모금을 병행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여 연내 해결 의지를 갖고 하기로 함

12월 17일 대책위는 일인시위, 회의, 서명 작업 등 결정사항 미이행 및 의무해태를 지속한 성동모 씨를 제명 조치함

12월 22일 자원봉사 희생자 10명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특별상 수상함

● 2012년

01월 05일 도지사와의 면담 이후에도 강원도 자치행정과에게 왜곡된 자료를 외부에 유포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 보여, 강원도에 항의하고 도지사가 책임질 것을 촉구함.
- 01월 05일 17시** 도지사와 강원도 책임자들과의 면담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특별조례+모금'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구체적 협의를 도지사가 주문함.
- 01월 29일** 매주 일요일 이광준 시장이 다니는 춘천중앙교회 앞 집회를 진행함
- 02월 24일 14시** 인하대학교 졸업식 명예졸업장 수여식
- 02월 24일 15시 30분** 인하대학교 추모비 제막식
- 02월 15일~26일** 인하대학교 신입생 O/T 새내기 대상 설명회
- 03월 28일** 도의회 기획행정위 김용주 의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희생자 등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03월 31일** 춘천시청 앞 약속이행 촉구 정리집회 진행, 학생 등 200여명 참석
- 04월 25일** 조례안 도의회 통과
- 05월 11일** 조례 공포
- 05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조례에 의한 위로금 예산 통과)
- 05월 02일~06월 30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서 모금 전개
- 05월 20일** 대책위 북한산 산행 및 준비위원회 결성식(삼각산 재미난 학교)
- 06월 09일 11시**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준비위원 전체회의(1주기 추모식 계획 확정)
- 07월 03일** 강원도에서 조례에 의한 위로금 지급
- 07월 18일** 도지사 인사 및 적십자사 성금 전달식
- 07월 27일** 1주기 추모식 및 기념사업회 창립식

* 첨부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진상조사보고서**

2011. 9. 26.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학교 희생자 가족대책위조사팀



차 례

1. 사건 개요
2. 인하대 발명동아리(아이디어뱅크) 연혁 및 활동
3. 2011년도 발명 캠프 추진
4. 인하대학교 동아리 현황 및 지원제도
5. 자원봉사제도의 현황 및 학교의 장려제도
6. 춘천에서의 참사 경위
7. 산사태지역의 토양 및 민박집 상황
8. 천전리 참사의 원인
9. 현 문제점
10. 검토 의견

1. 사건 개요

인하대학교 발명 동아리 '아이디어뱅크'는 매년 하던 '발명캠프'를 금년에는 춘천 상천초교에서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개최함. 아이디어뱅크의 발명캠프는 전국발명동아리연합회(회장 임종인)의 기획(6개 대학 5개 캠프)으로 발명진흥회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진행함. 인하대학교가 버스를 지원하여 2011년 7월 25일 11시 인하대학교 정석도서관 앞에서 출발함. 35명이 참여함.

26일 캠프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숙소로 이동함. 저녁 8시경부터 집중호우가 내림. 27일(수) 새벽 0시 8분 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윗샘밭 시내버스 종점 인근 일명 떡갈봉(해발 50m)의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산 아래에 있는 닭갈비집(2층)과 인근 상가 건물 1개 등을 덮침.

0시 21분경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능선에서 두 번째 산사태가 나면서 바로 아래 춘천민박(2층 건물), 춘천민박, 춘천여행 건물 3개동이 완파됨. 춘천민박(2층 건물)에 묵던 인하대학교 학생 10명을 포함하여 1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함.

- 사망자

▲김유신(20·신소재공학부/1) ▲최용규(21·생명화학공학부/2) ▲이경철(20·전기전자공학부/1) ▲이민성(26·섬유공학/4) ▲이정희(25·컴퓨터공학/3) ▲최민하(19·여·생활과학부/1) ▲김재현(26·기계공학/3) ▲성명준(20·생명화학공학부/1) ▲신슬기(22·여·생활과학부/1) ▲김유라(20·여·생활과학부/1) ▲이은영(39·여·1차 참사) ▲김상우(42·춘천여행) ▲박진영(43·여·춘천여행)

- 부상자

▲김현빈(20·중상) ▲신태진(23·중상) ▲박미리(19·여·중상)▲박기영(26·중상) ▲이효성(19·중상) ▲양창모(23·중상) ▲김인철(24·경상) ▲김동찬(20·경상) ▲박희용(23·경상) ▲김동현(26·중상) ▲신주영(19·여·경상) ▲엄기성(21·경상) ▲임기돈(21·경상) ▲강상구(21·경상) ▲홍진호(25·경상) ▲길혜준(20·여·경상) ▲정진아(20·여·경상) ▲이승훈(18·경상) ▲이희주(23·경상) ▲곽진(20·경상) ▲김중수(나이미상·경상) ▲양순자(나이미상·여·경상) ▲김기분(52·여·경상) ▲강순자(56·여·경상) ▲이춘자(52·여·경상)

2. 인하대 발명동아리(아이디어뱅크) 연혁 및 활동

발명지식을 함양을 위해 기계과 소모임으로 출발하여 1987년 10월 3일에 창립함. 현재 23번째 기수로 졸업생을 포함 490여명으로 이루어진 인하대학교 중앙동아리임. 현재 회원 수는 80명 정도임.

창립 이후부터 배운 과학지식을 초등학생과 소외계층에 나누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매년 발명캠프를 개최함. 대학발명전, 대한민국학생발명전 수상작 전시회, 대학발명워크숍 등에 참가



함. 또한 1994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대학창의발명대회 국무총리상, 특허청상등을 포함하여 매년 2~3회 이상 수상하고 최우수동아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주최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함.

3. 2011년도 발명 캠프 추진

1) 이전 발명캠프

창립 이후 '94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온 행사로 아이디어뱅크의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임. 재원은 개인 각출, 주점, 후원을 통해 조달하였고, 최근 발명진흥회가 주로 후원을 해 주었음.

2) 2011년 발명캠프 기획 및 준비

전발련에서 주도하여 발명진흥회의 지원을 받게 됨. 참가한 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 송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금오공대, 인하대학교임. 발명진흥회는 발명캠프 예산이 없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명캠프를 지원함. 발명진흥회가 지원한 것은 식비 4,000원/식,인 총 160만원, 단체티(인당 3장, 64만원), 대회 현수막(27만원), X밴드(18만원) 총 269만원이었음. 숙박비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음. 대상학교 선정은 각 동아리가 알아서 했으며, 아이디어뱅크의 경우 강원도지역 초등학교에 담당교수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를 선정함.

- 타 대학 동아리 발명캠프 진행사항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송실대	성대·숙대	금오공대
동아리명	발명개발연구회	바람개비	기상천외, 영똥한사람들	거북선 신화
지역	경기도 양평	충북 영동	경기 지역아동센터	경북 경주
대상학교	양동초교	황간초교	제부도	초등학교
인원	50명	50명	60명	60명
숙박	학교	학교	펜션	학교

- 버스 지원 및 숙소 문제 : 학교가 버스를 지원해 줘, 먹는 것과 실험용 기자재 구입비만 있으면 되었지만, 상천초교에 숙박의사를 타진한 결과 보안이 세콤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 숙박시 당직교사 등 비용이 발생되어 거절하였다고 함. 별도의 숙소로 춘천민박을 정함.

3) 발명캠프 참여 현황 및 동기 : 발명캠프 참가자들은 1학년이 14명, 2학년 5명, 3학년이상

휴학자 등이 16명이었음. 고학년들은 캠프에 자발적인 참석이었음. 1학년의 경우 선배들의 권유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참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생활과 학부의 경우 학점과 직결되어 이왕이면 좋은 일도 하고 학점도 따겠다는 생각도 있었음.

4) 발명캠프 참여 혜택 : 대상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시간 인증서'를 발급함.

4. 인하대학교 동아리 현황 및 지원제도

1) 인하대학교 동아리 현황 및 동아리연합회

인하대학교 중앙동아리는 10개 분과 99개로 공연분과 16개, 종교 13개, 봉사 12개, 연구 10개 순임. 아이디어뱅크는 연구분과에 속해 있고, 그 외 직할 동아리 2개, 8개 단과대 품물패 8개가 활동하고 있음. 중앙동아리 99개가 동아리연합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학생회, 생활도서관과 함께 5대 학생자치기구로 활동 중임.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들의 연합체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와 동아리들의 창구역할을 하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2) 동아리 등록 절차

동아리는 등록 또는 재등록 시 동아리소개서(활동내역과 목적), 20인 이상 서명한 회원 명단(단 3개 단과대학 이상), 동아리 회칙, 동아리 1년 사업계획서(평가서 포함)를 구비하여 학교측에 1부, 동아리연합회에 1부를 제출함.

동연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등록 요건을 심의하여 분과를 배정함. 가등록 동아리로 상정 후 최소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심의하여 정식등록 동아리가 될 수 있음.

지도교수는 필수사항이 아니나, 아이디어뱅크의 경우 각종 발명대회에 참여하려면 지도교수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여 지도교수가 없이는 동아리 운영이 어려움.

3)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연합회는 매년 학교와 동아리발전협약서를 체결함. 동아리발전협약서는 동아리연합회와 학생지원처장(학교측)이 협약의 주체가 되며, 동아리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룸.

동아리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학생자치회비에서 지원되는 중앙동아리당 20만원/학기 이 있고,

동아리회장 장학금(학기당 20만원)이 있는데, 수혜인원이 적어 격년으로 받고 있음. 세 번째가 동아리발전기금인데 학교가 교비로 지원하는 것임. 학교에서 매 학기 500만원씩 동연에 지원하면 동연은 각 중앙동아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지원하는 제도임. 2011년도 2학기부터 800만원으로 증액되나, 현재 500만원으로 사업 당 1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아이디어 뱅크의 경우 2010년에 발전기금에서 발명캠프 명목으로 1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에는 일단 1학기에 5만원만 지원받고 2학기에 증액되면 추가로 받아 전체 20만 원 정도를 지원 받는 것으로 함. [동연회장 구술].

이외에 동아리방, 시설 등을 지원하나, 아이디어 뱅크의 경우 집기와 시설물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상황이며, 대단히 열악한 형편임. [아이디어 뱅크 회원들 구술]

5. 자원봉사제도의 현황 및 학교의 장려제도

자원봉사활동은 2005. 8.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전사회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그 공헌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1조).

인화대학교도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로 대표적인 것은 졸업인증제에 따른 봉사인재 인증, 사회봉사장학금, 일부학과의 학점 인정 등임. 먼저 졸업인증제는 영어는 필수이며, 2007년부터 선택적으로 창의, 국제, 정보, 봉사부문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봉사인재는 봉사활동 시간(100시간 이상)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봉사인재로 인정되어 성적기록부에 기재하는 제도임. 이는 졸업을 위해 필수는 아니나, 소위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장려하는 사항임[인하졸업인증제_인하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대학교육역량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07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 졸업인증제에 의해 봉사인증을 취득한 학생은 2007년 68명, 2008년 100명, 2009년 245명임.[대학교육역량사업계획서 14쪽 참조]

발명캠프 정도의 봉사시간은 사회봉사장학금(7,000원/시간당) 수혜가 가능한 봉사시간임[아이디어뱅크 회원 이범석증언], [장학금 지급규정 참조]. 생활과학부의 경우 1학년 2학기 교양필수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과목(1학점) 학점 취득에 필수적임.(봉사시간 32시간이면 통과되는 학점) [생활과학부 교육과정 참조] 학점 취득을 위한 봉사시간은 수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학교도 사회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권장하고 지도는 하지만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특히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최소한의 사후 대책인 보험의 경우에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학생대표간부수련회, 하계농촌봉사활동, 총대의원회교육수련회, 동아리대표자수련회만 적용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에는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인하대학교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계획서](2010. 7.)(국고지원 31억 39백만원 사업)에 의하면 인하대학교 교육이념을 '진리탐구, 사회봉사, 인격도야'(7쪽)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4대 핵심역량(전문화, 실용화, 국제화, 리더십)에 따른 학부 교육 중 리더십 부분에 교양과정에 봉사활동의 학점화, 비교과과정에 동아리활동 지원을 적시해 놓았으나, 부분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음. 교육의 질 관리체계 등에서는 졸업인증제를 선전하고 인증을 받으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신설을 계획하고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함. 또한 개별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대학 차원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봉사근로 장학금을 보완하겠다고 했음. 이 사업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고지원을 받으면 그 계획대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임. 이 사업 추진에 있어 봉사활동에 대해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이디어뱅크의 봉사활동처럼 동아리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계획서와 달리 인정하고 있지 않음.[인하대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계획 참조]

타 대학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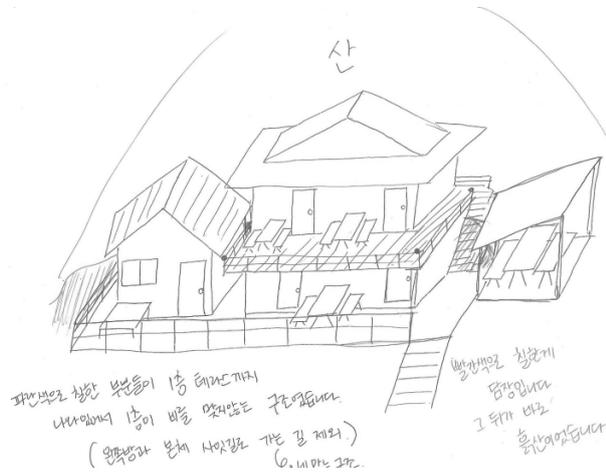
- 성균관대 : 3품인증제(인성품:인성,사회봉사, 국제품, 정보품) [자료⑨ 참조]
- 건국대 : 사회봉사 학점 총 2학점(최소 봉사시간 32시간/학점) [자료⑩ 참조]

6. 춘천에서의 참사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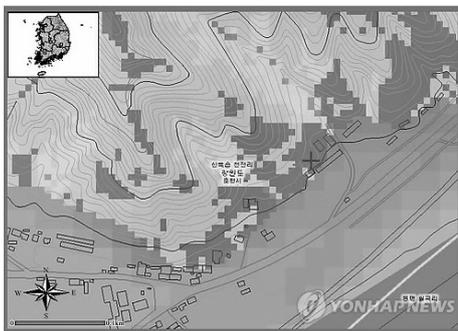
1) 참사 직전 상태

춘천에 온 지 이틀째 밤이며, 발명캠프 1일차를 진행하고 돌아 온 상황이라, 처음 참여한 학생들의 궁금증도 풀고 선배들의 경험도 공유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됨. 1,2층 큰 방 두 개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됨.

그림 1 학생들이 묵었던 춘천민박



2) 산사태 위험 경보



춘천 마적산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
 (춘천-연일뉴스) 강원나래 기자 = 산림청 위험지 관리시스템 상의 산사태 위험지 정보 지도에 의하면 27일 지경에 강원 춘천시 산북을 관전리 마적산 산사태 사고 지역 인근은 산사태 위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파란색 십자표시된 지역이 사고지역,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산사태위험등급구분에 의해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 <<산림청, 지역기서 참조>> 2011.8.1 rae@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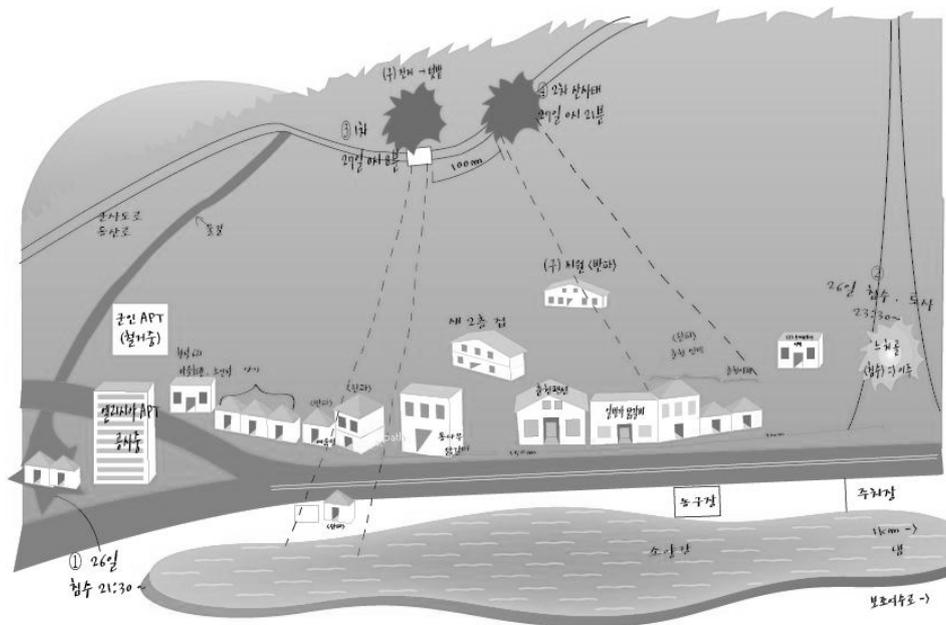
산림청에서 26일 21시 25분에 마적산이 산사태 위험(주의보) 대상지역으로 경고문자가 발송됨. 1차 산사태가 발생한 천전리 39-10번지(경도 127도47분41초 위도 37도55분49초)일대와 2차 산사태가 발생한 38-12번지(경도 127도47분48초 위도 37도55분53초)일대는 모두 위험 1등급(164점) 지역임. 산림청은 2006년부터 전국 산림을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으로 나누어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

26일 21시 시우량(1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을 바탕으로 춘천시에 산사태 주의보를 보내는 등 당일 0시까지 3차례에 걸쳐 보냄.

3) 참사 상황

26일 21시 30분경 1차 산사태 지역 인근의 마을회관 맞은편 해강아파트 앞 집 두 채가 침수 되는 사건 발생. 마적산 정상으로부터 빗물이 내려 왔으며, 마을회관 맞은편 아파트(엘리시아) 공사현장에서 우수관을 300미터짜리로 집수정을 600미터관으로 묻어 배수가 안 되어 집이 침수됨. 춘천시청 수도과와 읍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옴. 수도과에서 양수기 2대를 소방서에서 양수기 1대가 동원됨.



26일 23시 30분경 2차 산사태 지점에서 900미터 떨어진 느치골에서 하수구가 막혀 물이 넘쳐 나는 사고 발생. 평상시에도 비가 오면 느치골에서 산사태 지점까지는 도로에 빗물이 그득한데, 그날도 비가 많이 와서 도로는 타이어 절반 정도가 잠길 정도였음. [버스종점에서 느치골까지 26일 밤 11시경 운전하고 다녀온 주민의 증언]

27일 0시 8분 1차 산사태 발생 춘천소방서 신고 접수. 출동은 했으나 레카차, 경찰순찰차 등이 와서 무용지물이었음. 지역 주민들은 서로 전화로 다 나오라고 하고 안전을 확인.



27일 0시 20분 30초경 2차 산사태 발생. 1차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되어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웠음.

27일 0시 42분 도소방본부, 춘천소방서 비상소집. 1시 20분 본격적인 매몰 구조작업

※ 1차 산사태가 난 곳의 인근지역인 소방항공대 앞 신샘발로는 참사 한달 전인 6월 23일 폭우로 도로 경계선이 분간이 안갈 정도로 물에 잠김. [강원도민일보(6. 25) 참조]

이번 2차 참사로 파손된 가옥은 뒤에 있는 (구)시월(영업하려고 새로 정비한 후 비워진 상태)과 춘천민박 두 동, 춘천여행임. 피해는 1층 큰 방에 모여 있던 학생들에게 집중되었는데, 1층 방의 부엌 쪽에서부터 치고 들어 온 상태임. 춘천민박은 조립식 판넬로 지어놓고 외벽만 붉은 벽돌을 한 장씩 쌓아놓은 형태로 토사가 밀려들자 벽체가 힘없이 부서지고 토사와 함께 피해 학생들을 타격하는 도구 역할을 한 것임. 사고 민박 1층은 골조만 남은 상태임.

7. 산사태 지역의 토양 및 민박집 상황

1) 산사태지역의 토양

산사태가 난 천전리 산71번지의 토양은

- 건습도(토양의 수분 정도를 측정)는 '약건'(손으로 째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이며,
- 토심(토양의 깊이)은 지표면에서 30cm 이상 60cm 미만 구간임.
- 토성(토양의 모래·미사·점토의 함량에 대해 촉감법으로 알아보는)은 양토(모래와 미사가 대략 1/3 - 1/2씩인 토양, 점토 함유량이 27%이하), 미사질양토(미사 1/2이상, 모래 1/2이하인 토양, 점토 함유량 27%이하)로 구성되어 있음.

※ 미사란, 광물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그 지름이 0.004~0.006mm에 이르는 퇴적물 입자. 미사는 유수에 의해 쉽게 운반되나 정수(靜水)에서는 곧 가라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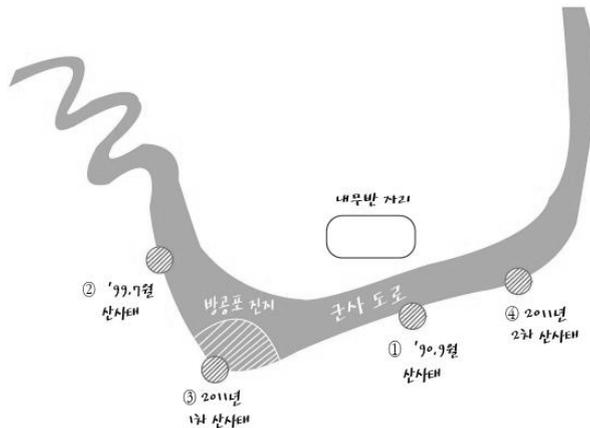
지형은 완구릉지로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고 산록이 전답에 연결된 파상형의 야산 지역으로 경사 길이가 300m 이하인 야산이며 수령이 11~20년 사이의 입목의 수관점유율이 50%이상인 2영급임.

2) 민박집 상황

학생들이 묵었던 춘천민박과 그 일대의 소유주인 김광웅(46세)은 버스 종점 근처에서 부인(김연숙) 명의로 동서남북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음. 춘천 천전리 인근에서 주유소를 물려받아 하다가 어느 날 잘되던 주유소(매각 후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주유소 망함)를 팔고, 당시 받았던 민박집 주변 땅을 사 펜션과 민박은 부인과 자신의 명의로 분산 등기하고, 최근 춘천민박 한 개 동(추가), 춘천여행(2011. 3월 준공)을 신축함. 실제로는 민박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김광웅은 부인명의로 운영(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있음)하는 '동서남북 부동산' 뒤에 집에서 살고 있음. 최근 부인 명의의 춘천펜션을 신상갑 명의로 가등기함(2011. 8. 1일자). 신복읍내에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으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유소 매각, 토지 구입 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8. 천전리 산사태 원인

1) 방치된 방공포진지와 군사도로



천전리 산사태의 일차 원인은 마적산 정상근처 해발 320m지점에 구축되어 있는 방공포진지와 군사도로(지금은 산책로로 이용)에 있음. 이 도로와 진지는 1973년 소양강 댐 준공 당시 공습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방치되어 있음. 그 규모는 300평 규모로 이미 철수 한 지 오래 되었지

만 “아직도 진지 주변은 나무가 없고, 깊은 호에 물이 잔뜩 고여 있어 지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증언(한국일보 기사 2011. 7. 29.)

진지가 있는 지점은 산정상아 아니며, 산을 절개하여 만든 것임, 1차 산사태의 시발점이 방공포진지에서였음.(위 그림 ③ 지점) 2차 산사태의 진원지는 방공포진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였음(위 그림 ④ 지점). 그 자리는 '90년 9월에도 ①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번 산사태로 반파된 집(구 시월)이 똑같이 반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99년 산사태는 그림의 ② 지점에서 발생함.

진지와 도로 때문에 산이 지나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게 되었고, 최근 진지 터에 텃밭까지 일구어 많은 비가 오자 머금고 있던 물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임. 또한 항공사진으로 보면[자료 : 항공사진 참조] 진지와 2차 산사태가 난 지점은 확연히 골이 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 그 자체가 물길이라는 증거임.

2) 배수로가 없었음

90. 9월 반파된 (구)시월의 배수로를 민박집 쪽이 아니라 집 뒤쪽으로 만들었으나, 그 뒤로 새로 집을 지은 밑의 2층집이 배수로를 막고 옹벽을 쳐서 배수로를 틀어버림. 원래의 배수로는 자기 집의 정원으로 꾸밈. 그 이후 (구)시월도 주차장 시설을 위해 집 뒤에 나무를 베고 공터를 만들어 시멘트로 바른 흔적이 남아있음. 이후 건축된 춘천펜션, 닭갈비집, 춘천민박 등도 집의 후면을 보면 벽을 쌓아 수로를 막고 춘천여행 방향으로 물이 빠지도록 했으나 물이 닭갈비집과

민박집 사이 계단을 타고 흐를 정도로 물길이 막힌 상황이었음. 춘천여행 옆 (구)수자원공사 사택 사이에 콘크리트 배수구가 완전히 말라 있는 상황임. 지금 산사태 현장에 가보면 산사태가 난 지점을 타고 물이 잘 흐르고 있으며, 토사에 물이 빠져서 산사태 직후 폭 빠지던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상태임.

이곳의 지형은 지표면에서 30cm ~ 60cm 사이의 흙이 덮여져 있고, 그 밑은 암반이 있어, 암반 위의 흙이 빗물을 머금고 있는 상황이라, 산 밑으로 흐를 수 있는 배수구가 필요한데 전혀 없는 상황임. 집집마다 옹벽까지 설치하여 물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토질 자체도 미사와 모래가 주로 되어 있어 물과 함께 쓸려내려 온 것임.



9. 현 문제점

1)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

-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학교가 독려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자원봉사의 책임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의무사항은 없음.
- 자원봉사를 받는 시설이나 단체는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고, 다만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주고 봉사기회를 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함(상천초등학교)

2) 인과대학교의 문제점

- 학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 : 학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교육 활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모여 노는 정도의 자치회로 인식함.
-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계획서](2010. 7.)에서는 사회봉사와 동아리활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실제 지원은 왕성한 동아리 활동에 비해 아주 미미함.
- 동아리 활동 지원(100개의 동아리에 한 학기 500만원 지원)이 동아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디어뱅크 같은 곳은 학생들이 후원기업을 구하러 다니고, 주점을 하는 등 본연의 활동 보다 재원 마련에 더 신경 써야 함.
- 학교는 봉사활동의 학점화를 시행하려고 하였고 이미 생활과학부, 간호학과 등은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임. 학점화는 봉사활동 자체가 수업의 연장임을 인정하는 것임.
-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없음.(단체보험 등)

3) 국방부

- 군부대 주둔을 위해 산꼭대기에 방공포 진지를 구축하고 군사도로(산책로로 이용)를 내면서 도 하부지역을 고려하지 않음. 철수 후 원상회복도 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이 되었음. [조선일보 기고글 2011.8.2.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국방부가 최근 춘천, 화천 곳곳의 참호와 교통호를 최근 매우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방치된 군사시설로 인한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임. 바로 군부대 철수 후 방공포 진지를 방치해서 생긴 결과임.

4) 춘천시(강원도)

- 과거 똑같은 산사태가 난 지역을 관리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줌.
- 군부대 이전 후 방공포 진지와 군사도로를 방치함.
- 물에 취약한 토성임에도 배수로에 대한 규제가 없었음.
-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음.
- 실제 거주하지도 않음에도 농어촌민박으로 허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인 김광웅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음. 춘천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음.

김광웅의 소유로 된 춘천민박(이번에 완파된 1개동)은 소매점으로 허가(2011. 3월 허가 당시 설계도에 소매점, 물품보관실, 다용도실, 창고만 있었음.)를 받았으나, 민박업을 했음.

- 숙박업을 하는 곳에 조립식건축을 허가
- 소양댐에 의한 주변 지반의 영향 등에 대해 무대책임.

근본적인 문제는 소양댐으로 인해 지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그리고 만수위인 198미터가 되어야 수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라 실제 방류 시에는 물의 낙차 때문에 느치골까지(댐으로부터 1KM)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위 조절 실패 시 춘천시 전체가 물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수로(소양댐 상류 4개, 밑에 직경 14M의 보조여수로 2개)를 설치했는데 1,600억+α의 공사비를 들여 7년간 공사하여 최근 완공했는데, 3번이나 공사 중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함.[GBN 뉴스]

※ 2006. 9. 16일 방송에 의하면 보조여수로 공사 터널은 2005년 3, 4월에 낙반사고가 일어난 이후, 2006년 9월 12일 오전에 1번 터널 하부쪽 입구 70여m지점에서 또 낙반사고가 발생함. 전문가들은 공사 지역에 잘 부서지는 편암이 분포되어 있고, 단층대가 지나가고 있어 보강 후 공사해야 한다고 지적함.

- 2008년 7월 17일 도의회에서 신복읍에 소방서(방재기능 포함) 설치를 요청하였고, 그 필요성을 소방본부장이 인정하고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없었음.

10. 검토 의견

- 유족들이 나서자 발명진흥회 등은 스스로 안전 문제와 예산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책위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켜보면 될 것 같음.

- 학교와의 관계는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는 자신들의 투쟁(학우들의 희생)으로 인식하고, 유족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고 있음. 유족들은 원래 학교에 요구하려던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총학, 동연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춘천시는 배수로 규정 등 법과 제도의 미비사항을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산사태 발생 양상, 토양, 군부대 시설(방공포 진지, 도로 등) 등의 사항을 본다면 그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했음.

- 또한 농어촌민박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허가된 숙박업소 등의 난개발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며,

- 이번 참사에서 외지인만 모두 사망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폭우와 여러 상황 속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모두 일찍 귀가한 정황이 있으며, 1차 산사태 직후, 서로의 안부를 파악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음.

- 춘천시의 주장대로 그렇게 엄청난 비가 왔다면, 주민의 대피 또는 경고가 분명히 있었어야 하며, 민박집 주인들이 농어촌정비법대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 1차 산사태 이후 연락에 되었다면 대피도 가능했을 것임.

- 종합적으로 보면 천전리 산사태는 국방부와 춘천시의 관리 부재와 안전 조치 없는 개발에서 비롯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및 예방조치,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한 인재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1.08.31)



세월호 참사 (2014.04.16)

기록 : 윤경희

(단원고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

1. 사건 개요

2014년 4월 15일 선원 및 승무원 33명과 여객 433명, 화물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전남 진도권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476명의 승선자중 172명이 생존하고 304명이 희생되었다. 이날 배에 탑승했던 승객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나선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 환갑을 맞아 여행을 가던 초등학교 동창생들, 제주도로 이사하던 가족, 화물을 운송하던 기사 등이었다.

세월호는 4월 15일 저녁 6시 30분에 출항 예정이었으나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늦은 밤 9시에 출항했다. 그날 인천 여객 터미널에서 출항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승객들이 7시 10부에 승선해서 출항할 때까지 구명조끼의 위치, 비상 대기 장소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는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항 다음 날인 4월 16일, 세월호는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급하다는 맹골수도를 통과한 후 8시 46분경 병풍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오전 10시 25분경 전복되었고, 10시 31분경 병풍도 북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선체의 일부만 남긴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세월호 참사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할 국가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 초기, 인명 구조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공적 주체들은 참사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탑승자들의 구조가 가능했던 시간을 허비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못한 결과이며 허술한 국가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날의 국가에게 묻는 것이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구분	계	단원고 학생	단원고 교사	일반인	세월호 직원
총원	476	325	14	104	33
탈출	172	75	3	71	23
사망	299	250	10	30	10
미수습	5	2 (남현철, 박영인)	1 (양승진)	2 (권재근, 권혁규)	

3. 관계 당국의 대응

정부는 세월호 침몰 시간 파악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동안,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영상만 찾고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하지도 않는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면서 세월호 정부 대응은 처음부터 인제라는 것을 증명했다. 2014년 4월 16일 10시 30분 세월호 완전 침몰, 14시 15분 최순실 관저 도착 후 문고리 3인방과 회의 시작, 14시 53분 박근혜 올림머리, 16시 33분 관저 출발, 17시 15분 중대본 도착을 보면 10시 30분 세월호가 완전 침몰 후 최순실이 관저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동안 실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비선실세(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지인이 국정 집행)가 국정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의 박근혜의 7시간과 최순실 존재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국제적으로 보도된 참사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건이 발생 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 첫 공식 성명을 내놓고 각종 의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2014년 4월 16일 당시 관계당국이나 관련 회사의 지원은 없었다.

우리를 지원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은 일반 시민 분들이나 봉사단체 뿐이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계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고 눈속임하기에 바빴으며, 언론의 기사를 조작하고 가족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감시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화두는 '재난에서의 국가책임' 문제였다. 이는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했던 '구조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선장과 선원이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구조되고, 해경은 완전침몰 1시간여 전에 도착했는데도 소극적으로 구조에 임하면서 승객을 구조하지 못했다. 국가는 단지 구조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1) 세월호 침몰원인

2014년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서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배의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선원의 조타미숙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원인이 슬레노이드밸브 고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2015도6809).

이후 세월호 침몰원인만을 따로 조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선박전문가, 해양전문가, 변호사 등이 침몰원인을 두고 쟁점을 조사한 끝에 내인설과 열린 안 2개의 상반된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각각 공개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놓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특조위는 내인설과 열린 안에 대한 단일한 결론뿐만 아니라, 침몰원인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최종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2)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의혹

국정원이 선사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았음은 2016년 제1기 세월호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하여 확인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선사로부터의 접대를 넘어서서 정말 세월호를 실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인데 정권교체 후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서버 등 국정원 내부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다소 수궁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3) 구조 방기 - 해경과 선원들 사이의 진실 게임

사고 초기부터 왜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에 접근해 곧바로 선원들만을 구조한 후 학생승객들에 대한 구조 활동은 소홀히 하였는가에 관한 논란이 심하게 일었다. 이에 관하여 해경과 선원들은 2014년 광주지검에서 서로 크게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는데, 해경은 자신들이 처음에 구한 사람들이 선원들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반면, 선원들은 구조 당시부터 자신들이 선원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에 관하여 해경 123정 승조원 일부는 상급자들의 진술과 달리 "선원복을 입고 있어서 선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나, 선원과 승객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거나 "구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진

술하였는데, 과연 해경이 의도적으로 선원들을 먼저 구하고 승객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4) 해경의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직후 해경 123정 승조원들은 ‘승객들을 향해 퇴선방송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기자회견은 거짓이었다. 2014년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의 퇴선방송은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퇴선방송이 있었다면 승객들이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1기 세월호특조위에서는 청문회를 통하여 본청과의 연관성을 밝혀냈고, 사참위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는 중간관리자급 인사 2명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끝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5) 우리의 과제

세월호 진상규명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당장 침몰원인부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월호는 어떤 사고였고, 왜 일어났고,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올바르게 알려주는 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참사 발생 한 달 후인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시작으로 정부는 재난방지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안전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관리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재난안전에 관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권한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퇴직 공직자를 통한 민·관 유착 등 공직사회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의 지원을 받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정부 계획은 대부분 실행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안전관련 법안들도 통과되었다. 선박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인 선박안전법 개정안과 선박안전운항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해운법도 개정되었다. 재난 피해자와 가족 및 구조요원의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국가의 의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하였다.

문제는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의 실효성 유무다. 4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만들고, 해난사고에 대비한 특수구조대를 만드는 등 재난대응 현장조직을 신설하고 있지만, 실제 역량도 강화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인력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안전위험요소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다가 사고가 터져도 별로 타격받지 않는 수준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는 기업 경영진과 시설관리 책임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없다. 거주 지역 주변의 위험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부족하고, 문제를 제기할 방법도 뚜렷하지 않다. 위험을 감지한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미약하고, 공익제보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치 않다.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안전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다. 정부 재난방지대책의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7. 지원 또는 연대 - 그리고 세월호 시민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전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슬픔과 분노는 국민을 하나로 이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안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약 400여 곳을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었다. 해외 곳곳에서도 생환을 기원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도 차려졌다.

팽목항에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러 시민 단체, 의료 단체, 기업체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팽목항을 찾은 개인들도 묵묵히 희생자 가족들을 도왔다. 팽목항으로 달려온 민간 잠수사들은 거센 바다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2014년 7월 14일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였다. 이때에도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했다. 노란리본공작소에서는 노란 리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었고 진실마중에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세월호 천막에는 많은 시민들이 상주를 자원하여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시민들은 탑승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촛불을 들었다. 안산 단원고에서 시작된 촛불의 행동은 서울 청계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추모와 애도를 위해 들었던 촛불의 목소리는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의 요구로 이어졌다.

광장에서 꺼지지 않던 촛불의 목소리는 2016년 촛불 혁명의 시발점이었다.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과 함께 외쳤던 것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광장에서 촛불로 하나가 되었고 촛불의 외침은 거대한 힘이 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 보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언론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언론은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을 도와야 함에도 수많은 오보와 왜곡 보도를 양산하여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언론은 4월 16일 아침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간에 “해경과 해군 등 정부가 구조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에 나서고 있다”라고 했고 국민은 그 보도를 믿었다. 언론은 오전 10시가 넘어서부터는 “침몰이 임박해 탑승객에게 바다로 뛰어내려야 한다는 선내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참사 당일의 기록을 보면 승객들에게 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외에 탈출이어나 퇴선 안내 방송은 없었다. 수백 명의 탑승객이 갇힌 채 배가 전복된 10시 30분경에도 언론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망 위험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낙관”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참사 당일의 언론보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였다. 현장의 기자들은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하기도 했지만, 언론사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선택했다.

참사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정부의 총력 구조 작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에서는 에어포켓이 생존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 했고 공기 주입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경과 해군이 550명이 넘는 합동 잠수팀을 꾸려 여러 차례 선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선내 진입에 성공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 4월 18일 세월호 4층 화물칸의 출입문을 열었을 뿐이고 19일에야 잠수부들이 선체 내부에 진행해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4월 20일 이후 언론 보도는 참사의 원인과 과실 책임을 따지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의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를 전달했던 많은 언론들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기도 하고 오보였던 다른 언론사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다. 사실 확인이 부족한 받아쓰기식 보도,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권력 편향적인 보도, 누락과 축소 보도 등 언론의 윤리와 동떨어진 보도들이 이어졌다. 그동안 축적되었던 언론의 부정적인 관행이 빚은 결과였다.

9. 추모 사업

1) 추모사업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근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 세월호참사추모시설의 종류(법 제36조, 법 제38조):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 추모사업 심의·의결(법 제37조) 기구: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약칭 ‘지원추모위원회’)

※ 국무조정실 추모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2016. 6. 13. ~ 2017. 3. 12.)

2) 안산시의 추모사업 추진

- 416세월호참사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2016. 7. 6.
- 구성 근거: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칭) ‘추모사업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성 현황: 24명(유가족, 주민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안산시 및 중앙부처 공무원)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채를 보여주는 국가적 참사이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끝내 협조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왜, 무엇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집요하게 추적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드러난 세월호의 진실 조각들은 세월호 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동안 숨기고 개입하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들이 개별적이고 우연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 계속 질문하면서 헤쳐 나가야 한다.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침몰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온 국민이 목격자인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로 취급하며 덮으려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성역 없이 밝히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세월호 피해자뿐 아니라 이 참사의 목격자인 온 국민의 책무이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단체는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사)0416단원고가족협의회, 4·16세월호참사일반인유가족협의회 세 곳이 있다.

현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어가는 현재 진상규명 활동으로 전국을 다니고 집보다는 거리에서 보낸 날들이

더 많은 가족들의 건강은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 트라우마 또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트라우마치료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가족들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해서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올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 관계 또한 거의 끊어진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우리 단체는 대부분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들이다. 어떠한 일도 힘든 일이라 말하지 못한다. 세상 어떤 힘들고 어려움도 내 아이가 겪은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회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현재의 과제

우리의 과제는 2014년 4월16일부터 현재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 걸고 기억하고 행동해 왔다. 7주기가 다가오지만 여전히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했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통해 국가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1) 정부, 청와대

청와대는 즉시 국정원, 해군 등 정부내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와 데이터들을 제한 없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고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2) 국회

국회는 즉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을 구성하고 대통령기록물공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피해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세월호 참사 정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세월호 참사를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는 책임감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려 하고 또 어떤 이는 책임을 지기 위해 싸웁니다. 공통점은 모두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이 지체될수록 우리 모두의 트라우마는 더욱더 깊어지고 잔인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진상규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트라우마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지 않아야만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함께 촉구해 주십시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우리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서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났고 그 분들이 참사당시 팽목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함께 연대하며 간다는 것은 아주 큰 힘이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하며 또 서로 도울 일을 찾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간다는 것,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피해자의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같이 걸어갈 동반자이다.

모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4년

04월 16일 오전 8시52분 단원고 학생, 최초로 세월호 진도 해상 침몰 상황 신고

0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현장 방문 / 검찰, 해경과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구성

04월 18일 세월호 완전 침몰

04월 19일 합수부, 이준석 선장 등 주요 선원 3명 구속



- 04월 20일 세월호 가족, 청와대 항의방문 추진
- 05월 04일 박근혜 대통령 사고현장 방문
- 05월 15일 검찰,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전원 구속기소
- 05월 19일 박 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 05월 29일 국회,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통과
- 06월 02일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개최
- 06월 10일 광주지법,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 첫 재판
- 06월 12일 순천에서 유병언 전 회장 추정 변사체 발견
- 07월 14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포함 15명 특별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 돌입
- 07월 15일 단원고 학생 46명 등 서울 국회의사당 향해 도보행진
- 07월 21일 검찰, '부실관제' 진도VTS 해경 13명 전원 기소
- 07월 22일 경찰, 유병언 사망 공식발표
- 08월 14일 실종자 가족,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눈물의 편지 발송
- 08월 19일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2차 합의안 반대
- 08월 30일 세월호 국조 특위, 활동 종료
- 09월 24일 검찰, "476명 5분 만에 '전원탈출' 가능했을 것"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 09월 30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 10월 01일 진도체육관 대안 마련위한 실무기구 구성키로 합의...3자협의회
- 10월 06일 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 10월 27일 검찰, 이준석 선장 사형, 기관장·1등 항해사·2등 항해사 등 3명은 무기징역 구형
- 10월 29일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인양
- 11월 01일 세월호 참사 200일 가족 추모식
- 11월 02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특별법 여야 합의안 수용
- 11월 11일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
- 11월 20일 광주지법,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 11월 26일 세월호 가족대책협의회 민간 조사기구 구성 추진
- 12월 06일 세월호 유가족,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석태 변호사 선출
- 12월 11일 광주지법, '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 전 항만청 간부에 징역 5년 선고
- 12월 20일 "0416 기억하고 함께 걷다"...세월호 가족
- 12월 25일 "세월호 유가족과 슬픔·진실규명 함께 하겠습니다"...성탄절 연합예배
- 12월 27일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엄수

● 2015년

- 01월 01일 세월호 유가족 “2015년은 참사의 진실 밝히는 해” 기자회견
- 01월 14일 팽목항 인근 부지에 컨테이너 2동 이어 붙여 분향소 설치
- 01월 15일 인천시 “세월호 추모기록물 영구보존하겠다.”
- 01월 20일 세월호 대책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엄벌 촉구
- 01월 25일 사단법인 4·16가족협의회 출범선언…대표이사에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 01월 26일 세월호 가족, 안산~팽목항 도보행진…“선체 인양·실종자 수습”
- 01월 29일 광주지법,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 놓친 전 진도VTS 해경 13명 유죄
- 02월 09일 세월호 참사 300일, 가족들 “선체인양 통해 실종자 수습해 달라”
- 02월 11일 광주지법,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부실’ 전 123정 정장 징역 4년 선고
- 02월 12일 광주지법, 세월호 증·개축 점검부실 혐의 한국선급 검사원 ‘무죄’
- 02월 14일 ‘19박 20일’ 세월호 도보행진단, 종착지 진도 팽목항 도착
- 03월 05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정식 임명
- 03월 06일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안산 분향소 및 팽목항 방문
- 03월 16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원하는 것은 유가족이 되는 것”
- 03월 27일 정부, 세월호특위 축소안 입법예고
- 03월 29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대표에 면담 요청
- 04월 10일 해수부 기술검토TF “세월호 인양 기술적으로 가능” 발표
- 04월 16일 참사 1년
- 04월 22일 정부, 세월호 인양결정 공식 발표
- 04월 28일 광주고법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 1년6월~12년 선고
- 05월 01~02일 세월호 유가족 등 세월호 시행령 폐기 요구 청와대 행진
- 05월 14일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선체인양 추진단 현판식
- 05월 28일 국회 여야, 세월호 시행령 통과
- 06월 04일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 08월 04일 상하이샬비지 컨소시엄, 세월호 인양업체로 최종 선정
- 09월 19일 세월호 인양 준비 착수
- 10월 29일 대법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유죄 확정
- 11월 12일 대법원,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나머지 선원 14명 징역 1년 6개월~12년 확정
- 11월 30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경기도교육청에 단원고 2학년 교실 존치 요구
- 12월 14~16일 세월호특조위 1차 청문회



● 2016년

- 01월 12일 단원고 생존학생들 졸업식
- 03월 28~29일 세월호특조위 2차 청문회
- 04월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
- 04월 26일 세월호특조위, 인양 현장조사 재 실시
- 06월 12일 세월호 '벃머리 들기' 착수 후 하루 만에 중단
- 06월 30일 세월호특조위 공식 활동 기한 종료
- 07월 29일 세월호 '선수 들기' 성공
- 09월 01일 세월호 3차 청문회 시작
- 09월 30일 세월호특조위 활동 공식 종료
- 11월 01일 세월호 유족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 11월 14일 정부, 세월호특조위 사무실 철거
- 12월 0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 2017년

- 01월 07일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발족식
- 01월 09일 세월호 1,000일
- 01월 10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답변서 현재에 제출
- 02월 19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첫 공식 활동
- 03월 06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7시간 못 풀었다'
- 03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 03월 15일 해수부 "세월호 3주기 전에 인양되도록 하겠다" 발표
- 03월 18일 해수부, 세월호 19일 인양 시도 발표 후 3시간 만에 취소
- 03월 22일 세월호 참사 1072일 만에 시험인양 착수
- 03월 25일 '1075일간 슬픔담은 기다림'...마침내 세월호 전체 수면 위로
- 03월 29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공식 활동 시작
- 03월 30일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연장법...국회 본회의 통과
- 03월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서울 구치소 수감. 세월호 육지 향해 마지막 항해 시작, 목포 신항만 접안 완료
- 04월 01일 황교안, 목포 신항만 세월호 현장 방문...유가족, 면담 불발에 '울분'
- 04월 07일 세월호 선내 수색 위한 사전 조사 작업 착수
- 04월 09일 세월호 육상 거치
- 04월 10일 세월호 수중 수색 재개

- 04월 11일 세월호 수색 앞서 부식방지 위한 선체 세척·방역 진행
 - 04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목포신항만 찾아 수습작업 참관·유가족 위로
 - 0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
 - 04월 18일 세월호 선체 내부 일부 공개
 - 04월 20일 세월호 침몰해역 수중 수색 절반 마무리…특별한 성과 없어
 - 05월 17일 세월호 296번째 희생자는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
 - 05월 19일 세월호 3층 수습 치아, 허다운 양 확인…297번째 수습자
 - 05월 25일 세월호 4층 선미 수습 유해, 단원고 조은화 양
 - 05월 28일 세월호 침몰해역 수색 종료…고창석 교사 유해만 발견
 - 06월 04일 세월호 수습 유류품 3000점 넘어…32개 구역 1차 수색 완료
 - 06월 05일 세월호 3층 선미 유해, 이영숙씨로 확인…미수습 5명
 - 06월 20일 세월호 객실 1차 수색 완료
 - 08월 07일 세월호 화물칸서 철근뭉치 21.1톤 발견
 - 08월 16일 세월호 침몰해역 2차 수중 수색 돌입
 - 09월 21일 세월호 선조위, 사고해역서 침몰원인 조사…사고 후 처음
 - 09월 23일 목포신항서 눈물의 영결식
 - 10월 13일 세월호 희생자 이영숙씨 목포신항서 눈물의 영결식
 - 11월 11일 목포신항서 고창석 교사 추모식
 - 11월 16일 미수습자 유가족 기자회견…“목포신항 떠난다”
 - 11월 18일 미수습자 5명 추모식
 - 11월 22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떠나기 전날 유골 발견…해수부 은폐
 - 11월 24일 세월호특조위 구성 ‘사회적참사법’, 330일 기다림 끝에 통과
 - 12월 12일 해수부 “소속 공무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확인”…검찰 수사 의뢰
 - 12월 19일 검찰,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기소…방송법 위반
- 2018년
- 01월 01일 목포 세월호 옆 새해맞이…가족들 “진실 밝혀지길”
 - 01월 16일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사 9명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 01월 29일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檢 출석
 - 01월 30일 검찰, 세월호유가족·특조위원 참고인 조사…‘해수부 업무방해’
 - 02월 01일 ‘세월호 특조위 방해’朴정권 해수부장·차관 구속…“범죄소명·도주염려”
 - 02월 06일 세월호 선체 직립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
 - 02월 19일 ‘세월호 특조위 방해’朴정부 해수부장·차관 구속기소



- 02월 20일 세월호 인양과정 '유류 피해 어민'...국가가 손실 보상
- 02월 21일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체 이동 완료
- 03월 02일 김관진 구속영장...세월호 관련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 협의
- 03월 19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박근혜 검찰 구치소 조사 거부
- 03월 28일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최순실과 관저회의
- 03월 29일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기소
- 04월 06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 04월 13일 세월호 직립 위한 수직빔 33개 설치 마무리
- 04월 16일 전국에서 세월호 4주기 추도식
- 05월 09일 세월호 직립 테스트 돌입
- 05월 10일 세월호 직립 완료
- 05월 24일 세월호 미수습자 5명 수색 본격화...4층 객실·기관실 진행
- 05월 30일 선조위 "세월호, 수직외력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낮아"
- 06월 25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재개...선체 좌측·보조기관실 중심
- 07월 05일 '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개혁안 발표...민간인권위 설치
- 07월 19일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위자료 2억 배상"
- 07월 25일 군검찰단, '세월호 보고 조작' 신인호 소장 불구속 기소
- 08월 06일 선체결함 vs 외부영향...세월호 선조위, 상반 원인 모두 담고 종료
- 0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 고발...참사 개입해 민간인 사찰"
- 09월 02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동거차도 감시 초소 철거
- 09월 03일 가족협의회, 진도 팽목 분향소 정리
- 09월 05일 '세월호 사찰' 소강원 결국 구속...군특수단 첫 사례
- 09월 10일 군, 단원고 사찰 기무사 장성 압수수색...피의자 입건
- 10월 31일 '세월호 보도개입 의혹' 이정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12월 03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0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구속영장 기각 사흘 만에
- 12월 14일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1심 유죄...확정시 의원직 상실
- 2019년
 - 02월 12일 '하늘나라에 전달된 졸업장'...단원고 희생학생 250명 명예졸업식
 - 03월 18일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시민들 "아쉽고 허전"
 - 03월 28일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CCTV 녹화저장 장치 조작 정황"
 - 04월 02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 국민청원

- 04월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
- 04월 24일 특조위의 세월호DVR 조작 정황 검찰 수사 의뢰 결정
- 04월 30일 사회적참사특조위, 자유한국당 황교안 진상조사 의결
- 05월 25일 세월호 참사 왜곡은폐, 민주주의 훼손, 국민모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
- 06월 17일故김관홍잠수사 3주기 참배 및 추모행사
- 07월 29일 국정원, 청해진해운 관련 등 신청사건 2건 사참위 접수
- 09월 02일 대통령 최초 상황보고, 인양업체 선정 과정 등 사회적참사 특조위 신청사건 접수
- 09월 18일 세월호광장 여섯 번째 한가위 '송편 나눔'
- 10월 03일 세월호 참사 2000일
- 11월 02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처벌 국민고소고발인대회(4.16가족협의회 주최)
- 12월 31일~01월 01일 2019-2020 송구영신 행사

● 2020년

- 01월 07일 사참위 제 51차 전원위원회 & 김기수 출근저지 행동
- 01월 13일 해경지휘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 01월 25일 가족협의회 설 상차림 &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설맞이 상차림과 음식 나눔
- 02월 10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사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03월 02일 대구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위한 시민가족 모금(~3월 6일)
- 03월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 모욕한 차명진 첫 재판 입장 발표
- 03월 19일 21대 총선 행동계획 발표 및 공천반대 후보 1차 명단 공개
- 03월 26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 04월 01일 4.15총선 낙선후보자 17인 명단 발표
- 04월 13일 김진태 후보 측의 세월호 참사 추모현수막 훼손 및 절도행위 규탄
- 0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
- 04월 22일 사참위 '전 박근혜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방해 관련 위법 사실의 확인 및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 참석
- 05월 13일 사참위 '세월호 참사 최초인지시간 조작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 참석
- 05월 18일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가족 간담회
- 06월 02일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재수사, 세월호 참사 범죄혐의자 처벌추구와 집중행동 돌입
- 06월 17일故김관홍 잠수사 4주기 추모문화제
- 06월 18일 21대 국회 약속의원 약속명패 전달 기자회견 & 명패부착, 요구서 전달
- 06월 26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전면재수사 촉구 촛불문화제



- 06월 30일 사참위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 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 참석
- 07월 09일 4.16세월호 참사 해경 등 구조방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07월 13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3차 고소고발장 접수
- 07월 23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족협의회 대표 미팅
- 08월 13일 <김제동과 어깨동무>팀과 전남구례 양정마을 수해복구 자원봉사
- 08월 28일 해경과 군 기무사, 조사방해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엄벌촉구
- 09월 18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결의 촉구 온라인 토론회
- 09월 22일 사참위 '세월호 블랙박스 CCTV조작' 관련 특별검사 요청 기자간담회
- 09월 24일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 피해자 가족-시민 집중행동 계획 발표 및 착수
- 10월 06일 국회 국민동의입법청원 돌입 및 <4.16진실버스1> 전국순회 출발(~10월 26일)
- 10월 22일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동의청원 국민 동참 호소
- 10월 31일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책임, 약속>
- 11월 20일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입법 촉구
- 11월 10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관련 국회 기자회견
- 11월 12일 세월호가족과 시민, 청와대 피케팅 365일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완수' 강력촉구
- 11월 21일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4.16진실버스2> 전국순회 출발
- 11월 26일 사참위 '세월호의 전타 선회현상 등에 대한 모형시험 결과 중간발표' 기자회견 참석
- 12월 03일 사참위 '국정원 자료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촉구' 기자회견 참석
-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와 계획 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노숙 농성 돌입(~2021년 02월 01일)

삼성·LG 스마트폰 하청공장의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 (2015.02.02)

기록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1. 청년 파견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고의 발생과 배경

1) 6명의 청년 파견노동자 실명 사고 개요

2015년의 2월에서 2016년의 2월, 겨울의 끝에서 겨울로 이어진 시간. 인천과 부천 지역의 공단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들 6명이 실명하는 일이 1년여의 시간 동안 일어났다.

[표1] 메탄올 실명 사고 청년 파견노동자 6인의 '불법 파견' 상황

이름	원청 기업	실제 일한 곳 (다단계 하청업체) (사용사업주)	인력소개소 (일명 아웃소싱) (파견사업주)	일을 구한 곳
이○○ (27세 여)	삼성전자 LG전자	YN테크(부천)	누리잡	인터넷 알바 사이트
방○○ (27세 남)		YN테크(부천)	누리잡	
양○○ (25세 남)		덕용ENG(부천)	드림아웃소싱	
이○○ (28세 여)		BK테크(인천)	세울솔루션	
김○○ (27세 남)		덕용ENG(부천)	플랜HR	
전○○ (33세 남)		BK테크(인천)	대성컴퍼니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다단계하청 공장들이었다. 공장들은 대기업의 3차, 4차 하청기업이었다. ‘불법 파견’²⁾ 일자리였다. 노동자들이 일을 한 시간은 짧았다. 공단 지역의 작은 제조업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소개업체가 보내주는 파견 인력을 썼다. 불법이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공단에 가면 매캐하게 스며드는, 불쾌하지만 마실 수밖에 없는 검고 무거운 공기 같은 것이었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공장에 간 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업 두세 번 지켜보고 바로 따라가는 식이었어요.”

공장 사업주들이 메탄올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발생 후 법원에서의 주장대로 정말 몰랐는지, 저농도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노동자를 공장으로 보낸 파견사업주와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 모두 노동자들이 쓰는 화학물질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누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지는 관심 없었다. 애초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였다. 파견노동자는 인력파견업체(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업무지휘는 일하는 작업장(사용사업주)에서 받게 된다. 파견법은 작업하는 공간에서의 안전교육,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책임을 사용사업주가 지고, 산재보험가입,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진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이리저리 분할해 놓았다. 정부는 이 법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였을까? 근로기준법도 산업안전보건법도 무용지물이다.

노동자들이 쓰러질 당시 인력파견업체가 아닌 공장 직원으로 직접 채용되었다면 공장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도 갖고 있지 않았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공장으로 온 이들이니 예고 없이 결근을 해도 ‘또 그만둔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대응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취업한 일자리가 ‘불법 파견’이라는 정보도 인식도 없었다. 노동자들의 나이는 20대가 5명, 30대가 1명이었다. 공장에서 일한 기간은 5일, 8일... 제일 오래 일한 노동자도 5개월이 안 되었다. 진단명은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변’ 등이었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자 파견이 가능한 32개 업종 이외의 일자리에 노동자를 파견하면 ‘불법 파견’이 된다. 제조업 직접생산 업종은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제조업 ‘불법 파견’은 2021년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20.2.3.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 인양지청은 3년간 25개 제조업체 직접생산 공정에 1,626명을 불법 파견한 인력공급업자를 구속하였다. 구속된 인력공급업자는 불법파견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영업담당 직원을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1~2년 정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 후 곧이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표2] 메탄올 실명 사고 노동자들의 근무기간과 실명원인 확인 시간

이름	근무기간	첫병원 방문	실명 원인 (메탄올중독) 확인
이○○ (27세 여)	3개월 27일	2016.1.16	~ 1.22
방○○ (27세 남)	4개월 20일	2016.1.22	~ 1.23
양○○ (25세 남)	8일	2015.12.30	~ 2016.1.28
이○○ (28세 여)	5일	2016.2.17	~ 2.22
김○○ (27세 남)	21일	2015.2.2	~ 2016.10.1
전○○ (33세 남)	4개월 5일	2016.1.16	~ 10.5

(※위 [표2]를 보면 6명의 노동자 가운데 메탄올에 의한 실명이 밝혀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노동자들이 있다. 공장에서 일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간 노동자들은 TV뉴스나 언론을 본 친척, 지인 등의 제보로 뒤늦게 원인을 찾게 되었다.)

6명의 노동자들은 CNC³⁾공정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였다. 제품이 가공되는 순간 ‘메탄올⁴⁾이 계속 분사되었고,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사용하였다. 노동자들은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일을 했다. 메탄올이 눈과 피부에 튀고,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있는 메탄올을 호흡하면서 흡입하게 되었다. 메탄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법은 6개월마다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12개월마다 특수건강진단을 하라고 한다. 대체물질로 ‘에탄올’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에탄올은 메탄올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이 공정은 작업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선호된다. 임시적인 고용으로 생산량에 맞추어 운영한다. 상시적인 퇴사와 입사가 반복된다. 원청 대기업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제품디자인 변경 등에 대응하면서 일거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6인의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있지 않았고, 필요한 돈을 벌면 그만둘 생각이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모으려고, 군대 제대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전에 잠시 하는 알바로,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위해 일을 찾았다. 일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일을 비교적 오래 한 30대 노동자도 공장을 옮겨 다니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작업량을 보면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

3)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 <https://ko.wikipedia.org>

4) 메탄올은 알코올화합물로 무색의 휘발성, 가연성, 유독성 액체이다. 조금 마시면 시력을 상실하고 많이 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https://ko.wikipedia.org>.

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매우 긴 시간을 일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안전교육, 연장근무 수당 같은 것은 없었다. 총체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일자리였다.

메탄올 중독으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실명이 일어나는 동안 노동자 6명 중 3명은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수개월을 보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기 전 몸 상태가 안 좋았던 노동자들은 감기몸살인 줄 알고 약을 먹고 일하거나, 눈이 이상하여 안과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았던 의료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공장의 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표3] 메탄올 실명노동자 6인의 실명 사고 진단 상황

이름	실명사고 직전 상황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	메탄올에 의한 실명 진단
이○○ (27세 여)	출근길 버스 번호가 안보임. 야간업무 중 속이 안 좋아 조퇴하고 집에서 쓰러짐		
방○○ (27세 남)	감기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었으나 증상 나아지지 않음		새벽에 눈의 통증과 시력감소로 부천성모병원 응급실 통해 진단
양○○ (25세 남)	야간근무 후 일어나지 못함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아주대학교 응급실 통해 진단
이○○ (28세 여)	야간조 출근 후 몸이 안 좋아 인근 병원 방문 후 회사에 복귀 야간근무	인근 병원 방문시 혈액검사 시행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함	야간근무 후 아침, 눈이 잘 보이지 않음.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통해 중환자실 입원, 진단
김○○ (27세 남)	야간근무 후 호흡곤란과 앞이 안 보이는 증세 호소	부천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안과진료 없었음. 업무를 다시 하다 조퇴 후 다른 병원 방문하였으나 시신경염으로 안과적으로 이상 없고 치료된다고 설명 받음	여의도 성모병원 방문 후 메탄올 중독 진단
전○○ (33세 남)	몸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도 눈이 침침함, 출근 후 조퇴하여 집에 와서 쓰러짐		길병원 응급실 통해서 입원, 진단

2) 실명사고 발생 후 회사의 반응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들은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노동자의 일터였던 공장, 하청업체에서는 메탄올 사용을 감추려고 하였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곳도 있었다. 메탄올 중독으로 쓰러진 것을 알고도 ‘술을 많이 먹는다’고 말한 인력과견업체의 관리자, ‘자살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한 공장 사업주도 있었다. 사고 직후 한 파견업체는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받고는 몇 백만 원의 보상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3) 6인의 실명사고 중 최초 발생일보다 1년 앞선 안산 공단의 실명사고 확인

6명의 피해자 가운데 사고 발생이 가장 빠른 이는 2015년 2월에 실명한 김○○이었다. 그런데 이보다 한해 앞선 2014년 3월 이미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2017년에 밝혀졌다. 안산 공단에서 일하던 '조선족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였으며 피해노동자는 병원 요양 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것이다.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지 않았다. 2014년 안산공단에서의 실명노동자 발생은 6명의 청년 노동자가 실명한 후 국가와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확인하던 중 발견되었다. 2014년에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면 2015년에서 2016년에 발생한 6명의 실명을 막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노동건강연대와 6인의 메탄올 실명 노동자들은 2017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안산에서의 실명 노동자 발생과 은폐에 대하여 2014년 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과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2. 정부의 대응

1)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자 직접적 원인으로 불법파견 방치: 박근혜 대통령의 '파견법' 사랑

2015~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노동개혁' 정책 가운데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생소한 '파견법'을 국민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만든 일등공신이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파견법은 32개 직종에서 노동자파견을 허용하지만 그 외 업종에서는 노동자 파견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령 노동자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금형, 주조, 용접 같은 제조업의 기본적인 일자리까지 파견노동자가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다. 기업의 정규직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비정규직 고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파견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나 투자가 얼마나 늘겠냐'면서 파견법 통과를 촉구하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파견법'은 노동조합, 야당의 반대가 크기도 하였지만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였다.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홍보한 파견법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처럼 쓸 수 있는, 속칭 '사람장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노동부장관은 이를 일자리 정책으로 홍보하였다.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부품공장은 제조업 생산라인으로 노동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지만 불법 노동자 파견이 만연해있고, 이는 인터넷 구직 검색만 해보아도 그 실태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인 '불법 파견' 문제를 회피하려 하였다. 실명 노동자들의 구직경로를 통해서 드러난 불법 파견의 일상화에 대하여 노동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정권이 추진하던 '노동개혁', '파견법확대'가 불리울, 노동자들의 미래를 메탄올 실명 사건이 보여주고 있었다.

2016년 당시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를 알리면서 피해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일하는 노

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로 발표하였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간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를 두고 소개비를 챙기는 파견사업주와 일을 시키는 사용자사업주, 두 명의 사장이 존재하는 노동자파견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어느 사업주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만연해있는 불법이었다. '불법 파견'은 메탄을 중독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2)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공급망 책임,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무대응

사고 후 고용노동부는 '삼성, LG가 1차 협력사에 메탄을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3차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원청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지도'를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독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중요한 한 가지,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업체들이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경련은 파견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직접 생산라인에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 불법파견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문제가 된 시점이었다. 메탄을 실명 사고는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공장에서도 일상화된 파견노동의 존재를 알렸다. 다국적기업으로서 삼성전자, LG전자는 환경문제, 소비자권익 등 국제적인 CSR⁵⁾요구에 응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기업 책임의 핵심인 공급망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 왔다.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사고의 고질적 원인이며, 메탄을 실명 사고와 같은 대형 직업성 질환을 일으킨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나서지 않았고, 대기업의 불법파견 활용에 대해서도 침묵하였다. 불법파견을 양성화해달라는 대기업의 요구가 언론에 등장하면 정부는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자유를 위한 노동개혁, 파견법 확대 정책으로 답하는 식이었다.

3) 사고조사의 부재: 사라진 노동자들을 찾는 데 실패하다

정부는 메탄을 사고 이후 2016년 1월 25일부터 작업공정이 유사한 곳으로 보이는 8개의 공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하고 18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공단 지역에 떠돈 '실명 노동자가 더 있다'는 풍문을 당시 노동부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재난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실명만큼 치명적인 사고가 더 있었던 것일까? 어떤 공장들이 언제부터 메탄을 사용했었고, 그런 공정을 거쳐 간 노동자는 몇 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감기인 줄 알고, 파로인 줄 알고 병원에 가 본 노동자는? 시력에 약간의

5)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 <https://ko.wikipedia.org>.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규범이 있고,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규범들에 근거하여 대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정부와 시민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6) 공급망(supply chain):기업이 원재료발굴부터 상품생산, 상품을 유통시키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하청 생산업체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인권,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이라도 왔거나 장애가 남은 이들은 없는 것일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기록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공장을 이미 떠난 노동자들을 찾지 못하는 조사는 의미가 없다. 사고 당시 노동건강연대에는 시력을 잃은 노동자를 알고 있다거나, 공장에서 일한 후 시력이 나빠졌다는 제보가 오기도 하였다. 제보 연락을 받고 노동건강연대가 만나보기도 하였지만 일한 기록이 없고, 일을 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을 알 수가 없었다.

정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불법 파견으로 인해 노동자 추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료 활용, 공단 지역의 병원 이용 현황, 직업병 의심 진료 현황 등을 조사할 방법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4) 가장 낮은 단계의 대응으로서 영세사업장 안전점검 : 성과 확인 불가

6명의 노동자가 쓰러졌을 때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과 유사 공장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등을 명령했다. 88명의 노동자가 일하는데 54명이 파견노동자인 회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데 두지 않고, 유해물질을 다루기에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공장,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업체들이 드러났다. 실명노동자가 더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 다른 공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한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졌으나 노동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메탄올 사고로 일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긴 하였다. 일시적인 개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평소 정부의 근로감독이 없는, 정부의 존재감 없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노동자의 권리침해가 방치되거나 개입이 늦어지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여도 인력소개업소(파견사업주)가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섞여서 일한다. 작업장의 위험, 노동환경에 대하여 소통하지 않는다. 정보를 교류하지 않는다. 여기서 오는 위험이 누적된다. 자신이 느끼는 공장의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해서 공장의 사장(사용사업주)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낮다. 근로감독 자체가 실효성 있게 되지도 않지만,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를 감독하여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화학물질 관리의 문제로 좁혀서 한 대응은 큰 의미가 없었다. 2016년 2월 1일 노동부는 메탄올을 취급하는 전국 3천100여 개의 공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6년 2월 17일, 노동부가 일제점검으로 다녀간 공장에서 노동자가 다시 쓰러졌다. 위 6명의 피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고다.

3. 피해자들의 대응 : 피해자의 증언으로 피해자를 발굴하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발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자신들과 같은 시각장애를 입은 노동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부터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언론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MBC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했다. 이 방송을 본 병원의 간호사가 자신의 병동에 ‘메탄올 중독 환자가 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렇게 피해자 양○○의 존재가 노동건강연대로 연결되었다. 피해자의 증언이 다른 피해자를 찾도록 한 것이다. 이 방송을 시작으로 피해노동자들은 일간지, 라디오, TV 뉴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메탄올 실명 사건을 알리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9일, 실명노동자 김○○씨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서 “삼성과 LG 핸드폰을 만듦에 시력을 잃었다. 파견이 불법인지 메탄올이 위험한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우리의 목숨은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발언하였다. 김○○ 노동자의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경영행태가 다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연대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분간의 발언시간을 얻어 이루어졌다.

4.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고용노동부는 실명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피해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물겠다고 하자 ‘환자 상태를 알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온 것 정도가 다였다. 이 전화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동향파악’이라고 이해했다.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산재보상조차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산재사고, 사망사고도 당사자와 유족이 산재보상 신청서를 쓰고 접수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명 노동자들 역시 산재보상신청, 휴업급여,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급여를 신청해야 했다. 일을 하다 실명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인들의 제보로 메탄올 실명을 뒤늦게 확인한 두 노동자는 더 어려웠다. 몸에서 메탄올은 사라졌는데 그 공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실명 이후 인력 파견업체 이름이 3번이 바뀌었다. 사무실 위치는 같았으나 회사 이름들을 찾아내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같은 파견회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5. 책임자 처벌

1) 기업처벌 결과

법적 처벌은 미미하였다. 노동자들이 일하던 공장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과 사회봉사 등을 받았고, 인력을 파견한 아웃소싱 업체들은「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으로 받은 처벌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표5] 사업주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구분	회사명 (피고인)	범죄사실		최종 판결 결과
사용 사업주	YNETK (석00)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실명·뇌손상 책임 불법 파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BK테크 (안00)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실명·뇌손상 책임 불법 파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벌금 100만원
	덕용ENG (조00)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실명·뇌손상 책임 불법파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파견 사업주	누리잡 (이00)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벌금 100만원
	드림아웃소싱 (원00)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벌금 600만원
	플랜HR (이00)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벌금 400만원
	대성컴퓨터 (갈00)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벌금 200만원
	세울솔루션 (이00)	파견근로자보호법	불법 파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실명 노동자들은 2016년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다. 소송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 8월, 피해노동자들은 승소하였다. 피고 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청 대기업 책임

원청 대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3차, 4차 하청기업에 대하여 원청의 책임을 범으로 묻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공급망에서의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규범이자 기업평가의 핵심적인 기준이다. 공급망 관리는 CSR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가치이다.

삼성은 공급망 내 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갤럭시 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공급망은 '1차 협력업체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의 책임을 묻는 노동건강연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은 3차 협력사로, 직접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님. 안전관리와 모니터링의 대상인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업체와 3차 업체를 계도하도록 하고 있지만, 3차 업체는 2차 업체와의 거래 관계 가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모니터링은 물론 실체 파악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삼성전자는 글로벌 CSR에서 말하는 공급망에 대한 책임범위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공급망관리는 원료의 공급에서부터 생산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과 관계를 맺게 되는 하청기업과 노동자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탄올 실명 사고에 대하여 삼성은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3차 하청업체에 해당하기에 파악이 쉽지 않다고 밝혔으나, 파악이 쉽지 않다고 하여 공급망관리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숨어있는 하청기업들의 노동 인권 현황, 건강과 안전의 현황을 파악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부 책임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6명의 피해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병원에 실려 갈 때마다 공단지역에 알리고 긴급대응을 했어야 한다. 정부는 같은 공장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는 일조차 막지 못하였다. 사고 후 근로감독관이 다녀간 공장에서 다시 메탄올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정부가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불시점검'이 아니다. 사전 예고 후 현장에 간다. 메탄올 중독사고가 일어난 공장에서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사전 연락을 받고 메탄올을 공장옥상에 숨길 수 있었던 이유다. 메탄올 중독사고 이후 해당 공장에 대해서도 예고 후 점검을 나간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성적 행정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료주의를 넘어서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 근로감독의 책임이 있다. 정부는 공단에 만연한 '불법과건'을 방관하였으며,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감독하지도 않았다. 법이 정한 최저선을 감독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아 노동자들이 권리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도록 두었고, 실명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다. 메탄올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 판례를 남기지 않고자 세금을 들여서 대응한 것일까.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중단하였다. 중단하였다고 해서 피해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6. 재발방지책

: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이 없었기에 당시 노동건강연대의 요구로 대신함

당시 노동건강연대는 국가에 대하여 ‘중간착취의 메커니즘을 팔짱끼고 구경만 해온 것’, 기업들의 불법, 탈법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실명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였다. 파견노동자의 직업 관련 사고 경험이 상용직 노동자보다 4배 가깝게 많다⁷⁾는 연구가 이미 있었다. 노동건강연대는 사고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천 역량을 투여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큰 혼란을 주는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가장 위험이 큰 집단이 산재보험 이용을 적게 하고 사회적 보상을 못 받게 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재를 숨기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하였다. 2021년 현재,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요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작은 기업에서의 노동자 사망,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만큼 습관적인 대책이 발표되곤 한다. 메탄올 실명 사고 이후 재발방지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노동정책의 전환, 조직과 예산의 투여 등은 제시된바가 없다.

청년노동자 6인의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사고이다. 대기업들은 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해서 생산공정을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서, 산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외주화를 한다. 외주화하여 일어나는 하청기업에서의 산재 사고가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안전장치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리터당 몇 백 원 차이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한 메탄올이 실명사고를 일으킨 것도 같은 이유이다. 대기업의 다단계하청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고 더 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쁜 상호작용을 하여 실명사고를 일으켰다.

사람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극단적 고용행태인 파견노동은 우리가 아는 위험의 외주화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탄올 실명 사고 이후 인천 공단 지역에서는 ‘시안화수소’ 중독사고, 세일전자 화재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다. 작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일어난 사고는 잊히고 묻힌다. 재발방지 정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아도 영세사업장의 환경적, 재정적 열악함을 이유로 빠져나갈 길은 열려있다.

작은 기업의 노동자들은 제도와 노동조합을 통해 보호받기 어렵다.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이용에 있어서도 대기업노동자들과는 처지가 다르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여 다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메탄올 중독 사고의 직접적인 재발방지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겨울,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2021년 초, 노동자 사망과 대형 사고에 대하여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사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으

7) 임준 등, 국가안전관리전략수립을 위한 직업안전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로서 유효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한다.

7. 피해자에 대한 지원

1) 산재보험부터 사회복지제도까지: 실명노동자 개인과 활동가의 몫

사회적 충격을 준 큰 산재사고라 해도 피해자가 신청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와 회원들은 6명 실명노동자의 발견부터, 산재신청과 휴업급여, 병원 입원 후 요양급여, 장애등급 진단에 이르기까지 주요 조력자였다.

6명의 노동자들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던 청년에서 1급 시각장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시각장애인으로 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동하기 위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와 회원들은 이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를 탐색하고 해당 기관들에 전화를 했다. 한국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재활정책은 시늉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실망스러웠다. 일을 하던 노동자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 제도 안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자체에 연락하였더니 테카코마니 같았다. 산재보험으로 치료하는 노동자들은 지자체나 주민 센터의 서비스대상이 아니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가 시력을 잃은 노동자와 함께 인천시청에 방문하여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인천시 직원은 읽어보라고 인쇄물을 내주었다. 산재로 시각장애를 입은 노동자는 사회복지 영역의 클라이언트가 아닌 것이다. 한 사람의 노동과 그 이후 장애에 대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시에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수시로 걸려오는 실명노동자들의 근황에 대하여 전화를 받고, 보호자가 물어오는 비급여 의료비, 간병, 후유증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찾아보았다. 심리적 위기 상황으로 보이면 찾아가서 만났다. 5명의 실명노동자들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길을 나서고, 장애인택시를 이용했다. 실명노동자들은 점자를 배우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음성서비스 기능으로 검색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의 사회적 삶을 준비해나갔다.

2) 사회적 발언 지원

실명노동자들은 용기를 냈다.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 언론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고 공장의 노동환경과 실명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언론마다 피해자들을 찾고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반복해야 할 때도 최선을 다했다. 피해노동자들은 실명 사고를 접하지 못한 채 메탄올에 손을 적시는 노동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할 때, 시간이 지난 이후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고 싶어할 때까지 지원하고 존중했다. 그리고 실명노동자와 가족들이 연단에 선 국회 기자회견을 비롯해 메탄올 실명 사고를 알리고 정부를 질책하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있다. 한정애 의원실은 메탄올 실명 사고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 함께 했다.

3) 법률적 지원

실명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모든 과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인단이 함께했다.

8. 에필로그 : 재난의 원인은 메탄올이 아니다

이 사건은 발병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개인의 불운으로 묻힐 수도 있었다. 사고 이후 '불법파견' 노동에 대한 정부의 눈감기 전략을 보면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6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이 없었다. '공장 일을 시작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 같다', '작업환경이 안 좋다'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확인할 곳도 알지 못하였다. 6명의 노동자는 '노동건강연대'를 먼저 찾지 않았다. 노동건강연대의 전문가 회원들, 활동가들, 네트워크에 의해 '발견'되었다.

인터넷에는 '아웃소싱' 사무소에 가서 간단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하면 바로 공장으로 갈 수 있다는 체험담이 많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누군가가 생산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처럼 '클린'하게 생산될 것 같은 전자제품도 사람의 맨손을 거친다. '아웃소싱' 업체들은 소개비를 떼고, 상여금도 대신 받아 떼어가는 식으로 '공장 알바' 들이 받아야 할 돈의 일부를 갈취한다. '공장' 알바에 나선 이들은 아웃소싱에서 떼어가는 몫을 인정하고 포기한다. 야근, 밤샘근무, 주야맞교대 등을 마다하지 않아야 돈을 벌 수 있다.

작은 제조업 공장은 정부감독이 미치지 않는다. 무법에 가깝게 파견 노동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실태를 알지 못한다.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일했지만 공장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라는 책임의식이 없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에 불법파견을 이용한다. 실명 사고가 아니었다면 불법 파견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개입 역시 정부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문제가 가시화되는 영역에서만 이루어졌다. 치명적인 독극물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동안 정부가 불시에 감독을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청년 노동자들의 실명은 노동법과 근로감독의 성근 그물망을 빠져나간 위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위험은 과거의 물질을 살려내 노동자들을 공격한 시스템이었다. 이 재난은 메탄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익이 가능하지 않은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에서 이익을 내는 길은 사람을 향한 착취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UN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방한에 맞추어 제출한 의견서

- 노동건강연대 2016. 5. 10.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년 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 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¹⁾²⁾.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³⁾.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 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 만에 병에 걸렸다⁴⁾.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⁵⁾.

1) “ Samsung and LG electronics outsourcing their risk, leading to more methanol poisoning”, the hankyoreh 2016.03.04.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733344.html

2) “Another Samsung Contractor Is At Risk Of Blindness Due To Methanol Poisoning”
<https://stopsamsung.wordpress.com/2016/03/03/another-samsung-contractor-is-at-risk-of-blindness-due-to-methanol-poisoning>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6.02.04.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95&bpage=15>

4), [긴급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 청년 노동자들의 시각 손상 사건이 의미하는 것 자료집(2016.02.18.)
http://laborhealth.or.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1673&sid=8041cae1219cc972de9057f376da127b

5) 상동

2. 문제점

가.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⁶⁾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⁷⁾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⁸⁾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나.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⁹⁾.

6) 법령 위반 사항은 언론에 노출된 내용과 NGO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위반사항이며, 정부가 감독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7) 법령 원문은 링크 참조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0747&lang=ENG

8) 법령 원문은 링크 참조 http://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32278&lang=ENG

9) 각주 1번 기사 참조

다.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¹⁰⁾.

라.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 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 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마.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10) 노컷뉴스 2016년 3월 9일자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559006>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써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년 5월 9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4. 권고 요청

가.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 (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사고 (2016.05.28)

기록 :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1. 사건 개요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55분경 하청업체 소속의 19세 청년노동자가 서울메트로 구의역 9-4 승강장 선로 쪽으로 들어가 승강장 안전문(일명 스크린도어, PSD⁸⁾)을 고치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이하 '구의역 사고'이라 함)가 발생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구의역 사고는 바로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핵심은 비용절감이었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이를 공기업 선진화·정상화로 추켜세웠다.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 경영효율에 대한 걸림돌로 취급하는 정책 기조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산업안전 관련법과 안전매뉴얼은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이윤 극대화를 이유로 '빨리빨리' 속도를 강제하는 성과와 실적 중심의 환경에서 권한 없는 하청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가능할까? 구의역 사건은 안

8) Platform Screen Door



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락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1) 회사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사고 당시 수리 작업에 필요한 보고절차가 생략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장례를 미루고 가족과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는 상황에서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6월 7일 서울시 교통본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유족 대표와 서울메트로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⁹⁾했다.

본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가. 서울특별시 주관하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진상조사단은 노동조합, 서울메트로, 시민단체(시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 참여해 구성한다.

나. 서울메트로는 위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다. 서울메트로는 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서울시

사고 직후 서울시는 하청형태의 노동조건이 문제라고 밝히며 자회사로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발표했다.

자회사는 하청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의 항의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직접고용을 발표했고, 2016년과 17년에 걸쳐 김 군이 수행했던 업무와 그 외 몇 가지 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의 직급체계로 전환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9) 이 합의와 달리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감사실과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가해자의 사과 여부

① 서울시장, 구의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과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저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메트로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우리함께 ‘특권’과 ‘관행’을 끊어나갑시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철저하게, 과감하게 해나갑시다.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제로화 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②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 사과문

사고 당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진술만을 가지 고기자 브리핑 시 그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여 유가족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원인임을 밝힙니다. 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원인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2) 서울메트로 처벌 현황

사고장소	사고일	처벌		
		재판	하형	원형
성수역 승강장	2013년 1월		내사 종결. 단순 번사처리	
강남역 승강장	2015년 8월	2심	사장 벌금 2천만원 법인 벌금 1천만원	무죄
구의역 승강장	2016년 5월	2심	사장 벌금 1천만원 법인 벌금 3천만원	사장 벌금 1천만원

3) 사고조사 보고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2016.08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2016.12월)

구의역 사고 조사보고서(2016.07.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1) 안전업무 정규직화

①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정규직화 했다.

가)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나) 전동차 경정비

다) 차량기지 구내운전

라)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마) 역사운영 업무

②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가) 전동차 정비

나) 궤도보수

2) 정부, 정당

① 각 정당별로 입법추진 의지 표명했고 생명안전업무 제정 법안을 마련했지만 한 개의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② 고용노동부는 스크린도어 점검업무가 있는 모든 지하철을 전수 조사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발부하였다.

③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딱히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④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에 안전감독 강화 지침을 내리고 각종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7. 지원 또는 연대

1) 시민들

고인이 들고 다니던 작업가방 안에서 뜯지도 못한 컵라면과 손가락이 발견되었고 시간에 쫓기며 일해야 하는 서울메트로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의역 9-4 승강장안전문에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돈이 사람을 죽였다.”

시민들은 이 사건은 개인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며 오로지 이윤과 성과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질 중심의 정책과 이를 반영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것임을 직감했다.

2) 대책위 구성 : 53개 시민사회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도시철도노동조합,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연합당, 비없세,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회,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은성PSD지부, 전국지하철철도노조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청년전태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흡수저당 (가나다순)

3)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활동을 지원했다

직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로 노동조건을 개선했다



〈사고당시 김군 소지품〉

8. 언론의 보도 형태

사고 직후 언론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19살 청년이 남기고간 먹지 못한 컵라면과 공구 가방에 뒤엉켜있던 수저와 빼곡한 업무용 메모장을 노조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서울메트로의 노무비 책정과 하청업체의 실제 지급된 급여와의 차이를 부각하고, 안전의 권리는 사지라고 위협

이 외주화된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모아냈다.

매년 김 군 기일에 추모제를 보도를 통해, 청년 하청노동자 실태에 대한 기획기사를 내보기도 했다.

9. 추모 사업 (공공차원 또는 피해자 차원)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가 구의역 김 군 추모주간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고 2017년부터 매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0년 4주기 추모 사업은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

추모사업	일시 / 장소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5월 20일(수)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합동 정당연설회	5월 22일(금) 18시 서울시청 동측광장
추모제	5월 23일(토) 14시 구의역
이야기마당 가족이 일을 하다 죽었다,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과 현재	5월 23일(토) 10시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식	5월 27일(수) 10시 민주노총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5월 27일(수)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토론회 구의역 김 군의 동료는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는 여전히 비정규직인가?	5월 27일(수) 14시 문화공간 온
길거리 음악회	5월 28일(목) 11시 반 광화문 정동길
산재노동자추모 108배와 천도제	5월 28일(목) 16시 광화문 황룡사 9층탑 등 앞
지하철역사 포스터	추모기간 전체 서울지하철 역사
대국민 선전전, 1인시위	추모기간 전체 서울지하철 역사
추모의벽	추모기간 전체 구의역, 성수역, 강남역
김 군 생일기념	5월 29일(금) 14시 구의역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장례식 이후 가족과 대책위가 연락을 공식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가족의 평가는 알 수 없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김군 가족은 피해자 단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김군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평생 온라인에서 누구의 동생으로 규정지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김군으로, 얼굴은 모자이크되어 공개되었다.

다시는(산재피해자가족모임)에서 여러 번 연락을 드렸지만 아직은 함께하지 않고 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13. 현재의 과제

1) 노사가 전화된 안전업무직군 대상 조사 결과 (2020년 9월)

- ① 높은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으로 2인1조 업무가 깨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②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부서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 ③ 우울증 평가 47%의 응답자가 정신건강의학분야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고도 우울과 중등도 우울집단으로 나타났다.
- ④ 김군의 동료들이 직고용 되었지만 공사 내부 정규직과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2) 개선방향

- ① 전사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 시행
가) 정신건강 집중 관리
나) 다투지 금지
- ② 업무 자율성 보장(업무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잔업 후 충분한 휴식 등)
- ③ 조직직제 개편
- ④ 인력충원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 1) 사고 후 가족,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진상조사를 하고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이후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2) 진상조사는 이후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더 안전한 사회, 일터를 위한 진행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업주에게만 맡기게 되는 경우엔 대부분의 권고안이 용두사미 된다.
- 3) 사고관련 기록과 권고안, 이행결과 등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통해 모아지고 시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일자	제목	내용
● 2016년		
05.28.(토)		- 17시 55분경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발생
05.29.~30.		- 서울메트로에서 유족만나서 무마하려다가 유족들이 강력반발 - 서울메트로 회사 1차 기자회견
05.31.(화)	기자회견	- 10:30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규명과 대책 촉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앞) - 시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06.01.(수)		- 서울시 기자회견, 서울메트로 기자회견(사고 책임인정)
06.02.(목)		유족 빈소설치
	기자회견	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통해 입법추진 - 11:00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청 앞)
	면담	- 11:30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면담 (서울시청)
06.03.(금)	토론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본부, 궐도협의회 주최 긴급토론회 개최

06.06.(월)	장례	- 가족장으로 장례식
06.08.(화)	면담	- 14:40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통기획관 면담(서울시청)
	기자 브리핑	- 15:30 면담 결과 기자브리핑 (서울시청 앞)
06.08.(화)	시민추모문화제	- 19:00 청년들의 행진
		- 19:30 구의역 참사 지하철 비정규직 시민추모문화제 "9-4번 승강장" (건대입구역 3번 출구)
06.27.(월)	기자회견	- 11:00 구의역 참사 추모 포스트잇 보전 및 지하철 안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구의역)
06.28.(화)	서명운동	- 18:00 구의역, 왕십리역,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대림역, 강남역 (6개 역사)
07.05.(화)	서명운동	- 18:00 구의역, 왕십리역, 군자역,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시청역, 신도림역, 약수역, 대림역 (10개 역사)
07.07.(목)	토론회	- 10:00 구의역 사고로 본 작업중지권과 안전할 권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30호)
07.12.(화)	서명운동	- 18:00 구의역, 군자역,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시청역, 신도림역, 약수역, 대림역 (9개 역사)
07.16.(토)	서명운동	- 15:00 광화문역
	시민추모문화제	- 17:00 일하다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문화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07.19.(화)	서명운동	- 18:00 왕십리역, 군자역,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시청역, 신도림역, 약수역, 대림역 (8개 역사)
07.26.(화)	서명운동	- 18:00 구의역, 왕십리역, 광화문역, 시청역, 신도림역, 약수역, 대림역 (7개 역사)
08.02.(화)	기자회견	- 10:30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
08.12.(금)	시민추모문화제	- 20:00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추모제 (광화문 광장)
08.15.(일)	서명운동	- 11:00 대학로
08.25.(목)	보고회	- 15:00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시민보고회
08.26.(금)	위령표 부착	- 10:30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 위령표 부착
12.20.(화)	보고회	- 14:00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시민보고회
이후		-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 이행에 대한 점검

CJ E&M tvN '혼술남녀' 조연출 故이한빛PD 사망사건 (2016.10.26)

기록 :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1. 사건 개요

故이한빛PD는 CJ E&M tvN의 <혼술남녀> 드라마 조연출로 일하다가 2016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한빛PD는 대학시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연대하고 용산참사, 기륭전자, KTX승무원 부당해고, 세월호 참사 등 투쟁 현장에 함께 하며 현실에 대해 고민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자 CJ E&M의 tvN에 드라마PD로 입사하였다. 인턴과정을 거친 후 2016. 4. 18.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배치되었으나 6개월 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사측과 만났으나 사측은 이한빛PD의 근태가 불량하였고, 조직 내 불화는 심각하지 않았으며 이한빛PD의 죽음과 이한빛PD의 업무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이가 근무 강도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것도 아니고,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가족대책모임은 이한빛PD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 사전제작 형태로 촬영되던 중 갑작스럽게 촬영 스태프들이 부당해고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혼술남녀> 제작환경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가 일상적인 드라마 제작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 나이가 이한빛PD의 핸드폰 수발신 내역과 업무 메신저의 내용, 같이 작업하였던 관계자들의 증언들은 허술한 제작환경과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이한빛PD에게 가해진 언어폭력과 괴롭힘 역시 심각했음을 증명해주었다.

이한빛PD는 본인은 정규직 PD로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방송노동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방송제작 현장의 90%가 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방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상급자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 등 탄압을 받아 절망 속에서 외롭게 갈등하다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대책모임과 협의 과정에서 사측은 끝까지 책임이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회피했다. 더 이상 사측의 진실을 기대할 수 없었던 가족대책모임은 사망사건이 나고 6개월 후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36개 단체가 참여한 <CJ E&M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싸움을 시작하였다. 이한빛PD 사망사건을 기간담회를 통해 처음 공론화했다. (2017. 4. 18.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대책위는 이한빛PD의 사망에 대하여 사측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한빛PD의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2의 이한빛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6월 14일 사건 발생 8개월이 되어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합의하고 사측 대표이사과 임원들이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였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이한빛PD는 2016. 10. 21. 01:31경 업무지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핸드폰 메신저로 회신하였다. 마지막 촬영일인 2016. 10. 21. 오후 6시경에 집을 나간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실종되었다. 사측은 2016. 10. 24. (월) 18:00경 이한빛PD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한빛PD의 상황은 2016. 10. 25. 무단결근으로 사측 담당 국장에게 보고되었다. 이한빛PD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 회수를 위해 이한빛PD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취해지면서 가족들은 실종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내고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 2016. 10. 26. 이한빛PD의 아버지가 행적을 추적하던 중에 오전 11시경에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을 확인하였다.

이한빛PD(1989년 1월 24일 출생, 당시 27세)는 사망하였고, 유가족으로 아버지(이용관), 어머니(김혜영), 동생(이한솔)이 있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유가족은 이한빛PD의 죽음은 유서와 대책위의 분석자료를 통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비정규직 방송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음으로 향거한 사회적 참사이며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타살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한빛PD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회사와 협의하고자 했다.

유가족은 박근혜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적 조건에서 사법적 처리를 하면 오히려 사측에 면죄부만 주고 단순한 자살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가족과 대책위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중지시키고 자체 진상조사

와 투쟁으로 사망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대책을 회사와 직접 상대하기로 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유가족은 이한빛PD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유지를 살리기 위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회사 측에 기부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유가족 보상금 전액과 기부금을 기본자금으로 2018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창립하였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진상규명을 위한 가족대책팀의 사건 처리

이한빛PD의 사망 이후 '가칭' 한빛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명예회복)을 위한 가족대책모임(이하 '가족대책모임')이 구성되었다. 가족대책모임은 유가족, 정** 변호사(민변 노동위, 유가족 대리인), 청년유니온 집행부, 이**(故이한빛PD 친구) 등이 함께 했다.

'가족대책모임'은 이한빛PD 사망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측과 협의 및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가족과 '가족대책모임'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측이 진정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측과 수차례 질의, 회신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1)유가족과의 합동조사(또는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는 거부하고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고집하면서 유가족 측에 자료 제출만을 재차 요구하였고, (2) 근무강도 및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내역 등) 등은 공개하지 않고 (3)이한빛PD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 인사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이한빛PD의 근무태만 등을 강조하였다. 유가족과 가족대책모임은 사측이 진상규명 및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고, 사측의 자체 조사의 구성과 그 내용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사측과의 협의는 2017년 2월 27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종결하였다.

2) CJ E&M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사망사건대책위원회 구성과 사건 처리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족대책모임은 36개 단체가 참여하는 'CJ E&M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7년 4월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한빛PD 사망사건을 공론화하면서 투쟁을 시작하였다. 회사의 태도는 대책위원회가 사건을 공론화시킨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는 대책위의 기자간담회 직후에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아닌 공적 기관의 수사를 제시했다. 대책위원회는 각계 성명과 캠페인, 회사 앞 규탄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상암동 현수막 행동, 이한빛 어

머니와의 대화 및 간담회, 이한빛 추모문화제 등의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적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 이한빛PD 죽음의 사회적 의미와 대책위원회의 활동은 현장종사자, 청년학생층, 네티즌, 드라마 시청자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향을 형성했다. CJ E&M은 5월 2주경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 논의를 대책위에 요청했다. 5월 19일 공식 협의를 시작하여 회사는 이한빛PD 사망의 책임성과 고인의 사망 이후 지난 6개월의 과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대책위와의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후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2017년 6월 13일 합의 서명하였다.

2017년 6월 14일 공개적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 해결의 마무리를 지었다.

3) 이한빛PD 사망 원인과 진상 규명

tvN 드라마 '혼술남녀' 제작팀 정규직은 책임프로듀서, 메인 연출 2명, 조연출 2명이다. 이한빛PD는 정규직 신입 조연출로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80%이상의 조연출과 스태프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구성되었다. 이한빛PD는 의상, 소품, 식사 등 촬영준비, 데이터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미술팀 담당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가 있었으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한빛PD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혼술남녀〉는 전체 16회 중 절반인 8회분을 사전 촬영 진행할 계획이었다(첫 방송일: 2016. 9. 5.) 전체촬영분의 1/4이 제작되어 있던 2016. 8. 12. 촬영·조명·장비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태프가 교체되고 2016. 8. 27. 촬영이 재개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제작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혼술남녀〉의 제작환경 및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혼술남녀〉 제작팀은 모두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부여 등 심각한 노동강도에 시달렸다.

이한빛PD는 말단 관리자로서 이러한 노동환경에서도 비정규직 스태프들을 노동착취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에 고민하고 싸우다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놓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이한빛 유서 중에서 발췌)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유가족과 대책위는 회사의 공개 사과를 받고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합의 이후, 이행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어느 정도는 이행되고 있으나, 방송미디어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이행되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사측 사과문과 재발방지대책〉

[CJ E&M] 고 이한빛PD 유가족과 대책위에 드리는 글 (5월 21일)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의 슬픔과 절망감에 비할 수는 없지만, 회사 및 동료들도 아직까지 슬픔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의 면담 과정에서 유가족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하고 아픔을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작환경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 한 점 반성합니다. 또 우리만의 노력으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생각한 점도 다시 반성합니다. 지난주 2차례에 걸친 유가족 측과의 대화를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 근무환경 및 제작시스템의 개선 등 문제해결과 관련한 유가족 분들과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촉구하셨던 많은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유가족 분들과 대책위와의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논의를 계기로 방송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제작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이한빛PD와 같은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J E&M] 고 이한빛PD 유가족과 대책위에 드리는 사과의 글 (6월 13일)

지난 5월 22일 기점으로 재개된 CJ E&M tvN 혼술남녀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유가족)와 CJ E&M간의 대화가 6월 14일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CJ E&M 김성수 대표이사과 임직원이 참석해 진행된 공식 간담회에서 회사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CJ E&M은 이한빛PD의 사망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관행이라 얘기됐던 방송제작환경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인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식과 기억할 수 있는 사내 공간을 만들고 기금조성을 후원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카메라 뒤의 노동을 기억하며 방송 제작환경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약속하고 적정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합리적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등 9가지 약속을 꼭 실천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후에 대책위와 유가족은 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가기로 회사와 협의했습니다. 향후에 CJ E&M의 변화의 계기가 방송현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현장종사자들과 대책위의 활동을 계획해갈 예정입니다. 방송 현장의 노동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제작 과정에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의미 있는 개선들이 현장에 스며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시기 동안 이한빛PD 사망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첨

故 이한빛PD 명예회복 및 방송 제작환경, 문화 개선 약속

□ 고인의 명예회복 관련 실행 약속

1. 사내 인사위원회 통한 책임자 징계 조치(6월내)
2.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회사차원의 추모식 진행
3. 고인을 추모 할 수 있는 사내 공간 마련
 - 사내 개인 편집실 중, 고인을 추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17년 內)
4. 고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기금 조성에 관련된 재정적 후원

□ 제작 환경 개선 약속(사내/외부)

1. 문화, 복지, 인프라 개선을 통한 선진 업무 환경 구축
 -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통한, '일하는 방식' 의 정의/실천
 - 제작 기반 시설 및 Infra 적정 규모 확보 등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2. 방송 제작 인력 처우 개선
 - 주니어 제작 인력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 프리랜서 AD 및 작가 보조(막내작가) 용역료 인상/제작비 규정상에 명시
 - 적정 근로 시간 및 휴식시간 등 포괄적 원칙 수립
 - 프로그램별 스태프 인력 들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
 - 외주사와 스태프간 계약시, 합리적 표준 근로 계약서 마련 및 권고
 - 4대 보험 가입, 근로/휴식 시간 준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안전 장치 등 포함
 - 임금 지급 여부 관리 감독 강화(E&M↔외주제작사)
 - 내/외부 근무 환경에 대한 부당한 처우(휘슬제도)/고충 처리를 위한 창구 마련
 - 외주 스태프 인력 대상, 프로그램 책임CP 명함 배포를 통한 Hot-Line
 - 제작현장의 소통과 구성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스태프협의체의 상시 운영 장려

※추후 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회사, 유가족, 대책위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 마련

7. 지원 또는 연대

가족대책모임과 협의 과정에서 사측은 끝까지 사망의 책임이 사측에 없고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대책모임은 사망사건이 나고 6개월이 지나 공개적으로 36개 단체가 참여한 <CJ E&M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싸움을 시작하였다(2017. 4. 18.).

대책위는 이한빛PD의 사망에 대하여 사측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한빛PD의 죽음과 관련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2의 이한빛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싸웠다. 2017년 6월 14일 사건 발생 8개월이 되어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합의하고 사측 대표이사과 임원들이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였다.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연구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당 학생회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중앙대 민주동문회, (사)함께배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8. 언론의 보도 형태

대부분의 자살 사건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단순 자살로 처리되어 언론 보도가 오히려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한다. 이한빛 사망사건 역시 '이한빛PD 자살'이라는 단순 자살로 보도가 나갔다. 가족대책모임은 다음과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이미 네티즌과 인터넷 뉴스로 전파되어 완전한 차단은 어려웠다.

9. 추모 사업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창립

이한빛PD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 유가족은, 아빠와 동생은 장례를 치르면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한빛이 못 다한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 일치했다.

대책위를 꾸려 싸우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고 공식 사과를 받으며,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에

다 보상금만큼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한빛의 유지를 이어가는 법인을 만들겠다는 가족의 의지를 사측에서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2018년 법인 등록을 마치자 법인 통장으로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했다.

유족 보상금 전액과 기부금을 기본자금으로 해서 2018년 1월 24일 서울시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유가족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창립을 선언하였다.

이한빛 죽음 이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창립된 후,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도 조직화를 시작하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출범하고 뒤를 이어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탄생하였다. 그 외에도 언론노조 대구 MBC 다운분회 등 조직화와 투쟁을 통한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은 유가족 한빛 아버지와 동생 한솔이가 나서서 주도하고 발로 뛰었다. 현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미디어신문고를 통해 방송미디어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고 개선하는 활동, 노동법 교육과 현장 노동자 모임을 하고 있다. 방송제작 현장으로 직접 커피차와 함께 찾아가 초장시간 노동문제 해결과 노동인권을 제기하는 미디어 세이프 캠페인 활동은 현장 노동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MBC 비정규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대전 MBC 성차별 채용, 대구 MBC 다운분회, 이재학 PD 사망 사건, 보조출연자 두자매 성폭력 사건 등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언제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앞장서서 주도해왔다. 이외도 아동청소년연예인 노동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팝업'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안전단체들과 연대하여 방송산업노동안전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2018년 4월 31일 상암동 DMC서울산학협력연구센터 6층 604호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를 만들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상암동 미디어 노동자들의 쉼터와 간단한 작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송 제작현장에서도 이한빛PD의 죽음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현장의 수많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방송노동자들은 고마워하고 있다.

2) 추모 사업

이한빛PD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가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유가족은 슬픔 속에서도 추모 사업을 통해 희망을 찾고 있다. 매년 10월 추모제를 통해 이한빛PD를 기억하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방송노동현장의 개선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는 이한빛PD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항거한 죽음의 의미를 인정하여 2020년 민족민주열사 추모제에 이한빛PD를 민족민주열사로 봉안하였다. 한빛의 뜻을 이어가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020년 시민인권상(서울지방변호사회), 미디어인권상(미디어공공성포럼), 2021년 열사정신계승상(추모연대)을 받아 이한빛PD의 정신을 추모하고 이어가는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이한빛PD의 죽음 이후 대책위 활동과 그 이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은 유가족에게 '기억과 희망'이라는 생존의 이유가 되었다.

방송미디어 노동환경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나 내용이 매우 미약하다. 그래서 방송노동자의 산재사고나 사망사건도 줄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20년 2월 4일 이재학PD가 14년간 일하던 방송국에서 부당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스스로 목숨을 던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다.

더구나 2020년 12월 7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단식투쟁까지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는데도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고통은 유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유가족은 평생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업보를 감당해야 한다. 이한빛PD의 유가족도 진공의 시간을 견디며 살고 있다.

이한빛PD의 기억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에 매진해오고 있다. 현재 이한빛PD 아버지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이사장, 동생은 이사로서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활동에 참가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투쟁하였으며 산재와 재난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유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고 움츠리게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가족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2중 3중의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직장 괴롭힘, 과로자살 등 구조적인 문제에 항거한 죽음마저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유가족은 진상규명에 대해 용기를 내지 못한다.

13. 현재의 과제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과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tvN 조연출로 방송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다.

방송 산업의 노동자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 및 미디어 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및 낮은 방송 제작 환경 개선에 더욱 정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방송미디어노동자들의 든든한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지속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산재와 재난참사가 없는 사회 만들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모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등과 같은 연대 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산재와 재난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고하게 연대해야 할 것이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기업의 이윤이나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재계와 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와 국회마저도 노골적으로 재계와 기업의 편에 서거나 재계와 기업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다수 국회의원은 노동과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직 멀리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는 기업의 이윤이나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업과 재계의 눈치 보지 말고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산재나 재난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는 일은 너무나 참혹하고, 그 유가족은 평생 동안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가족을 떠나보내기 전에는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먼 세계이며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 꿈에도 상

상하지 못했다. 1년에 2,000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고, 수만 명이 유가족/피해자가 되는 산재사망을 1위, 자살률 1위 국가에서 언제 어디서 내 가족이 또는 지인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일터나 사회에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고 다시는 사람이 사회적 참사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자살 사건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관습적인 시각으로 유가족을 힘들게 하고 움츠리게 한다. 정부 기관, 사법당국, 회사 등도 자살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사망사건 진상규명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진상 규명, 산재 처리, 보험 처리 등 모든 부분에서 유가족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더욱 가중된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라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유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에 좌절하거나 항거해서 또는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계속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유가족이나 피해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조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관련된 단체나 조직에 의뢰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기업이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6년

- 10.21. tvN 드라마 '훈술남녀'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실종
- 10.25. 회사 측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실종 인지한 가족의 실종 신고
- 10.26. 용산구 한 호텔에서 사망(가족의 탐문 과정에서 발견)
- 11.09.故이한빛PD 사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족대책위원회 구성
- 11.09. 2017년 3월까지 사측과 협의 및 자체 진상 조사를 진행
- 11.02. 유가족, 사측과 1차 면담
- 11.18. 질의서(진상규명 질문지) 사측에 발송
- 12.01. 유가족 대리인(변호사), 질의서 관련하여 사측과 2차 면담 진행
- 12.07. 1차 질의서(질문지) 사측에 발송
- 12.27. 자체 진상조사 후 1차 회신

12.30. 드라마 제작 환경 종사 스태프 면접조사

● 2017년

- 01.03. 2차 질의서(추가질문지) 사측에 발송
- 01.25. 사측, 2차질의서에 대한 회신
- 02.02.~03. 故이한빛PD를 아는 지인 및 드라마 제작 스태프 면접조사
- 02.16. 3차 질의서(출퇴근 내역 및 취업규칙 등) 발송
- 02.27. 유가족과 대책모임 사측 3차 면담 후 결렬
- 03월~04월 ‘故이한빛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응전략모임’ 가족대책위 사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규정 및 대응 계획 세움
- 04.18.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 결성(36개 단체 참여)
- 04.18. tvN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 : 사건조사 발표 기자간담회
- 04.23. tvN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 : CJ E&M 사과 및 재발방지책 촉구 기자회견
- 04.24. 故이한빛PD 김혜영 어머니와의 대화(70여명 참석)
- 04.28. 故이한빛PD 시민추모문화제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상암동 CJ E&M 앞 400여명 참석)
- 04.29. 23차 범국민촛불문화제 이한빛PD 어머니 김혜영 발언
- 04.30. 노동절전야제 청년학생권리선언집회 이한빛PD 어머니 김혜영 발언
- 04.19.~05.19. CJ E&M 앞 1인 시위(총 20회, 31명 참여)
- 05.01. 127주년 노동절 청년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당사자 연대발언
- 05.01. 노동절 플래시몹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대학로)
- 05.04. 드라마 방송촬영 현장 노동실태와 폭력에 대한 제보센터 분석결과 발표
- 05.30. 미디어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토론회
- 06.21. [PD저널 좌담회] 이한빛PD 사망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실천할 과제
- 04.19.~05.19. CJ E&M 앞 1인 시위(총 20회, 31명 참여)
- 05. 둘째 주 CJ E&M은 대책위 측에 문제해결을 위한 공식 논의 요청
- 05.19. 유가족과 대책위 CJ E&M측과 공식 면담 후 협의 재개 합의
- 05.22.~06.13.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협상
- 06.13.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 최종 합의
- 06.14. CJ E&M 대표이사와 임원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
- 07월~12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창립 준비 및 법인 등록

● 2018년

- 01.24.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창립
- 04.31.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개소(상암동 DMC서울산학협력센터 604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2017.03.31)

기록 : 허영주

(실종 선원 가족,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 사건 개요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5분경(현지시각 기준) 쾌청한 날씨의 대낮에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2017년 3월 31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날이었고,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에 도착하던 날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온 국민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물오로 올라온 세월호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는 대한민국 언론과 시민사회의 눈 밖으로 멀어졌다.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회사, 폴라리스 쉬핑의 담당자(공무감독)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에 “선박 2번 포트에서 침수 후 기울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선박 침몰 시 자동으로 발신되는 위성 조난 신호가 오후 1시 25분에 접수되었다. 그래서 스텔라데이지호는 5분 만에 급격히 침몰했다고 알려졌다.

스텔라데이지호는 1993년에 유조선으로 만들어져 15년간 운항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 정책으로 폐선하려던 선박이었다.¹⁰⁾ 한국의 선박회사들은 폐선되어야 할 단일선체 유조선을 고철 값에 사

10) 선체 외관을 한 겹으로 만든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은 사고가 날 때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을 퇴출하고 선체 외관이 두 겹인 이중선체(Double Hull) 유조선으로 바뀌어갔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선박회사들(폴라리스 쉬핑, 장금상선, 시도상선)이 쓸모없어진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을 싼값에 사들여 개조해서 화물선

서 중국에서 화물선으로 개조했다. 세계적인 해양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확대만을 염두에 둔 개조화물선이 운항하도록 승인해주었다. 폴라리스 쉬핑은 개조 당시 선체의 모든 강판과 중요 부품을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스텔라데이지호는 개조 후 8년 만에 남대서양바닷속으로 침몰되었다.

개조된 스텔라데이지호는 포스코와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2012년 한국 광양항에서 부두접촉사고로 선체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되어 포스코와의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폴라리스 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를 다시 중국의 조선소에 보내어 수리한 후 브라질 발레(VALE)사와의 계약에 투입했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전후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 등 다른 개조화물선에도 선체 침수, 상갑판 갈라짐·뒤틀립 등 연이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조선을 개조한 화물선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폴라리스 쉬핑은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 하의 정부도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만 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은 2017년 4월 29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려 노력했고, 이날 세월호 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에게 광화문4·16광장에 설치되었던 세월호 천막 중 아빠 방을 내주었다. 폴라리스 쉬핑 본사 앞과 청와대 인근에서 길거리 농성을 하던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은 광화문4·16광장을 근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문’을 보냈고, 언론은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2017년 7월 20일, 시민사회는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때부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도 가족들의 모임을 가족대책위원회로 명명했다. 그 후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노력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선박 침몰로 사람이 실종되거나 죽어도 1~2개월이면 정리되고 선박회사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정상 영업하는 것이 해양계의 관례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고, 그 결과 30척의 유조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화물선으로 개조되었다.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적인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해수색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었고, 국내 해양계는 심해수색에 대한 경험도, 전문가도, 장비도 없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는 해외의 심해수색 성공 사례들을 찾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선례가 없어서 심해수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에서 공론화되면 심해수색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가 끈질기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심해수색의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국회는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2018.4.19.)’를 개최했다. 국회 공청회 이후에도 많은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침몰 선박을 심해수색하기 위한 예비비 53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8.8.14 제35회 국무회의)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명확한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선원 생사 확인을 위해 심해수색을 실시했다. 심해수색 시작 3일 만에 3,500m 바닷속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선체를 발견했고, 블랙박스(VDR) 캡슐을 수거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침몰 선체 주변 해저 면에서 실종선원 유해 1구를 발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당시 발견된 유해를 지금까지 수습하지 않고 있다.

심해수색 종료 이후 국회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2019.7.23.)’를 개최하여 ‘1차 심해수색이 미흡했으며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2차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100억 원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고,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17인 공동주최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2020.9.25.)’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존하는 과학적 기법과 장비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유해를 수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국회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지적하며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 사고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예산 편성에 강경히 반대했다. 결국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은 누락되었다.

현재까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선박의 등록 국가였던 마셜제도가 작성한 특별 조사보고서(2019.4.19.)에 따르면, ‘핵심원인은 2번 평형수 탱크에서 시작된 구조손상으로, 선체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추정하고 있다.

국내 선박회사가 운항 중인 개조화물선은 지금도 약 20여 척 남아있고, 개조화물선의 침수, 화재, 균열 등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전 세계 개조화물선 52척 중 첫 침몰 사례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개조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2차 심해수색이 필수적이다. 비록 국내에는 선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심해수색을 통해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영국의 화물선 '더비셔호' 사례가 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로 실종된 인원은 총 22명이다. (한국인 선원 8명, 필리핀인 선원 14명) 필리핀인 선원 2명은 침몰 이전에 배에서 뛰어내려 생존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 당시 26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있었다. 그러나 폴라리스 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보혐금으로 446억 원을 수령하여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3. 관계 당국(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담당 부서 또는 책임 있는 회사)의 대응(구조, 수습, 복구, 지원 등)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시각은 한국시각으로 2017년 3월 31일 23시 25분이다. 그러나 폴라리스 쉬핑은 침몰 이후 12시간이 지나서야¹¹⁾ 해경에 처음 신고했고, 가족들에게는 16시간이나 지나서야¹²⁾ 연락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는 침몰상황을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배가 침수되고 있다'라고 거짓 설명을 했다.

폴라리스 쉬핑 본사는 서울에 있다. 그런데 폴라리스 쉬핑은 부산지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족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침몰 이후 37시간이 지나서야 첫 브리핑을 실시(4월 2일 오후 1시)했으나, 이때도 폴라리스 쉬핑 대표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부산 상황실에는 일주일이나 되도록 해외재난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11) 2017년 4월 1일 11시 9분

12) 2017년 4월 1일 16시경

공무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수시로 포털 검색을 하며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수색상황을 파악해야만 했다.

정부는 폴라리스 쉬핑으로부터 침몰 보고를 받은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올리고 언론대응자료 배포를 하면서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냈다. 심지어 가족이 주무부처인 외교부로 직접 찾아가 물어볼 때까지 구명보트가 몇 척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확인해달라는 가족에게 “그런 건 가족이 확인해서 우리(외교부)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도리어 나무랐고, 가족 때문에 실시간 대응에 방해가 된다면 집으로 돌려보냈다.

폴라리스 쉬핑은 침몰 5일 만에 가족들에게 개별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기 시작했다. 김OO 대표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해 대출 연장이 불가하게 되어 회사가 3주 후에 부도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은 최대한 가족들을 챙겨주고 싶으니 빨리 합의를 하자면서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렸다.

실종 선원들을 수색할 생각은 없고 합의만을 종용하는 폴라리스 쉬핑에 크게 실망한 가족들은 부산을 떠나 서울로 와서 정부 주도의 책임 있는 브리핑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4월 7일, 가족들은 외교부 앞으로 찾아가 2시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울며 정부로부터 수색상황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어렵게 외교부 차관을 만나게 된 가족들은 정부 주도의 브리핑을 실시할 것, 외교부 청사 내에 상황실을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정부 주도의 브리핑 요구에 대해서만 승낙했다.

다음날(4월 8일)부터는 폴라리스 쉬핑 본사 내에 설치된 상황실에서 외교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나 폴라리스 쉬핑은 침몰 이후 1개월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상황실을 폐쇄하고 가족들을 모두 내쫓아버렸다. 이후 가족들은 폴라리스 쉬핑 본사 앞에서 길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폴라리스 쉬핑 김OO 대표는 처음에는 실종 선원들을 끝까지 수색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영업이익’을 이유로 침몰 현장에서 수색에 참여하던 자사 선박들을 철수시켰다. 스텔라데이지호의 구명벌이 2척이나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출한 선원들이 구명벌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수색은 2주 만에 조기 종료되었다.

2017.5.1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이 되면서 다시 수색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수색선 1척으로 주먹구구식의 생색내기 수색을 일주일 진행한 후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 후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가 나서면서 201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스

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위한 예비비가 통과되고, 2019년 2월 1차 심해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흡한 준비 과정으로 인해 1차 심해수색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국회는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과 현존하는 과학적 해양 기술로 2차 심해수색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의 사고에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면서 다시 선례의 문제를 내세우며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침몰 참사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폴라리스 쉬핑은 침몰 참사 발생 후 1개월간 회사 건물 내에 상황실(브리핑 공간)과 숙식 제공을 했지만, 1개월이 지나자 상황실을 강제 폐쇄했고, 숙식 제공도 중단했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가해자의 사과 여부: 폴라리스 쉬핑은 2017년 4월 2일 오후 1시에 가족들을 부산지사에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지만, 대표는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밤 8시가 넘어서 김OO 대표가 가족들 앞에 나타나 사과했다. 하지만 김OO 대표는 2017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을 날씨 탓이라고 말을 바꾸며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2) 검찰: 현재까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관련하여 전혀 기소하지 않았다.¹³⁾

3) 정부의 조사결과

① 주무부처(외교부): 현재까지 발표한 바 없다. 침몰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심해수색은 실패했으나, 국가의 의지 부족으로 2차 심해수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②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 청구(2020.2.6.)했지만, 현재까지 1년이 지나도록 심판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③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제해사기구(IMO) 보고용 특별조사보고서를 여전히 작성 중이라고 한다.¹⁴⁾

13) 현재 진행 중인 폴라리스 쉬핑 등에 대한 공판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되기 이전에 선박안전법상 결함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공판이다.

14) 지금까지의 선박사고 관련 보고서는 대부분 1년 안에 마무리되었다.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침몰 4년이 지나도록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흔치 않다.



④ 마셜제도: 선박의 등록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IMO) 보고용 특별조사보고서 발표(2019년 4월)

* 스텔라데이호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으로 마셜제도에 등록된 선박

4) 당국, 조사위, 피해자 등이 작성한 백서: 미발간

5) 진상조사를 방해한 요소들

스텔라데이호의 침몰원인 규명이 이렇게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선원의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보상금으로 사고뒤처리를 빨리 끝내버리려는 해양업계의 관행을 들 수 있다.

스텔라데이호의 침몰이 개조한 화물선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런 배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운항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해오던 해운회사들의 경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1) 개조화물선 침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2) 스텔라데이호 침몰 3개월 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동종 개조화물선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이 실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전수 점검이 아니었고, 애초 계획과는 다른 선박을 대신 점검하는 등, 점검 방식과 점검 대상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3) 선장비상대응매뉴얼 발간(2019년 6월)

선장비상대응매뉴얼이 직접적인 재발방지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22명의 선원이 실종된 스텔라데이호 침몰 참사로 인해 처음으로 매뉴얼이 발간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해양수산부, 스텔라데이호 침몰 이후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정(18년도)

② 선장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방안 연구용역 시행(2018년 3월~12월)

③ 선장비상대응매뉴얼 초안 작성(2018년 12월) 후 전문가 자문 및 선사의 의견 등을 수렴

④ 선장비상대응매뉴얼 발간(2019년 6월)

7. 지원 또는 연대

대형 선박회사들은 선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하선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폴라리스쉬핑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선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운용했다. 선원들은 배를 타는 기간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하선 기간에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노동환경이 매우 취약했지만 선원들의 권리를 주장할 노

동조합은 없었다. 그래서 항해 중 배가 침몰되어 선원들이 실종된 상황이었지만 피해 가족들을 지원 또는 연대할 해양계의 단체는 없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당시에 생존자 수색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먼저 연락할 경향이 없었다. 그리고 폴라리스 쉬핑과 정부는 가족들을 상황실에 모아놓고 개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2017년 4월 29일, 가족들은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뉴스를 보고 광화문광장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내부에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은 그날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1)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의 연대

2017년 4월 29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은 마지막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북측광장에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낮 2시부터 찾아갔다.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어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주선으로 세월호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길거리 농성을 하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에게 광화문4.16광장의 세월호 천막(아빠 방)을 내어주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은 2017년 6월 3일부터 광화문 4.16광장 내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방을 근거지로 피케팅과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의 지원

2017년 5월 1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 주최로 처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가족들은 기자회견 시 앰프와 현수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때 4.16연대가 나서서 기자회견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주는 등 지원을 시작했다. 2017년 7월 20일, 4.16연대를 중심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

3)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의 지원

416연대 소개로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소속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는 2017년 5월 29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스텔라데이지호 피해 가족들에게 법률자문을 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2017년 3월 31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날이었고,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

에 도착하던 날이었다. 당시 언론은 차기 대통령 선거와 물으로 올라온 세월호에 집중되었다.

2017년 4월 9일, 美 해상초계기가 첫 수색 중 구명벌을 발견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MBC, 부산일보, 부산연합뉴스는 '구명벌 추정물체는 기름띠로 확인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 보도는 스텔라데이지호 구명벌 수색 종료의 근거가 되었고, 언론 보도 이후 3일 만에 실질적인 수색이 종료되었다.

추후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니 보도 당시 취재원은 폴라리스 쉬핑 전략기획팀 직원 뿐이었다. 당시 기자들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연락되지 않아 폴라리스 쉬핑 직원의 확인만으로 보도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진위확인 없이 기사를 내보낸 언론의 오보로 인하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은 중단되었다.

9. 추모 사업 (공공차원 또는 피해자 차원)

스텔라데이지호 선원들은 모두 실종 상태이다. 가족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실종 선원들을 추모할 수도 없다. 이등항해사 허재용의 어머니는 실종자가족이 아니라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되었을 때 마땅히 외교부가 범정부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부처 내에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구성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대응이 더욱 불가능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사회와 재난참사피해자들의 연대의 힘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진실규명도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1) 피해자단체

2017년 7월, 416연대 회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때부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에는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를 통합하여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로 재편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승렬, 허영주 / 부대표 : 허경주 / 정책위원 : 송경용, 박래군 /

대외협력위원 : 나승구 / 홍보위원 : 김디모데

2) 피해자의 현재 상황

올해 73세가 된 스텔라데이지호 이등항해사 허재용의 어머니는 침몰 참사 이후 지금까지 각종 소음과 극우파들의 시위로 가득 찬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서명운동과 피케팅을 이어왔다. 허재용의 어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 등으로 이명이 심해져 잘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매일 많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자식을 데려와 유가족이 되고 싶은 처절한 심정으로 지금도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1) 폴라리스 쉬핑은 직원들을 동원하여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상대가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의 동료들이라는 것이 피해자 가족 으로서는 심정적으로 매우 괴롭다.

2) 선원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의 관심은 특히 저조했다.

3) 해양계 특성, 선원업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전문정보 습득이 어렵고 제한된 것도 일반인인 실종자 가족들에게

매우 어려운 점이다.

4)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전술하였듯이 사건 초기에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특히 참사 초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폴라리스 쉬핑과 아무런 정보와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들만 남겨져 있던 상황 속에서, 회사는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각종 증거인멸과 사건 덮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5) 당장 닥친 슬픔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나 시민단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가족들끼리 고민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선사와 정부, 언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한껏 예민해져 있는 각 가족간에 생기는 갈등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6)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이다.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민간 선사만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개조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게 승인해 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다.

13. 현재의 과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으나,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심해수색을 통해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영국의 화물선 '더비셔호'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시 해저 면에서 유해 1구를 발견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수습하지 않았다. 또한 조타실이 파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생존 선원의 진술에 따르면 침몰 직전 조타실에는 11명의 선원이 있었고, 해양과학 전문가들은 현재 조타실 내부에 선원 유해 및 블랙박스 본체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현존하는 과학기술로 조타실에 있는 유해수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스텔라데이지호는 전 세계 52척 있었던 유조선을 개조한 화물선 중 최초의 침몰 사례이다. 또한 같은 개조화물선

중 침수 및 선체변형 등 사고가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개조화물선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면 이를 명확히 밝혀내야 수많은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 침몰사례인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통해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발방지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시 발견한 유해를 현재까지 수습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외교부는 심해수색 계약을 체결하기 50일 전부터 유해발견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해수습 조항을 심해수색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루빨리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고, 조타실에 있을 11명의 선원 유해도 가족들 품으로 모셔 와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선원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게 일어난 참사이다 보니 일반 국민의 관심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스텔라데이 지호 침몰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재해 또는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경영주의 지나친 탐욕과 안전 경시, 그리고 국가의 방임이 만나는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참사이다. 참사가 일어난 장소적 배경이 바다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나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인재(人災) 이다.

국민이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은 참사는 선원 가족만이 겪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발생 장소와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언제든지 재난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 국민이 눈여겨보아야 언론에 노출되고, 국회도 관심을 갖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바꾸기 위한 시작은 일반 국민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누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갑작스럽게 겪게 되면 멘탈이 붕괴되고 넋을 놓게 된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되고 믿을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일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와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피해자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들이다. 혼자만의 싸움은 힘이 약하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에 최대한 널리 알려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피해자 본인이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참사 초기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당장은 모든 것이 벅차고 정신이 없어서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추후 차분히 복기해보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당사자가 포기하면 진실은 묻혀버리게 된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일자	시간	내용	비고
● 2017년			
03.31.	23:20	폴라리스 쉬핑, 스텔라데이저호 긴급상황 카톡 수신	설OO 공무감독
	23:25	EPIRB(조난 신호 자동 발신기) 위성 접수	선박 침몰시 자동 발신
04.01.	11:09	폴라리스 쉬핑, 부산해경에 침몰 보고	침몰 이후 12시간 경과
	15:00	외교부, 언론대응자료 배포	침몰 이후 15시간 반 경과
	15:25	폴라리스 쉬핑, 가족들에게 유선으로 '스텔라데이저호가 침수되고 있다'고 알리고, 4월 2일 13시에 폴라리스 쉬핑 부산지사로 모이도록 공지	침몰 이후 16시간 경과
04.02.	00:45	인근 항해 선박, 침몰 현장에서 필리핀 선원 2인 구조	침몰 이후 25시간 20분 경과
	13:00	폴라리스 쉬핑, 침몰 관련 첫 브리핑 (외교부·해수부 공무원들은 없었음)	침몰 이후 37시간 30분 경과
	20:00	폴라리스 쉬핑 김OO 대표, 상황실로 첫 방문 (대표가 나타나지 않아 가족들이 항의하자 방문)	침몰 이후 44시간 30분 경과
04.06.	13:30	폴라리스 쉬핑 김OO 대표, 가족 면담(가족당 1인)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대출연장 불가 통보로 4월말 1차 부도가능성 있다고 하며 개별합의 중용	
04.07.	18:30	가족,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여 외교부 앞 집결 - 외교부 장관 면담 요청/ 외교부 내 상황실 설치 요청/ 일 2회 외교부 주관 브리핑 요청	외교부 차관 면담
04.08.	11:00	외교부·해수부, 가족 대상 첫 브리핑	폴라리스 쉬핑 서울 본사 건물 내

일자	시간	내용	비고
04.09.	04:23	美 해상초계기(P-8A), 첫 수색 중 구명벌 발견	美 해군
	05:01	한국 해경, 구명벌 발견 상황보고서 수신 (우루과이 MRCC 발신) - 해경은 외교부로 문건을 미전달했다고 진술	* MRCC - 해상구조본부
	09:11	수색선, 구명벌 발견지역으로 이동하여 수색했으나 어두워서 구명벌 미발견	현지시각 : 23시
04.10.	17:48	부산MBC, 부산일보, 부산연합뉴스 보도 - '구명벌 추정물체는 기름띠로 확인되었다' → 이 언론보도는 구명벌 수색 종료의 근거가 됨 * 취재원은 폴라리스 쉬핑 전략기획팀 직원이었음	언론보도 이후 폴라리스 쉬핑 김OO 대표는 일주일간 연락두절
04.14.	11: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해역 실질적 수색 종료	구명벌 2척 미발견
04.28.	-	국민안전처, 주요재난일일상황보고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을 제외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5.22.부터) 다시 포함
04.29.	18:00	제23차 광화문 촛불집회 참여, 세월호 가족들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의 첫 만남	광화문 북측광장
05.05.	10:00	폴라리스 쉬핑, 서울 본사 상황실 폐쇄 → 가족, 길거리 농성 시작	폴라리스 쉬핑 본사 앞
05.07.	-	폴라리스 쉬핑 소유 스텔라콘호 상갑판 균열 언론 보도	선원, 사진 제보
05.10.	04:00	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해역 수색 공식 종료	
	11:00	가족, 새정부 1호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 - 스텔라데이지호,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으로 보도	청운호자동 주민센터 앞
05.20.	-	폴라리스 쉬핑 소유 솔라엠버호 균열 언론보도	선원 제보
	-	폴라리스쉬핑, 전체 선박 인터넷 차단 공문 송신	선원 제보를 막기 위함
05.22.	-	국민안전처 주요재난일일상황보고에 다시 포함	5.22.~7.12.
05.25.	-	부산해경, 폴라리스 쉬핑 압수 수색	침몰 이후 55일 경과
05.31.	-	폴라리스 쉬핑, 스텔라유니콘호 폐선 결정	2017.3.30. 균열
06.03.	16:00	가족, 광화문416광장으로 농성장 이동 -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아빠방 제공	
06.29.	-	부산해경, 한국선급 압수 수색	침몰 이후 90일 경과
07.06.	-	폴라리스 쉬핑, 스텔라코스모호 폐선 결정	동종선박 증거인멸 목적
07.11.	-	가족, 외교부 장관 면담 요청 노숙농성 시작	외교부 서문 앞



일자	시간	내용	비고
07.13.	17:10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족 면담 - 침몰 이후 '주무부처가 외교부임'을 처음 인정	외교부 내 회의실
07.20.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구성	
07.22.	-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MV Stellar daisy-스텔라데이지호]	
09.27.	14:00	외교부, 해수부 면담 시 정부 입장 확인 - 심해수색은 국회에서 공론화되면 검토해 보겠다	9.28.부터 가족들은 국회를 찾아감
10.03.	-	가족대책위, 생존자 구조(2017.4.2.) 당시 촬영 동영상 확보	아르헨티나 산로렌조 항구
10.13.	-	해양수산부 국감, 가족대표(허영주) 참고인 출석 * 폴라리스 쉬핑 대표(김OO)는 증인으로 출석	
10.30.	-	외교부 국감, 가족대표(허영주) 참고인 출석	
10.31.	-	해양수산부 국감, 폴라리스 쉬핑 대표(김OO) 증인 출석	
12.05.	-	종합국감 후 상임위의결로 외통위 50억원, 농해수위 10억원 심해수색예산이 상정되었으나, 전액 삭감	외통위 50억원, 농해수위 10억원

● 2018년

01.02.	14:00	1차 서명지(십만인 국민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 문대통령 1호 민원이 2018년 새해 첫 민원이 되다	청와대 앞
02.27.~ 06.22.	10:00	제1차~10차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회의	
03.31.	17: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1년] - 1년의 기다림,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문화제	광화문광장
04.19.	15:00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 검토 공청회] * 주관 : 외교부, 해수부 * 주최 : 국회의원 이석현, 이태규, 박완주, 이만희	美우즈홀해양 연구소 박사 2인 초청
05.26.	-	폴라리스 쉬핑, 화물선 '스텔라삼바호' 화재사고	한달간 표류
08.14.	10:00	제35회 국무회의, 심해수색예산 53억(예비비) 통과	
10.02.	13:28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용역 국제입찰 공고	결과 : 유찰
10.23.	17:01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용역 국제입찰 재공고 입찰	
11.05.	18:00	재공고 입찰 마감 : 미국 이사회 단독 응찰	이사회(오션 인피니티) : 심해수색업체
11.08.	13:30	정부, 이사회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유해 발견 시 수습방법 등 질의응답 있었음 * 정부는 유해 발견 가능성에 대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50일 뒤 계약체결(2018.12.28.) (유해 발견 시 수습 내용 없음)	
12.28.	17:00	외교부, 이사회와 심해수색 계약체결	

일자	시간	내용	비고
● 2019년			
02.15.	07:00	[정부 보도자료 배포] 심해수색 선박(Seabed Constructor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 도착 - 1차(10일 내외), 2차(15일 내외) 심해수색 예정	
02.17.	12:19	심해수색 3일 만에 침몰 선체 발견 / 블랙박스(VDR) 캡슐 수거	
02.21.	07:20	심해수색 중 유해 발견	유골과 오렌지색 방수복
02.23.	13:00	정부, 유해수습 없이 심해수색 철수	9일 만에 심해수색 종료
03.01.	-	한국정부 협상단, 이사회 대표와 추가수색&유해수습 협상 → 협상 결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04.19.	-	마셜제도, 스텔라데이지호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 스텔라데이지호 : 마셜제도에 등록된 선박	IMO(국제해사기구) 보고
05.03.	15:56	가족대책위, 외교부에 심해수색계약서 등 정보공개청구	외교부, 정보공개 거부처분(5.29.)
06.26.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장비상대응매뉴얼 최초 발간	
07.23.	14:00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개최 / 주최 : 국회의원 심기준, 윤준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정양석 (자유한국당)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이태규 (바른미래당) / 윤소하 (정의당) * 결론- 1차 수색 미흡, 2차 수색 필요	
07.26.	12:00	블랙박스(VDR) 추출 결과 수령 → 데이터 칩 훼손으로 복원 실패	데이터 칩 훼손은 세계 최초 사례
10.21.	16:00	외교부 국감, 가족대책위 대표(허영주) 참고인 출석	
11.07.	14:4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차 심해수색 예산안 의결	100억 원
12.09.	19:00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국회 본청 앞 노숙농성	예산안 100억 원 본회의 통과 촉구
12.10.	22:00	외통위 100억 원 예산안(2차 심해수색 예산)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 못 함	예산안 0원으로 삭감
12.20.	16:00	정부-이사회, 심해수색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가족에게는 비밀리에 개최
12.25.	15: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00일] 성탄절 연합예배 - 주최 : 2019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광화문 북측광장



일자	시간	내용	비고
● 2020년			
02.06.	-	부산지방법해양안전심판원, 스텔라데이지호 · 스텔라유니콘호 · 스텔라퀸호 · 솔라엠버호 조사종료	부산해심원 심판부로 심판청구
02.18.	16:00	폴라리스 쉬핑 선박안전법 위반 1심, 판결선고 - 폴라리스 쉬핑 김OO 대표, 6개월 징역 · 1년 집행유예 등 일부 유죄 판결 - 폴라리스쉬핑 변호인(법무법인 태평양), 판결문 열람, 복사제한신청서 접수 ⇨ 판결문 확인 불가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0
03.19.	-	국가인권위원회, 가족대책위 대표(허영주)의 진정 접수 - 내용 : 외교부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진정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상황임	20-진정-0197500
03.31.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3년] - 스텔라데이지호 3년의 기록 제작 영상 배포	코로나 19로 시민문화제 취소
04.10.	14:00	외교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 (원고일부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452
04.27.	-	외교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제기	
04.29.	-	브라질 발레(VALE), 개조화물선 운항 조기 퇴출 발표	
06.19.		한국선급 스텔라데이지호 검사원 문경빈 피고인, 선박안전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 검찰 항소 제기(6.23.)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233
09.25.	10:00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주최 : 우원식, 박홍근, 김영호, 서삼석, 송갑석, 황희, 오영환, 이탄희, 조오섭,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현, 한기호, 김석기, 이만희, 추경호(국민의힘) / 강은미(정의당) / 이태규(국민의당) <총17인>	
11.1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원 의결 / 21대_382회_9차_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의원영 의원 구두 질의(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대상)	기재부 제2차관 : 향후에 유사사건의 선례도 될 수 있어 반대 입장 답변
11.12.	-	21대_382회_10차_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식 의원 구두 질의(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대상)	기재부 제2차관 : 원칙적으로 민간 선사 책임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문제
12.02.		외통위 100억 원 예산안(2차 심해수색 예산)은 국회 본회의에 또 통과 못 함	예산안 0원으로 또 삭감

일자	시간	내용	비고
● 2021년			
02.24.	-	국회의원 19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에게 연명하여 친서 송부 - 내용 :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비비 편성 및 기술TF 구성 촉구 * 대표 친서인 : 오영환 의원 박주민·송영길·양이원영·우원식·윤미향·이상민·이용선·이재정·이정문· 이탄희·이해식·천준호·최혜영·허영(민주당)·강은미(정의당)·이태규(국민 의당)·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03.31.	11: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4년] - 기자회견 / 시민참여 피케팅 / 기도회 등 개최 *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의 목소리 현수막 청와대에 전달, 2차 심해수색 촉구 시민 인증샷 등	청와대 분수대 앞



집배노동자 과로사 및 과로자살 (2017.07.06)

기록 : 허소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선국장)

1. 사건 개요

집배원 과로사의 경우 단일 건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돌연사(뇌심질환), 과로자살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돌연사의 경우 사고의 시간대도 다양하여 업무 중 급작스러운 쓰러짐, 일과 후 우체국 내에서의 사고, 퇴근 후 잠들었다 일어나지 못하는 등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하다 보니 돌연사의 경우 평소 지인들에게 하던 업무고충 외에는 고인의 마지막 말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7년 7월 6일(목) 당시 오전에 안양우체국 앞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집배원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2017년 6월 말경 갑작스럽게 배달구역을 통째로 바꿀 것을 명령받았다. 베테랑 집배원이더라도 배달구역이 통째로 바뀌는 것은 큰 신체적 심리적 압박이기에 훈련기간을 충분히 부여받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6. 26.(월)~ 28(수) 3일간의 형식적인 훈련기간 뒤 고인은 스스로 배달구역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만들 정도로 꼼꼼하게 업무에 임하려고 했다.

이 시기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에게 인력이 남는다며 배달구역을 늘리고 통폐합을 하는 등 일명 '집배평준화'가 이뤄졌던 시기였다. 고인 역시 하루 종일 일해도 한사람 몫을 못한다는 눈치를 받으며 일했던 것과 갑자기 구역이 통째로 바뀌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건발생 전날인 7월 5일(수) 부터 연가를 냈던 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7월 6일(목) 오전 일찍부터 예전 배달 구역을 돌아다니며 안면 있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 11시 우체국 분신하였다. 직후 119가 출동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3도 화상 쇼크사로 7월 8일(토)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른 과로자살은 같은 년도인 2017년 9월 5일(화) 서광주우체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집배원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었다. 그는 8월 10일(목) 배달 중 이륜차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공무상재해(산업재해)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꾸준히 출근할 것을 강요받았다.

당시 서광주우체국은 2017년 9월 1일이면 '무사고 1,000일' 달성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곧 1년 중 가장 바쁜 추석소통기를 앞두고 있었다. 입원해 있는 그에게 관리자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며 출근을 종용했으며 이를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장남 앞에서 힘듦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퇴원 후인 9월 1일(금)까지도 교통사고부위인 왼쪽 발을 절며 장남의 식당에 찾아온 모습 역시 CCTV에 찍혔다.

직원의 상태를 살피고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관리자는 '내일부터 출근 할 것이냐.'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고인을 더욱 압박했다. 결국 그는 자택에서 유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들 미안해" 28글자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안양우체국에서의 자살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년 7월 10일(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에게 집배원 과로사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기획했다. 주요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대형인명사고의 경우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집배노동자 과로사의 경우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날 다음인 7월 11일(화)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7월 12일(화)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를 공식화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8월 10일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며칠 뒤인 8월 24일(목) 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발족하였다. 구성은 우정사업본부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문가, 사용자측으로 꾸려졌으며 초기단장은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현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기 대표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역임했다. 노동시간부터 노동조건까지 사사건건 노사간 이견이 너무나도 컸기에 운영기간은 당초 예상했던 2개월에 연장 2개월을 훌쩍 넘겨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1년여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정규인력 2,000명 증원을 골자로 7대 권고안이 담긴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이후 이행점검단을 꾸리는 것까지 합의를 하고 노동조합의 참관을 보장하여 4차례의 이행점검단 회의까지 진행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안양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약 7년여 동안 본인이 담당했던 배달구역을 급작스럽게 바꾸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2017년 6월 24일~25일 양일간 본인이 새로 담당하게 된 구역을 직접 돌며 지적도를 그렸다. 다음날인 6월 26일(월)부터 3일간의 형식적인 새로운 구역 훈련이 끝난 후 적응이 안 되어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다. 구역문제로 힘들어하던 고인은 7월 4일(화) 배달 중 중간관리자에게 우체국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배달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실랑이를 벌이고 쉬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다음 날인 7월 5일부터 연가를 낸 고인은 7월 6일(목) 자신의 이전 구역을 돌면서 경비원 등 주민들에게 일일이 안부인사를 돌았다. 같은 날 11:00경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사건이 있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불을 끄고 당사자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건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고인의 업무량을 보니 갑자기 바뀐 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였고 이를 잘 알아주지 않는 관리자에 대한 고충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우체국에서 집배원 개인의 업무량을 측정하는 집배부하량을 확인한 결과 고인이 담당하는 구역과 세대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3. 관계 당국(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담당 부서 또는 책임 있는 회사)의 대응

안양우체국 분신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인 2017년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근거로 집배원의 반복되는 과로사 역시 대형 인명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대책위 구성 이후 요구를 공식화하며 정부에 요구했고 결국 정부 주도 하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발족되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없음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가 이뤄진 배경으로는 당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이후 약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를 구성하여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노사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과로사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발언에서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근거로 집배원의 반복되는 과로사 역시 대형 인명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은 2017년 8월에 구성에 합의하여 2018년 8월 말까지 격주 단위로 총 26회 차례 운영했다. 총 3건의 집배원 노동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① 먼저 집배원 노동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집배원인 약 16,000여명을 대상으로 집배원 노동강도 설문조사 및 노동시간 실태분석을 통해 노동시간과 업무에서의 고충을 설문조사 했다. 조사기간만 5개월이 걸렸으며 분석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 큰 조사였다. 이를 통해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745시간이라는 것 등이 밝혀졌다.

② 두 번째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우정종사원의 사망, 재해 및 건강영향 특성에 관한 역학조사를 6개월간 진행했다. 건강보험기록을 통해 집배원 역학조사를 진행해 집배원에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및 건강상의 악화지점을 짚어볼 수 있었다.

③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집배원 노동강도 신체부하량 측정을 진행했다. 집배원 개인의 신체부하량을 조사한 뒤 업무시간 내의 최대심박수를 측정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부하량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집배원의 업무시간대 중에 가장 힘든 업무와 요일 및 과로지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일 년간의 긴 조사 끝에 7대 정책권고를 얻어낼 수 있었다.

①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가)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2,000명의 정규직 증원이 필요하며 2019년 내에 정규직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하여 단계적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② 토요일근무폐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 노력

가) 토요일근무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노·사, 민간택배기업, 시민사회, 소비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③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기획에서부터 실행 및 평가환류 단계까지 노동자(노동조합) 및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④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

가) 작업여유율, 휴식시간 등의 요소를 추가하여 표준부하량 산출. 부하량 산정기준 마련, 운영 및 활용 과정에 외 부전문가 및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⑤ 조직문화 혁신

가) 조직문화 개선 및 의사소통의 활성화. 우정직군 차별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경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평가제도의 개선 및 폐지를 권고했다.

⑥ 집배원 업무완화를 위한 제도개편

가) 집배팀별·개인별 우편물 구분 제공 및 구분자동화 설비 확충, 스마트PDA를 통한 마감업무 간소화, 네비게이션 기반의 배달경로 최적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⑦ 우편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정확보 등

가) 노동조건 개선 위해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우편요금 및 우편할인 제도 조정 등을 통한 우편적자 보전방안 강구. 우편산업 손실을 우체국 금융사업 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우정사업본부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기획추진단> 차원의 이행점검단 회의 진행과 노동조합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비록 참여는 아니고 참관자격이었지만 약 1년여 간의 기간 동안 4차례의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7대 권고안의 의미를 최대한 현장에서 살리고 퇴색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기획추진단> 권고안 발표 이후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 시민사회대책위 차원에서 이행점검 국회토론회를 진행해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 최대한 빨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압박했다.

<기획추진단>이 운영되고 사회적 운동으로 근로기준법 59조 개정이 이뤄져 무제한 노동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과 집배원들 간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내부 경쟁 제도 같은 것들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집배원 인력기준이 되는 집배부하량과 점배제도, 인력증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7. 지원 또는 연대

위에 중복 기입

8. 언론의 보도 형태

9. 추모 사업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13. 현재의 과제

〈기획추진단〉에서 제시한 7대 권고사항은 여전히 현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2018년 이후에도 2019년 25명, 2020년 18명의 우정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죽음의 숫자가 보여주듯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많다.

먼저 정규인력증원의 경우 2020년 내로 2,000명 증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위탁인 특수고용노동택배노동자들을 대폭 늘려 정부기관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태임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집배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요일택배 폐지 역시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월~금, 화~토 2가지 근무형태로 나눠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비관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와 같은 과제는 여전히 불합리한 성과지표로 현장에서는 비용경쟁을 해야 하고 특히 노



후화된 이륜차의 수리가 안된다든지 하는 안전위협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심각한 것은 인력산출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는 집배부하량의 경우 버젓이 아직까지 인력조정 기준으 활용되어 집배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업이 모자란 상황인데 조직문화 혁신을 하기보다는 중간관리자를 과다양성하여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하고 있으며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우편사업적자 정부 보전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이는 시민사회대책위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등 조직적인 목소리로 꾸준히 문제제기하고 풀어가야 하는 사안들이다. 사용자의 약속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 집배원 과로사는 완결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이 여전히 중요하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7년

07월 당시 12명의 우정노동자가 사망 (과로 5명, 자살 5명, 교통사고사 2명). 당시 기준 최근 5년간 사망한 집배원은 7명

07월 06일(목) 오전 11시경 안양우체국 집배원 우체국 앞에서 분신 시도

07월 08일(토) 오전 10시경 안양우체국 집배원 3도 화상에 따른 쇼크사

07월 10일(월) 기자회견 진행

- 대통령님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세요!
집배원 과로자살 및 과로사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7월 10일(월) 오전 11시
- 장소: 청운동사무소앞

07월 11일(화) 시민사회단체들과 하루 세 번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작

07월 12일(수)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구성

07년 17일(월) 오후 6시 잇따른 집배원 사망사고 대책마련 추모문화제 @ 안양우체국

○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 회견]
국민진상조사위 구성! 집배노동자 대폭 확충!

새 정부가 약속한 첫 국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 일시: 2017년 8월 10일 (목)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2017년 8월 9일 기준 참여 단체 총 27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일과건강,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학생행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의당, 참여연대, 알바노조, 원불교 인권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요구

- 국민조사위원회 구성

- 우정사업본부 대폭 인원 총원 및 장시간 노동철폐

- 과로사·자살 대책 마련

08월 10일 출범 선포 기자회견 진행

08월 24일(목) 노동조합·우정사업본부·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발족

08월 28일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기획추진단> 구성 환영 입장서

09월 01일(금) 국회 토론회 진행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바라본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 일시: 2017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오세정,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추혜선

○ 순서

사회 : 김애란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인사말 : 신경민, 유승희, 신창현의원, 대책위 대표 송경용신부

좌장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발제
- 집배원 노동강도 조사 발표 (김병훈,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 외국과 한국의 집배근로조건 비교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공학부 교수)
- 현장증언을 통해 본 현장의 제도 문제 (김 효, 전국집배노동조합 정책국장)
-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김주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서기관)
- 집배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정명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 사무관(집배인력, 부하량 담당))

09월 05일(화)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사망사고 발생

09월 11일(월)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 [최악의 살인기업 우정사업본부규탄 기자회견]
- 산재은폐, 출근중용이 집배원을 죽였다. 본부장 공식사과, 우본 특별근로감독시행하라!
- 과로사예방대책 없인 또 죽는다. 추석기간 인력증원, 무제한 연장근무 노사합의 파기하라!
- 일시: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우체국 앞
- 2017년 9월 25일 (월) 서광주우체국 사망사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서광주우체국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 결과 입장발표
-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과로사
OUT 대책위원회/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국회의원 신경민/ 유승희/ 윤소하/ 추혜선

● 2018년

10월 22일 <기획추진단> 결과발표에 따른 입장 기자회견

10월 27일 우정노동자 추모대회

- 추모를 넘어 진정한 일터의 변화로! 우정노동자 추모대회
- 일시: 10월 27일 금요일 저녁7시
- 장소: 광화문 우체국 앞
- 주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과로사
OUT 공동행동, 故 이길연 집배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위
한 광주지역 대책위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결과에 따른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동자
과로/과로자살 방지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우체국 앞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사고 (2018.12.10)

기록 : 김미숙 / 권미정

(유가족,(사)김용균재단 대표) /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1. 사건 개요

1994년 구미에서 출생한 김용균은 2018년 9월 17일 한국서부발전 사내 하도급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에 입사했다.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 연료운영팀 운탄 1파트 컨베이어 현장운전원으로 태안화력발전소 트랜스퍼타워(TT04C, TT05A)에 배치되어 2일의 신규채용자 기본교육과 3일의 현장직무교육을 받았다. 5일간 신입교육을 받고 혼자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연료운반설비에 대한 점검 작업에 투입되었다.

김용균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10일 18:00 야간근무조로 출근해서 혼자 TT04C 5층 벨트컨베이어를 점검하였고, 22:21 한국발전기술 운영팀 과장과 통화한 후 22:40~22:55에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시각에 나타나지 않아 23:30경 동료들이 고인을 찾아 나섰고 4시간이 지나, 11일 03:23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설비 9,10호기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내에서 김용균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고 김용균이 담당하던 컨베이어 설비상태 점검 업무 중 하나는 롤러의 과열이나 소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 작업은 육안이나 청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 귀를 열고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만약 점검구 밖에서 아이들러 롤러의 상태가 온전히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점검구와 롤러의 위치가 어긋나있거나 바깥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점검구안으로 몸을 들이미는 것 말고는 작업 방법이 없다.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하청업체 현장운전원들은 설비의 이상 부위를 자세하게 사진촬영해서 발전설비관리시스템에 사진과 함께 등록하도록 원청인 발전회사로부터 요구받았고, SNS를 통해 관리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런 작업방식 때문에 김용균은 컨베이어 설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덮개가 제거된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밑 폐함 점검구에 상체를 집어넣었다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착하여 사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장 CCTV와 통화시간으로 보면 고인의 사고는 12월 10일 22:35~22:56 사이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2월 11일 고 김용균노동자의 시신을 안치한 태안의료원으로 달려온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을 아들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원하청 회사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고 발생 직후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꾸러지고 유족과 함께 투쟁을 시작했다. 2018년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사고의 원인과 죽음의 발전소현장을 폭로하는 언론브리핑을 시작으로 12월 22일에는 고 김용균 1차 범국민추모제를 서울에서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2일째인 2019년 2월 9일,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노동자 민주사회장을 진행한 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마석모란공원에 누웠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24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하여, 5일간의 교육만 받고 혼자 현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했다.

작업지침서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인원이 부족하여 현실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업지침서가 있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다보니 위험한 순간에 스스로 기계를 멈출 수도 없고, 누군가 기계를 멈추도록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를 당겨줄 사람도 없었다.

인원을 부족하게 뽑은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도급계약서나 노무비 원가표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인 운전원들이 1인 근무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하청노동자들의 설비개선 요구는 원청에 의해 계속 거부당했다.

TM이라는 트리블메모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은 점검구 안쪽의 낙탄 제거가 위험하다는 것을 제기했고 원청도 알고 있었으나 설비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벨트 동결방지를 위해 24시간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거기에 원청관리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운전지시서를 통해 (기계를 세우지 말고) 낙탄을 제거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청 노동자들에게 했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이 기계를 세우고 정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은 벨트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점검을 하다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협

착하여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 발견되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이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서부발전에서는 4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되었다. 김용균 노동자 사고 1년 전인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나 설비는 개선되지 않았고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다.

벨트컨베이어의 이상 유무는 가까이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설비 그 자체가 위험의 온상이었다. 회전체에는 안전 덮개가 없었고 점검구와 아이들러의 각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작업공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한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후레쉬용으로 사용해야 했다. 컨베이어에서 떨어지는 낙탄은 시시때때로 쌓여서 벨트운행에 지장을 주게 되니 그 낙탄을 긁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했다. 마스크는 무용지물이었다.

이제 입사한 지 3개월이 되는 김용균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여기 저기 치워놓으라는 원하청관리자들의 특별점검과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을 했다. 작업지침서와 달리 원청은 인력배치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서를 체결했고, 현장에는 위험할 때 비상장치 당겨줄 사람도 없이 혼자서 점검을 해야 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벨트컨베이어가 떨어뜨리는 석탄이 쌓여서 벨트가동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계속 현장점검을 하면서 떨어진 석탄을 삽으로 끄집어내서 모아놔야 했고, 소리가 이상한지 롤러가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덮개도 없이 돌아가는 롤러 쪽으로 머리를 갖다 대야 했다. 심지어 현장은 어두웠다. 70룩스 밝기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점검구 안은 1룩스였다. 그 어둠을 밝힌 것은 노동자들의 핸드폰 후레쉬였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이 위험하니 떨어지는 석탄을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설비를 바꾸자는 제안을 계속 거부했다. 설비 개선은 하지 않고 라인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만 주었다.

그렇게 24살 청년비정규직 김용균은 혼자 작업을 하다가 벨트 속으로 끌려들어가서 사망했다.

석탄을 운반하는 벨트컨베이어는 무거운 연료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매우 강하고 빠르게 이동한다. 신체 일부가 접촉이라도 하면 협착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기계를 비상정지하지 못하면 벨트의 힘이 워낙 강해서 계속 벨트가 돌아갈 것임을 모두 알았다.

그런데 원하청 사업주는 그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

2인 1조가 가능하도록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원하청의 노력은 없었고 작업은 혼자 해야 하는 조건을 만들었다. 사고가 처음 난 것도 아니었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원청은 설비를 바꾸거나 개선하지 않았고, 하청은 우리 설비가 아니니 어렵다는 말로 버티었다. 작업지시와 보고는 원하청 모두에게 이뤄졌다. 그것이 이 죽음을 만들었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하청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은 사고 이후 ‘안전사고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사고원인이 무엇인지는 적시하지 않았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에 낙탄제거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고 유지관리업무만 주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유족에게는 “김용균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했다. 더 나아가 한국서부발전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사망사고 현장 물청소,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스위치 조정 등 사망사고에서 서부발전의 과실이 되는 물적 증거를 삭제하려 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전면 작업중지가 아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컨베이어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만 작업중지를 내렸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당시 피해유족에 대한 회사 측이나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투쟁이 마무리 될 때 대책위와 원하청업체의 합의로 배보상문제가 정리되었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청년비정규직 김용균의 사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방식을 했던 노동자 당사자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한국서부발전이었다. 그런 원청이 2018년 12월 17일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문이라기보다는 면피성이었고 그 사과문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원하청법인과 원하청 대표이사를 포함한 책임자 및 유관자들을 고소고발했다. 2019년 1월에 살인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소고발하였는데 그 해 11월 22일, 12월 6일에 야우리의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태안경찰서와 서산노동청은 원하청업체와 대표자들은 김용균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원하청업체 대표들이 왜 사고의 책임자들인지에 대해 대책위 법률팀에서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고 2020년 8월 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원하청 법인과 14명의 책임자 전원을 기소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원청대표이사과 기술전무, 하청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이라고 송치의견을 내놓았으나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있음으로 기소했다. 노동청에서도 원청대표이사과 기술전무, 하청대표이사에 대한 산안법위반 혐의가 없다고 의견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산안법 위반으

로 기소되었다.

2020년 준비재판을 2회 진행하고 본 공판은 1월 26일, 3월 9일에 진행했고 4월 6일에 3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정협의를 발표에 이어 2019년 4월 3일 16인의 조사위원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출범했다. 김용균특조위는 국무총리 산하로 구성되었다. 이후 4개월에 걸쳐 현장조사, 설문조사, 자료조사, 문헌분석,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특조위원들이 가는 발전소를 미리 물청소를 해놓거나 설문조사에 대한 모범답안을 직원들에게 돌린다거나 하는 행위를 통해 조사를 방해했고 특조위원들은 조사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김용균특조위는 2019년 8월 18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22개의 권고안을 담아서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용균특조위는 종합보고서를 2019년 9월 2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고 권고이행기구 설치를 촉구하였다. '특조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보면, 특조위는 활동보고서를 발표한 뒤 개선과제와 재발방지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정부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투쟁과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서가 발행되었고 2019년 8월 즈음 시민대책위원회는 '김용균이라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백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김용균특조위 22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면수용은 아니었다. 2019년 12월 12일 김용균 노동자 1주기를 맞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TF를 통해 김용균특조위 권고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일부 수용과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핵심적인 사항의 이행을 배제하였다. 당정 후속조치안이라고 했지만 합의당시인 2월 5일의 발표문에서 진전되지 않았고 간접고용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개선조치만 제시했다.

현재 정부부처가 운영하고 특조위원이 참가하는 이행점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야기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7. 지원 또는 연대

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초기 발전비정규직들과 함께 하면서 대응방향을 잡아갔다. 태안지회는 새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합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태안에

현장이 있지만 많은 단위들이 현장으로 내려가고 사고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해주고, 트라우마 치료를 집단적으로 진행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활동을 펼쳤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촛불 추모제를 진행하고 분향소를 운영하고 선전전을 했다.

투쟁기간 내에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시민대책위원회가 맡았고 노동자 시민들의 모금과 조직분담금으로 긴 시간 투쟁을 진행하고 지원도 할 수 있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지속적인 보도는 투쟁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과제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과 김용균으로부터 다른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확산되었던 보도내용은 일하는 모든 이들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큰 힘이 되었다.

주제를 기획하고 취재하는 언론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슬퍼하는 유족의 모습만을 부각하려 하는 등 특정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려내는 언론도 있다.

9. 추모 사업

2019년 1주기, 2020년 2주기 모두 10월 경에 김용균재단·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가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90여개의 단체가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두 해에 걸쳐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추모주간을 설정하고 토론회, 공연, 집회, 농성, 문화제, 기자회견, 마석과 태안현장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매 주기에 모이는 단체는 달라지며 3개월 정도의 활동을 진행하고 추모위원회는 해산하며,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추모주간 행사는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마석 추모제,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모제이다.

2019년 2월 김용균 추모조형물 설치에 합의사항에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2020년 11월 10일 김용균재단과 한국서부발전이 실무논의를 거쳐 추모조형물 건립의 구체방안을 마련하였다.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은 건립 장소와 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어 온 상황이었다.

2020년 합의에 따라 2021년 3월에 추모조형물 건립일시와 제막식 날짜를 확정하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고 김용균노동자 추모조형물은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4월 26일 세워질 예정이며, 제막식은 4월 28일 오후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 사업은 김용균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는 김용균재단의 사업 목표이기도 하다. 하여, 김용균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다른 김용균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업들을 준비 중이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1) 관계당국의 대응

회사가 시키는 일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고 용균이의 잘못으로 몰고 갔으나 동료들한테 확인한 결과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이라고 했다. 밤새도록 혼자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험하게 시신이 훼손된 아들의 죽음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죽음까지도 사측은 아들의 잘못으로 몰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고의 이유를 찾으려고 사고 현장 안을 들어갔으나 이미 사고 현장은 물청소로 흔적을 지우며 은폐시키는 것을 보고 매우 울분이 차서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을 회사에 보내 놓고 잠자고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원청 사장이 빈소에 3차례 왔었는데 안전을 방치하던 원하청 사장은 유족들과 용균이 동료들한테 욕만 실컷 얻어먹고 신발도 못 벗고 쫓겨났다. 그 이후 유족에게 여러 차례 면담요청 했지만 회유 당할까봐 싫었고 사측의 태도가 가관이었기에 공공운수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유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전면 작업중지 요구하기위해 3차례 찾아갔지만 해결해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유족을 대하는 태도는 불손했다. 공공에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기에 대통령께 해결을 위해 따지겠다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문 왔고 해결안을 들고 오라고 내보내자 차례대로 두 명이 더 오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태안과 광화문에서 두 달 동안 주말마다 추모 문화제를 했다. 자식의 죽음이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어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다가 놀라서 벌떡벌떡 깰 때마다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어 폰으로 마음에 글을 쓰면서 달렸고 그 글을 광화문 문화제 단상에서 읽었다. 언론도 최대한 많이 응했다.

2)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회사나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3)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① 가해자의 사과 여부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신문마다 박스형식으로 사과문을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

여왔다.

② 진상조사를 방해한 요소들

특조위 진상조사 진행하는 과정에 설문지를 직원들이 직접 뜯을 수 있도록 봉해서 우편으로 원하청에 보냈는데 직원들이 받았을 때 뜯겨져 있었고 답안의 몇 군데를 원청이 시키는 대로 답안지를 사측 유리한 쪽으로 동일하게 쓰게끔 해서 고의적으로 진상조사를 방해하면서 조사를 잠시 중단하였고 해결방안을 찾은 뒤 다시 조사하게 되어 마무리 시켰다.

③ 조사보고서나 백서 여부 (당국, 조사위, 피해자 등이 작성)

사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래서 특조위 진상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 특조위 조사 보고에서 시키는 대로 업무수칙을 다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다. 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졌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였고 어떻게 그런 상태로 일을 시키는지 기본적으로 내 아들 같은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리고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 권한이 없다. 라고 했다. 그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구조적 허점을 만들어 놨으니 조금만 실수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당사자나 말단직원들한테 잘못으로 몰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관행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인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부도 기업과 한통속이 되어 안전 책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도록 방관했다. 아들의 부당한 사고도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이전의 모든 사고들이 이윤의 희생량으로 고귀한 생명들이 스러져 갔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미칠 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나처럼 피해본 수많은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헛헛한 세월의 보내고 있을지 생각만으로 가슴이 아팠다.

4)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여부

특조위 진상조사에서 22개 권고안이 나왔지만 아직도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들 사고 났던 현장은 조도밝기, 2인1조, 안전펜스, 청소용호수로 물청소하며 일하도록 개선이 되었다. 라고 동료들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에 이행 점검위가 조사를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5) 지원 또는 연대

유족들과 시민단체들 언론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많이 함께 싸워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2018년 유독이 매서운 추위에도 한마음으로 싸워주신 수많은 동지들께 무한한 감사함이 사랑으로 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

6) 언론의 보도 형태

처음부터 언론들의 반응이 컸고 그것을 통해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했다. 내가 하는 말을 거르지 않도록 보도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언론 담당간사님도 기획해서 사건을 보도한 것도 효과를 크게 나타나게 한 탁월한 역할을 해냈다.

7) 추모사업

2주기 추모주간을 기획해서 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추모제를 실시했다. 추모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몇달 전부터 견디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유족들이 다 같이 겪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유가족은 영결식 이후 구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시민대책위와 상의하여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고인의 어머니는 법원에서 활동비를 받는 상임이사이자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24살 새파란 청년인 소중한 아들이 험하게 일했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힘든데다 훼손된 몸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엄마로서 밥 먹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죄스럽고 미안하다. 그리고 사고처리도 사고난지 8시간 후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듣고 내 아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당한 것에 미치도록 분개한다. 무엇보다 보고 싶은 아들이 현실에 없다는 것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13. 현재의 과제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22개는 정부에 의해 전부 수용되지는 않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부처와 김용균 특조위 위원으로 구성된 이행점검위원회는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준비를 진행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일부 노동환경의 개선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현장에 화장실이 없거나 낙탄을 물청소로 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삽으로 퍼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파트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전문 독립적인 기구와 인력충원을 먼저 해야 함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중 가장 중심 고리는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변화였다.

발전소 비정규직은 청소 등을 빼면 운전파트와 경상정비 파트로 나뉘어 있다. 운전파트는 한전산업개발을 재공영화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하기로 노사전협의체에서도 정리되었으나 자유총연맹이 주식매각에 여러

조건을 붙이면서 지연되고 있다. 경상정비는 위협의외주화 금지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애초 문제의 시작은 공공성을 띤 발전산업이 민영화 된 것이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외주가 증가하고 안전이 축소되었다.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늘리고 약속한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와중에 탈석탄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 정부 또한 탄소중립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고 민간기업인 석탄화력발전소 설립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전에 설립이 허가된 경우이기는 하나 공사가 더 진전되기 전에 공사 중단을 내렸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입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간발전사는 확대하고 공공발전사는 축소하면서 비정규직들은 고용불안을 겪는 방식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고용구조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산재를 노동자 개인의 실수라고 생각하거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보다 덜 다치고 덜 아프고 적게 죽으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부개정안이라던 산안법도 김용균 노동자같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협의 외주화를 막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다지만 재해가 더 자주 일어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되었다.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만든 특조위에서 내놓은 대책을 정부가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아직도 김용균특조위의 여러 대책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점검위의 점검이 성적표를 매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용이 공개되고 이행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지켜줘야 할 국가는 의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정의 구성원이 국가나 회사가 안전을 방치함으로 수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게 한다는 것을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유족들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그럼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래식 죽음을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산재는 다른 누군가의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19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듯이 산재도 재난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추지 말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추면 해결할 수 없다. 다친 것이지 산재는 아니다, 일하다 다쳤지만 회사를 위해 공상으로 하자, 아픈 게 일한 것 때문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이야기는 문제를 감추게 한다.

매년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2,400명이나 많이 사망사고를 당하고 11만 명 이상이 산재를 당한다. 최소한 2,400가족들이 끔찍한 아픔을 안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금지옥엽 키운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은 거의 치유가 불가능하다.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충분히 넘치도록 절감한다. 그만큼 살아내기 힘이 들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모든 안전을 확보해야만 한다. 국가가 알아서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고 국민들 스스로가 목소리 내어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손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손 내밀어 보세요. 모른다고 주저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의 실수와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회사가 말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고 협박하더라도 당장 합의하지는 마세요. 조금은 생각해 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들을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너무 놀라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없는 상황이 됩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선 다른 피해 유족들을 만나서 아픔을 공유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유족들을 위해 정직하게 손 잡아주는 곳도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8년

- 12월 11일 03:23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벨트컨베이어 밀폐함에서 주검으로 발견. 11:00
‘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죽음 알려짐
- 12월 12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장 방문
- 12월 13일 노동부 보령지청장 면담, 유가족 시민대책위 사고현장 방문
태안지역 김용균 추모문화제 이듬해 1월 21일까지 매일 개최
- 12월 14일 청와대시민사회수석 방문, 고 김용균 사망사고 현장조사결과기자브리핑
- 12월 16일 시민대책위 공식 출범 및 1차 대표자회의(태안)
- 12월 17일 광화문에 고 김용균노동자 추모시민분향소 설치
- 12월 18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면담투쟁 중 감금되어 2박3일 농성
- 12월 19일 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장 간담회, 충남노동자결의대회
-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태안현장 방문, 유가족 시민대책위 면담
- 12월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1차 범국민추모제
- 12월 26일 산안법 전부개정안 통과 필리버스터, 국가인권위 위원장 태안현장 방문
- 12월 27일 산안법 전부개정촉구 활동, 산안법 전부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12월 29일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 고 김용균노동자 추모 문화제

● 2019년

- 01월 02일 미안마노동자 탄저테이 유가족과 고 김용균 유가족 만남
- 01월 03일 작업중지 해제시도항의 및 노동부 보령지청장 면담요구 1박2일 농성
- 01월 05일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범국민추모제
- 01월 08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촉구 고소고발 기자회견
- 01월 10일 진실은폐, 작업재개 시도 한국서부발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01월 11일 죽음 한 달, 유가족 시민대책위 대정부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기자회견
- 01월 12일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 01월 17일 산재재난참사유가족과 죽음의외주화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 01월 19일 고 김용균투쟁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5차 범국민추모제
- 01월 22일 고 김용균노동자 빈소 서울이전 및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 한국서부발전규탄 및
문재인대통령 결단촉구 기자회견
- 01월 23일 국무총리 조문 및 유가족 시민대책위 간담회

- 01월 24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정규직화' 사회원로 비상시국선언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인권실태 보고회
- 01월 27일 고 김용균 49재,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6차 범국민추모제, 발전비정규직노조 확대대표자회의
- 01월 30일 설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 01월 31일 노동부 보령지청장 면담,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오체투지
- 02월 05일 당정발표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6명의 시민대책위 단식농성단 15일간의 단식과 농성
마무리
- 02월 09일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62일 만에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

<첨부자료 1>

2019년 2월 4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당정간 협의진행
 “당정발표문 및 세부 브리핑”

- 1) 진상규명 관련
 - 조속히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발표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마련키로 함.

- 2)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관련
 -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은 발전5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며 그 세부사항인 전환방식,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속히 합의하기로 함.
 - 아울러 노사전협의체의 대표성을 강화키 위해 노동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고 근로자 대표 재구성 이후 전문가 위원을 노사협의로 선정함.

- 3)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관련
 - 경상정비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 4) 임금 개편 관련
 -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임금이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편함. 이에 따라서 추후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 5) 인원충원 관련
 -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함.

- 6) 발표문 이행 관련
 -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 구성하여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첨부자료 2>

2019년 2월 5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합의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합의사항”

1. 한국서부발전 합의사항

1) 사고 책임 관련

- 한국서부발전은 부족한 인력 등 하청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김용균 노동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인정함.
- 따라서 유가족 배상에 대한 합의대상이 한국서부발전임에 따라 유가족 배상은 한국서부발전과 합의함.

2) 불이익 금지 관련

- 노조 및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타 사업소 발령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하청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 (한국발전기술, 한전산업개발, 영진 등 모든 하청사-위탁사 노동자들에게 해당함)

3) 현장복귀 관련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안전설비, 휴게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조 사무실 제공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복귀 일정은 한국발전기술과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한 일정을 보장함.

4) 사과문 게시와 분향소 설치 관련

- 한국서부발전은 2월 8일자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시, 모든 사업소에 분향소 설치함.

5) 진상규명 관련

-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키로 함.

6)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및 차별해소 관련 기부 관련

- 3년간 1억 원씩(총 3억 원)을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키로 함.
-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 및 차별해소 활동을 김용균 동지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함.

2. 한국발전기술 합의사항

1) 불이익 금지 관련

- 노조 및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타 사업소 발령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금지함.

2) 현장복귀 및 특별휴가 관련

-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안전설비, 휴게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조 사무실 제공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복귀 일정은 한국발전기술과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합의일 이후 2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복귀 시점은 회사와 태안화력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특별휴가기간의 임금은 교대근무자의 임금 100%로 지급하기로 함.

3) 단체협약 체결

- 공공운수노조와 회사는 단협 즉시 체결하기로 함.

4) 사과문 게시와 분향소 설치 관련

- 한국발전기술은 2월 8일자 중앙일간지에 사과문 게시, 모든 사업소에 분향소 설치함.

5) 진상규명 관련

-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 조사결과 및 권고 사항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하기로 함.

6)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및 차별해소 관련 기부 관련

- 1억 원을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기로 함.
-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 및 차별해소 활동을 김용균 동지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함.

<첨부자료 3>

2019년 2월 5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문
“죽어서야 이루어진 변화, 더 이상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뀌야 한다”
- 2월 5일 당정 발표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 -

故 김용균 님의 참담한 죽음 이후 오늘까지 오는데 58일이 걸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54일의 희망고문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해결은 멀다. 오늘 정부 발표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된 발전 업무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는 ‘외주화 구조’는 극복되지 못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기업에 파리를 틀고 발전 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해 온 적폐 세력의 공고한 카르텔, 그것을 핑계 삼는 정부의 안일함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부 여당의 발표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낸 노동자와 시민의 힘을 우리는 믿는다.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 시민들, 유가족과 현장 노동자의 투쟁 없이는 오늘의 발표도 불가능했다.

우리는 발전 5개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거부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발전소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경상정비 업무의 정규직 전환 협의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칙을 확인하고,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청이 당초에 정한 금액대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간착취를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전소는 물론 공공부문으로, 나아가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으로 보호받는 이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사회적으로 일터의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위주화의 위험과 근절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했다.

기대가 실망으로 추락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와중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의 용기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로, 유가족의 굳센 의지로, 다시 온 국민의 공감으로 이어져 오늘의 발걸음을 만들었다. 죽고, 굶고, 농성하고, 밤을 지새워 일군 한결음이다.

이제 남은 길, 우리 모두 걸어가자. 아무도 죽지 않게 우리가 바뀌야 한다. 또 다른 김용균이 더 이상 다치고 죽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애초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는 확실히 처벌하겠다. 진상 규명위원회에 많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위원회가 제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겠다. 간접고용과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건, 안전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셋째, 발전소를 넘어 공공부문 전체, 한국사회의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부족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현장의 변화를 감시하고 추동하고 투쟁해 나가겠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에 빠진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과 최고 책임자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이번 사태를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적 원인의 하나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발전 부문을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 2월 7일부터 조문을 받고 9일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은 고인이 가시는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내가 김용균이다. 우리 모두가 김용균이다.

2019년 2월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청년 일용직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님 산재 사망 사고 (2019.04.10)

기록 : 김도현 / 박승하
(김태규 누나) / (일하는2030 대표)

1. 사건 개요

2019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수원산업2단지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님이 건물 5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ACN의 하청을 받은 (주)은하종합건설(대표자 김○○)이고 희생자는 일용직으로 고용된 26세 청년이다.

참사 당시 은하종합건설의 노동자들은 5층에 남아있던 건설 폐자재를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폐자재들을 파레트 위에 적재하여 지게차로 운반했으며 희생자는 파레트 적재하는 작업을 했다. 고용계약시엔 조적 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작업을 한 것이다. 참사의 핵심원인인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용했는데 안전장비지급 및 설치, 안전교육 역시 미흡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외벽으로부터 40cm 이상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실족과 협착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승하강 이동 시에도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작동시켰고 무엇보다 화물용임에도 희생자를 탑승시켰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피해자는 5층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했다. 부검결과 또한 질병 또는 약물 등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추락에 의한 신체 내부 실질 장기 손상을 사인으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었으며,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작업자와 현장소장 등 목격자 진술을 참고하여 사건 이후 유가족의 끈질긴 직접조사로 몇 가지 사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작업에 사용하던 화물

용 엘리베이터는 외측 출입문이 활짝 개방된 채로 운행됐으며 피해자는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위험한 작업을 지시받아 작업중 어떤 이유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추락하였다고 여겨진다.

건물 5층에서 추락한 희생자는 추락직후 충돌음을 듣고 달려간 '목격자'가 발견하였고 동료작업자가 신고한 119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사망했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1) 은하종합건설(시공사)

사건이 발생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사건 '이후' 임의로 운행했다. 엘리베이터는 사건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현장소장은 경찰의 허가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이동하는 등 작동시켰고 현장은 심각히 훼손됐다. 이는 명백한 현장 훼손, 증거인멸 시도이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닫혀있었다거나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했다거나 등등 유가족에게 거짓 증언을 일삼았다. 유가족 주변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압박연락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

2) ACN(발주처)

현장을 찾은 유가족에게 준공 지연 원인을 떠넘기며 나무라고 고인을 모독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니 이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건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엘리베이터조차 초기에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작업중지명령의 이행여부 감시도 없는 등 일처리 하나하나 능장부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4) 수원서부경찰서

CCTV조차 확인하지 않고 초기수사가 굉장히 미흡했다. 그로인해 사건이 피해자 과실로 오판됐으며 그대로 수사를 종결시켜버렸다. 이후 유가족이 직접 조사하여 허점을 발견했고 강력히 요구했더니 오히려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전근 처리했다.

5)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산재 상담을 위해 유가족이 찾아갔으나 고인과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고 언론의 인터뷰에서 진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유가족을 고소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6) 수원지방검찰청

시공사대표 및 발주처를 불기소처분했다.

7) 경기 노동권익센터

유가족에게 접촉하여 사측과의 합의만을 권고하였다.

8)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중인 발주처 에이씨엔을 경기도 유망기업으로 인증해주었다.

9) 수원시

사고현장 준공허가를 보류할 것을 유가족이 요청하여 시장과 면담했다.

10) 백혜련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유가족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였다. 사건 관련자료 등을 보냈으며 유선으로 접촉했지만 그 어떤 도움도 거절하였다.

4. 당시 피해자(유족 등)에 대한 지원

유가족은 피해자의 장례 이후 사건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책임소재가 있는 관계당국 중 그 어느 곳도 지원은커녕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가해만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가 당시 다니던 성당의 신부의 소개로 수원에서 활동하던 청년노동자 시민단체 '일하는2030'을 찾게 된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이 결합하여 사건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진상규명과 법정싸움을 포함한 투쟁과 지원을 시작하였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초기수사는 피해자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족사로 졸속종결로 끝났다. 하지만 이후 유가족과 대책회의의 끈질긴 재수사 요구투쟁 결과 재수사가 실시되어 경찰은 결국 시공사의 책임에 대한 기소의견을 내게 된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오히려 시공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은하종합건설(시공사) 700만원, 현장소장 김○○ 징역1년, 문○○ 차장 징역10월, 이○○ 승강기 제조업자 300만원 선고 확정하고 법정구속은 보류하였다.

법원 판결이 끝나고 사건 2년 후 시공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다.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성실하고 허술한 대응과 업무태도가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또는 고의로 낭비했고 그 이후에도 무능함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수정에 수정을 거쳐 껍데기만 남게 되어 사실상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7. 지원 또는 연대

희생자의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은 직접 사고 현장을 뒤지며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동안 청년노동자 단체 ‘일하는2030(대표 박승하)’과 함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2019년 5월 24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수원 지역 시민사회 등 24개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건설노동자故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산재사고 진상규명 발주처 ACN 및 은하건설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개시했다. 경기 지역 차원에서선 최초라 할 수 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대해 국토부 서울관리청 건설안전협의회 등 운영을 확인하고 밀접관계인 고용노동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책 수립을 요구, 경기도는 결국 건설현장 등에서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담당부서(건설국)를 선정했다.

유가족들이 산재사망 피해자모임 ‘다시는’ 활동으로 사선을 확장시키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이는 2년 여 기간 내내 대책회의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대책회의 참가 단체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행동 의지로 서부경찰서 앞에서 3개월 간 진상규명 및 재수사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수사 여부는 매우 절박했기에 이 투쟁은 이후의 사건 향방에 결

정적이었다. 결국 이러한 대책회의의 구성원들의 활동들이 수원서부서의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또한 이들이 기소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성과를 냈다.

대책회의는 김태규 사건 여론화를 위한 13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다. 그 결과 지역 사회 인사 등의 많은 탄원서를 끌어냈으며 이는 결국 법원의 실행 판결까지 이끌어냈다.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의 2년 여 활동은 경기지역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대책위가 구성되던 무렵부터 민주사회위헌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마지막까지 법률적인 지원과 지문으로 함께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사건발생 직후 보도내용이 경찰측 증언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피해자과실로 인한 실족사로 왜곡되었다. 이후 유가족의 진상규명 활동과 대책위 구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여론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혼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인데다 세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공 발주기업, 건설업계와 긴밀한 이득관계인 메이지 언론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9. 추모 사업

대책회의의 지원으로 피해자 1주기에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후 참사를 기념하는 지속적인 추모사업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동생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고 직후부터 직접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들을 찾아 증언을 들었다. 이를 모아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회 그리고 검찰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죽었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 연락해라, 재수 없게 여기서 죽어서 공사 지연 되게 만들어 돈 더 들게 만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담당 형사에게 증거와 증언을 모아 전달하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도 들었다. 재판정에서는 “비일비재한 추락사 중 하나”라면서 합의를 종용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동생은 재수 없게 죽은 게 아니라 원청과 하청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대책회의 및

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의 노력으로 인해 부족하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고 태규가 죽은 현장 시공사대표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산재사고가 기업살인이 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어느 현장이라도 동생 김태규와 함께 찾아갈 것이다.

11. 피해자(유족)의 현재 상황

2년 동안 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쏟았다. 당연히 일상이 무너지고 심신이 꺾여지는 가운데 사회적 인간관계들이 파괴되었다. 특히 사고 이후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승강기를 탈 때마다 심장이 떨려오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또 극도의 불안과 불신을 겪으며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그속에서 이 모든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연대하는 사람들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산재피해자 네트워크 다시는에서 활동했다. 무너진 삶에서의 큰 빛이었다. 이제 2주기가 다가오니 계절만 바뀌어도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늘상 지겨운 불면증에 시달린다. 평생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두렵다. 오가다 보이는 모든 건설현장을 지날 때마다 '저기선 몇 명이나 죽을까' 걱정한다. 오늘까지도 그렇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우리는 태규 장례를 치른 직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현장을 조사하던 중, 피 냄새 진동하는 안전모를 발견했다. 엘리베이터 아래 어딘가에서 뒹굴고 있는 그 헬멧에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보내야했던 태규의 억울한 죽음을 비로소 체감하고 괴로움에 몸을 떨며 오염했다.

그로부터 2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어떤 이유로, 어떤 작업지시로 동생이 그 사지에 몰려 추락했는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더해만 간다. 여전히 지독히 많은 의문 속에 잠을 자지 못한다. 현장 사무실에 있던 건설사 이사는 왜 달려가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거짓말 했을까? CCTV 확인 결과 그는 사고 직후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어슬렁거리며 현장으로 향했다. 경찰은 왜 태규가 핸드폰을 보다 실족했다고, 심지어 술에 취해 떨어졌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헛말을 유포했을까? 태규의 몸에서 알콜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왜 이들은 일용직 청년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고 했을까?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던 태규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 모조리 밝혀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태규가 이렇게 죽어 몸에 칼을 대는 부검까지 하게 될 줄 몰랐다. 부검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 가족 앞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

모든 산재 유가족이 겪어온 비상식적 현실에 대한 절망감. 우리 가족에게 몰아친 이 고통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돌

이켜보면, 살아오며 적어도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죄상이 드러나고 벌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태규를 죽인 기업과 최종 책임자들에게 줄줄이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을 보며 믿음은 무너지고 스스로의 무지했음을 탓해야 했다. 경찰조차 기소의견을 올린 사안에 대해 '관례대로' 면죄부를 던지는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터져나오는 울음 속에 절규하며 수도 없이 물었다.

사람이, 노동자가 죽는 일이 이 나라와 정부에게 이토록 하찮은 일이라는 현실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죄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저울질하는 자들을 처벌할 법이 없다니 이것이 나라인가. 너무 힘들었다. 무수히 많은 유가족들이 이 상식 밖의 벽 앞에 좌절하고 쓰러져왔다. 우리 가족들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는 현실이다.

13. 현재의 과제

첫째, 산재사고 초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태규 청년 유가족은 사고 직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장례부터 치러야 했다. 사측의 은폐 시도가 난무하는 사망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김태규 사건에서 진상규명 관련 초기 활동이 뒤늦게 시작 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데, 이후 죽음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줄곧 힘겨운 싸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 대처방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설사 안다 해도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즉,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사측의 의도대로 '무마'된다.

둘째, 산재사고 전반에 걸쳐 '재발 방지' 및 '보상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더욱 넓혀 나가는 활동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사망 희생자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위임을 받아 지역사회 및 노동조합이 대응하는 수준 이상의 시스템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유가족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에 심각한 인의적 문제가 있다. 경찰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등 기관은 물론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까지 산재사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유가족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든 노동자가 죽는 일은 개인적일 수는 없다. 이 역시 사회적 합의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현장의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사업주들이 고용한 노동자의 안전을 모든 이윤보다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강제된 법안이 시급하다. 이 처벌 규정만이 실제로는 김태규와 같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되었지만 기뻐할 수도 없고 슬프기만 한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벌금 하한선이 삭제되고, 과로 자살, 일터 괴롭힘과 발주처 처벌도 빠지고 인과관계 추정도 빠졌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유예되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 되어 너무 개탄스럽다. 정말로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온전히 사람 살릴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재판 당시 “비밀비재한 추락사”라고 했던 관사의 말이 생각한다. 두번다시 이런 추락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김태규 사건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한 해에 산재사망자가 2,400명에 다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십만명이 넘는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다. 사람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것이 통탄스럽다.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후속 대응의 발전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장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에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핵심은 사측을 믿지 않는 것이다.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이전에 도와줄 수 있는 믿을만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유가족단체 등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9년		
04월 10일	사고 신고 접수	수원서부경찰서 고색지구대
04월 10일	작업중지명령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04월 12일	김태규 추락사 의문 성명서 발표	일하는2030
04월 14일	사고 현장 방문조사	유가족, 일하는2030
04월 19일	진상규명 요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유가족, 시민사회

04월 25일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 유가족, 일하는2030, 청년민중당
05월 01일	2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현장소장, 은하종합건설 차장)	수원지방검찰청
05월 06일	유가족·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면담	유가족,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05월 08일	수원역 촛불선전전	일하는2030
05월 09일	현장소장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05월 0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방문 면담	유가족,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05월 15일	검찰 대응 관련 자문	민주노총
05월 16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사업 준비회의	참가 단체들
05월 20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진상규명 요구 청년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 준비회의
05월 22일	대책회의 구성 및 참여 보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참가 단체들
05월 24일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출범	대책회의 개시
05월 3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 면담	대책회의
06월 13일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대책회의
07월 05일	추모문화제	대책회의
07월 16일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강력계장 면담	대책회의
07월 22일	고소인 조사	수원서부경찰서
07월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대책회의
08월 20일	산재사망 피해자 유가족 모임 '다시는' 간담회	대책회의
08월 26일	수원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대책회의
08월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면담	대책회의
09월 01일	수원서부경찰서 1인 시위	대책회의
09월 06일	수원서부경찰서 강력계장 면담	대책회의
09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면담	대책회의
10월 15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책회의
10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1인 시위	대책회의
11월 20일	수원서부경찰서 검찰 기소 의견 관련 설명회	대책회의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댓글 관련 고소인 조사	수원서부경찰서
11월 26일	책임자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검찰청/대책회의
12월 02일	책임자 기소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대책회의
12월 17일	수원지검 앞 1인 시위 시작	대책회의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산재보상부장 김○○ 징계 확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 2020년		
01월 07일	계약인력에 대한 추가 고소 (근로기준법, 금융거래법 위반 등) 관련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01월 14일	검찰의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고	대책회의
01월 16일	책임자 불기소 검찰 규탄 1인시위	대책회의
03월 04일	항고 기각 결정 통보	수원고등검찰청
03월 05일	수원고검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대책회의
03월 13일	수원고검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대책회의
04월 06일	1주기 추모 선포 기자회견	대책회의
04월 09일	1주기 추모 약식 집회	ACN / 대책회의
04월 10일	수원연화장 장지 참배	대책회의
04월 10일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대책회의
04월 17일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민주노총 / 대책회의
05월 14일	책임자 엄중처벌·수원지방법원 재정신청 관련 탄원서 접수	대책회의
05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은하종합건설 2명 검찰구형 규탄 성명서	대책회의
06월 09일	면죄부용 솜방망이 검찰 구형 규탄 기자회견	수원지방검찰청 / 대책회의
05월~06월	원청 기소촉구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방법원 1인시위	대책회의
06월 09일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	수원지방법원 / 대책회의
06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대책회의
06월 19일	1심선고 검찰 구형 유지	수원지방법원
06월 19일	1심선고 비판 성명서 발표	대책회의
12월 02일	항소심 공판 개시, 검찰 1심 구형 유지	수원지방법원
12월~0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농성	유가족
● 2021년		
02월 15일	은하종합건설 김○○ 대표 사과 기자회견	ACN
02월 17일	항소심 선고(현장소장 징역1년 등)	수원지방법원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건 (2019.05.15)

기록 : 김장희

(태호 아빠,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팀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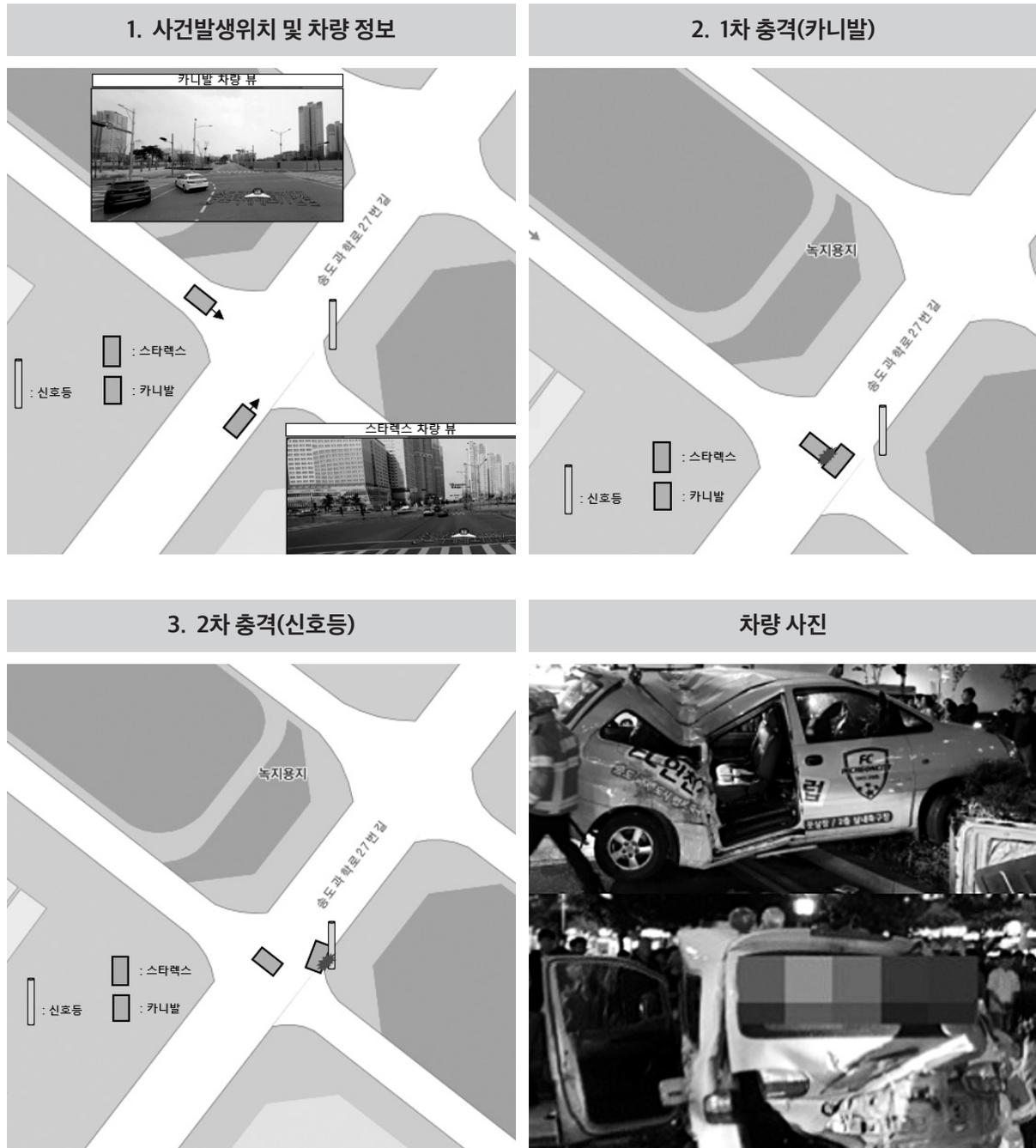
1. 사건 개요

2019년 5월 15일 19시 58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송도과학로 27번길'과 '송도국제대로71번길' 교차로에서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여 정상신호로 주행 중이던 카니발에 좌측 중간 부분을 부딪치는 차량사고가 발생(신호위반과 제한속도 위반, 적색등에 교차로 진입 및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85km로 주행). 이 사고로 스타렉스 안에 타고 있던 정유찬 군은 두개골 골절, 김태호 군은 외상성쇼크로 각각 사망하였고 동일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아동 3명은 각각 미만성 뇌손상(약 4주 치료), 미만성 척삭 손상(치료 일수 미상), 흉골 골절상(약 4주 치료)을 입었으며, 카니발 운전자는 뇌진탕(약 2주 치료)을, 차량 충격으로 인한 차량 이탈로 신호등 옆에 서 있던 대학생은 무릎 타박상(약 2주 치료)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다.

- 형사사건: 가해자(운전자)에게 1심 2년 6개월 금고형, 2심 3년 6개월 금고형이 내려져 현재 복역 중
- 민사사건: 피고인(축구클럽 운영자, 운전자, 축구클럽 법인)에게 유가족 당 일정금액 지급명령 판결

2. 당시 피해(자) 상황



※ 사고 당시 피해 아동들의 탑승위치는 경찰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피해아동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생존자 증언이 있음.

<참고기사>

‘송도 축구클럽 사고’ 유족이 기자에게 사고영상 보낸 까닭 (2019.08.12. 오마이뉴스)

<http://omn.kr/1kejrr>

3. 관계 당국(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담당 부서 또는 책임 있는 회사)의 대응(구조, 수습, 복구, 지원 등)

사고차량은 차체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스티커와 안전발판, 정지안내판, 비상경광등이 달려있었으나 사후 조사결과 축구클럽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가 없고, 실제로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사고 직후 사망한 두 아이들을 응급실에 놓아둔 채 부모에게 다음날 조사를 받아야 할 레식을 치를 수 있다고 한 경찰의 통보는 지금 생각해도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다. 아이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하겠냐는 경찰의 질문은 차치하더라도, 사망한 아이 부모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교통사고 조사 먼저 받아야 한다는 시스템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기록과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 찾아보는 일이 유가족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축구클럽의 강사이자 통학차량 운전기사였던 가해자는 형사판결에 따라 3년 6개월의 금고형(원심 2년 6개월이었으나 검사측의 양형부당 항소 진행)이 내려져 복역 중이다. 하지만 이 축구클럽을 운영했던 사장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하여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축구클럽은 학원법에도 체육시설 관련법에 적용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따라서 축구클럽 사장은 어떠한 법적 책임과 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밝혀냈다. 책임 있는 관계 당국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 진정성 있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해준 것이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의 전부였다.

〈참고기사〉

(1) 두 번째로 축구클럽 차를 탄 날,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2019.08.01.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36>

(2) “태호·유찬이법 속에서 아이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 있길” (2019.08.02.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58>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사망한 아이의 부모로서 운전자가 왜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였는지 아니 따져 물을 수 없었는데, 경찰에 사고 당시

가해자인 운전자가 혹시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혹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경찰은 이미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사망한 두 아이들이 차량의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가해자는 사고 후 장례식장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당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고의는 아니었을 거라는 믿음에 가해자를 안아주기까지 했다. 일부러 사고를 내진 않았을 거란 나의 믿음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산산이 부서졌다. 영상을 보며 이 교통사고는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나의 생각은 이후 민·형사 재판 판결문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xsb11kkmJ4>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사고의 원인은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였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설 축구클럽에서 일어난 사고로,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되었으나, 축구클럽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제도의 허점이었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세림이법 제정 당시, 체육시설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어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모여 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7. 지원 또는 연대

정치하는엄마들과 20대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이용호(무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해 주었고 법 개정에도 앞장서 주었다.

〈참고문헌〉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2020.01.06. 월간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78191>

8. 언론의 보도 형태

다수의 언론에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아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오보를 내보냈다. 그런 기사마다 부모들의 안전교육 미비로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악성 댓글이 이어졌고, 유가족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경험했다. 이 사고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다는 문제와 더불어 승합차의 2점식 벨트의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동승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사망한 아이들은 2점식 벨트를 매고 있었다고 하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다. 교통 선진국의 승합차도 3점식 벨트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2점식 벨트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카시트를 설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태호유찬이법에는 승합차 3점식 벨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3점식 벨트 부분은 누락되고 말았다.

〈참고기사〉

- (1) [법이 없다]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통학버스’ (2019.09.22.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08731_28802.html
- (2) [법이 없다] 안전벨트 아이들 허리만 둘러라?... ‘황당’ 규정 왜 (2019.09.23.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10442_28802.html
- (3) [법이 없다] 매년 ‘폴폴’ 타이어 닳은 채... 아이들 태우고 ‘썩썩’ (2019.09.24.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12331_28802.html
- (4) 안전벨트 매도 머리 부상?... 위험한 ‘통학버스’ (2020.09.15. MBC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1023_32524.html

9. 추모 사업(공공차원 또는 피해자 차원)

원하지 않는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없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축구클럽의 운영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자책감이었다. 사고가 있기 바로 일주일 전에 분명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하원해야 할 아이가 귀가하지 않았는데, 이유인즉슨 축구클럽 내 차량배치 담당자와 운전자 간의 소통오류로 아이가 학원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차량배치 담당자와 통화한 지 20여분 후에 아이를 태우고 온 사람이 바로 일주일 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였다. 당시 운전자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이를 나에게 인계하면서 말로 설명하는 대신 전화기를 내밀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계속 뇌리에 박혀있다. 운전자는 축구코치였고 아이와 나에게 미안해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전화기 너머에 있는 존재와 연결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였다. 차량배치 담당자는 연신 죄송하다며 자기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나는 속으로 오늘까지만 보내겠노라 마음먹었다.

하원 직후 같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아들은 양쪽 신발 끈이 풀린 풋살화를 신고 있었다. 분명 신발주머니에 따로 풋살화를 챙겨갔었고, 실내 풋살장에서만 신는 신발이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아이를 태워 왔으면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이 모양으로 왔을까 생각하며 더욱 분개했고, 나는 아내에게 매우 화를 내며 다시는 보내지 말자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축구클럽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로 구성해서 한 반을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아들만 빠지게 되면 아이들끼리 친해질 기회를 놓친다며 나를 설득했고 '언젠가 한 번만 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만두리라'고 마음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일어난 그 사고 때문에 우리 부부는 아이와 영영 이별하는 고통을 겪었다. 영망진창으로 운영되는 축구클럽에 아이를 보낸 나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웠고, 같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같이 죽자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며 지냈다.

한동안 운전치 못한 정신상태로 이사건의 책임자와 구조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매달렸고, 이 기간 동안 아이의 흔적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척 집에서 생활하며 매일 밤을 자책하며 잠들고, 그 다음날은 닷할 곳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지냈다. 다만, 집안 어르신들과 친구들 그리고 언론사 중에서도 진심으로 우리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분들 덕분에 근근이 버텨냈던 것 같다. 2019년 5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에게도움을 요청했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어린이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아이의 죽음이 꼭 내 닷만은 아니라는 위안을 가질 수 있었다. 시민단체와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내 아이가 겪은 사고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당했을 사고'였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이가 꿈에 나타나 함박웃음을 지으며 내 품에 안겼고 그 순간이 꿈인 줄 알면서도 행복하고도 또 행복했다. 아이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달려와 안겼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이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의 연대와 공감을 통해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도 했고,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기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고 법 개정에도 이뤘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개정된 법에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에 늘 불안하고, 아무리 법 개정이 되어도 법전에만 잠들어 있을 뿐 행정부가 이를 제대로 실행할지 늘 걱정이다. 태호·유찬이법이 다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어른들의 몫이 크다. 얼마 전 인천 신광초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평소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역시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 노란 어린이 통학버스만 봐도 운전을 못할 정도로 분노조절이 안되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감정이 문득 다시 돌아올 때마다 두렵다.

13. 현재의 과제

태호·유찬이법으로 축구클럽, 농구교실, 리틀야구교실 등을 '체육교습업'으로 묶어 기존 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키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하계끔 법이 개정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늘렸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영원칙에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과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제출하는 등의 안전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리단속이 경찰 소관인데 태호·유찬이법의 영향을 받는 다수 이해집단(학원협회 등)의 민원과 로비로 실제 단속과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존 승합차에 노란색 차량도색과 발판 등 일정 시설과 장비만 갖추면 부여되는, 요식행위와도 같은 현재의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제도로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다. 수십만 km를 운행한 노후차량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낮은 차체 강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어렵고, 2점식 벨트는 아동뿐 아니라 성인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데 학원·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와 승합차 제조업체의 반발로 지금 이순간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1) 어린이통학버스에 2점식 벨트가 아닌 3점식, 5점식 벨트 도입
- 2) 노후차량 반납 및 폐차
- 3)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제가 아닌 제작부터 차체 강성을 기준을 충족해야 주는 인증제 도입

- 4) 어린이통학버스 전자안전교육이 아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면허증 제도 도입
- 5)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도 연대책임
- 6)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부 주도 캠페인
- 7) 경찰 수사·일제 단속을 통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경각심 제고(단속에 걸린 곳 대상 불시단속 시행)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1) 정부

떨어지는 출생률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들과 부모에게 직접 물어보기 바란다.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나누어 갖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남 일인 듯 미루다 보니 정작 어린이를 위하는 나라는 없는 셈과 같다.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어린이’라는 존재를 가장 최우선에 두는 행정부처가 존재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어린이가 아닌 어른에게 돈을 쥐어 주는 식의 현 기조로는 출생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 장담한다. 어린이를 어른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 보고, 아동인권을 0순위에 두는 국정철학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입장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단속에 걸리지 않고, 운 없이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나 벌금을 물고 영업하는 것이 더 이득인 지금의 상태를 방치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문제다. 국가가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음이 없다. 돈벌이에 급급하여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희망직업으로 공무원이 상위권에 오르지 오래다.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꿈의 직장’에 있는 당신들은 정작 부처 간 떠넘기기, 부처 칸막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 마인드’라는 비아냥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정부는 4차 산업이니 빅데이터니 AI니 도입이니 말만 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 부처에 쏟아진 민원과 정책제안들 가운데 ‘아동, 어린이’ 키워드로 검색부터 해보라. 해결책을 이미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다가, 사건이 날 때마다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또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2) 국회

① 지역이기주의 조장하고 이에 편승해서 권력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말하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이익보다 소수 이익집단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

고 하니 학원협회, 어린이집협회, 유치원협회부터 현대기아차와 같은 재벌대기업까지 극렬히 반대했고 국회의원들을 찾아 다녔다. 자기 지역구의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이 법 개정을 반대해 달라고 요구하면 아동의 생명안전은 뒷전이 되고, 소수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진다. 비례대표제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② 국회의원 증원을 400명까지 늘려서 실제 일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내가 만난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10명도 안 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일할 사람을 더 늘려야 한다.

③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시행해서 일 안하고, 나쁜 짓 하고, 면책권을 남용하는 의원들을 정리하고 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구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왜 본인들의 권리는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가? 국회에서 네 편 내 편으로 편 가르며 싸우는 동안 아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법이 통과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다 통과되고 시행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오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언제까지 ‘나’를 닦으며 살아야 합니까? 결국에는 정치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게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정권에 따라 여야의 순서만 바뀔 뿐 그 구성원들은 몇 십 년째 똑같습니다. 정치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정치하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없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9년

05. 15. 19:58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정상신호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축구클럽 통학차량에 탑승 중이던 아동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아동 3명과



- 상대차량 운전자 1명 및 보행자 1명이 중경상
- 05. 24.** 청와대 국민청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402>
- 06. 18.** 대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청 거리 캠페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54>
- 06. 20.** 청와대 앞, 대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 축구 기자회견
<http://omn.kr/1jsyp>
- 06. 21.** 대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요청 및 도로교통법 개정 축구 1인시위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55>
- 06. 23.** 청와대 국민청원 213,025명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402>
- 06. 26.**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61180341617>
- 06. 28.**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축구클럽 사고 부모 “반쯤 미쳐 산다.. 더 이상 비극 없도록”>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140>
- 07. 12.**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양현미 문화비서관 답변
<https://youtu.be/whnhEhxApso>
- 07. 04.** 서울시청 앞, 서울시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서울랜드 유아 사망사고, 서울시도 법적 책임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082200004>
- 07. 09.** 국회 정론관,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기자회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618>
- 07. 09.** 한겨레 <주차장서 미끄러진 차에 숨진 아들... “하준이법’통과시켜 달라” 엄마의 싸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126.html
- 08. 01.** 베이비뉴스 <두 번째로 축구클럽 차를 탄 날,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36>
- 08. 02.** 베이비뉴스 <“태호·유찬이법 속에서 아이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 있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58>
- 09. 15.** MBC 뉴스 <[법이 없다] 되풀이되는 ‘주차장 비극’막으려면?>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96535_28802.html
- 09. 22.** MBC 뉴스 <[법이 없다]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닌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08731_28802.html

- 09. 23.** MBC 뉴스 <[법이 없다] 안전벨트 아이들 허리만 둘러라?... ‘항당’ 규정 왜>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10442_28802.html
- 09. 24.** MBC 뉴스 <[법이 없다] 매연 ‘폴폴’ 타이어 닳은 채... 아이들 태우고 ‘쌩쌩’>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12331_28802.html
- 10. 01.** MBC 뉴스 <[법이 없다] 미끄러진 차에 숨진 지 2년... “국회 논의 한 번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24296_28802.html
- 10. 08.** TBS 민생연구소 <‘아동생명안전법’ 무엇보다 절실... 눈물로 호소하는 아이 잃은 부모들>
<https://youtu.be/hOTzjRQjtdA>
- 10. 1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http://m.newspago.com/88012>
- 10. 14.** MBC 뉴스 <[법이 없다] 스쿨존 법안만 17개... “하나라도 통과됐더라면”>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6235_28802.html
- 10. 21. ~ 10. 25.** 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 300개 국회의원실 전달 완료
<https://youtu.be/hAFYWXxSAN8>
- 10. 21.** 국회 앞,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8>
- 10. 29.**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 10. 30 ~ 11. 7.** 어린이생명안전법 정기국회 내 통과 동의서 취합
- 11. 11.** 베이비뉴스 <아이들 이름 딴 슬픈 법... “국회의원들 무관심 충격적”>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54>
- 11. 11.**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 11. 12.**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숙(더불어민주당, 서울시광진구갑)
- 11. 12.** MBC 뉴스 <“아이 죽음 헛되지 않게” 호소해도... 의원 32%만 동의>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43_28802.html
- 11. 13.**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용인시을),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남구갑)
<https://t.me/politicalmamas/935>
- 11. 14.** 국회 정론관,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77>



- 11. 15.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용인시을),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남구갑)
<https://t.me/politicalmamas/941>
- 11. 18.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용인시을),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남구갑)
- 11. 18. 생명안전시민넷 칼럼 <아이들 생명에 빛진 법안들 -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어디 있나?>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9/11/blog-post_18.html
- 11. 19. <2019 국민과의 대화> 출연
<https://www.bbc.com/korean/news-50483554>
- 11. 20.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용인시을),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남구갑)
- 11. 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앞,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행동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21500095>
- 11. 23. 한겨레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한음이, 태호, 유찬이에게 국회는 해명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79.html
- 11. 25.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 9인
- 11. 26.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어린이 생명안전법에 응답하라”>
<https://youtu.be/JQsFXwh54Jo>
- 11. 26. 국회의원회관,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42050>
- 11. 28.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민식이법? 국회 들어가 보니... 대한민국서 어린이는 시민이 아닙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1911281836557640
- 11. 28.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271,502명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 11. 29. CBS정관용의 시사자키 <“나경원, 민식이 부모님께 여당 설득하라는 의도인가”>
<https://youtu.be/8bXm1ORtkMQ>
- 11. 30. KBS 뉴스 <‘어린이법’ 계속 밀렸다... “야만의 정치, 선의 있는 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4246>
- 12. 02.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린이 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https://youtu.be/MwBzO7xLEJQ>
- 12. 02. 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태호아빠 “민식이법 불모 필리버스터 믿을 수 없어”>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6478&page=1&s_mcd=0214&s_hcd=01

12. 05. ~ 12. 09. 국회 앞,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킹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9540>

12. 10. 김어준의 다스뢰이다 <오늘 통과된 어린이 안전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https://youtu.be/ahIBE3xdhCM>

12. 10. MBC PD수첩 <누굴 위해 법을 만드나>

<https://youtu.be/TVGD9BNMMcs>

12. 10.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06>

12. 11.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15,691명 청원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12. 15. 광주 MBC <정치하는엄마들, 그리고 어린이법>

<https://youtu.be/RuOY9h7PIBI>

12. 16. 연합뉴스TV 스페셜 111회 <법안 이름으로 남은 아이들>

https://youtu.be/rm_opOKSW-I

12. 17. 일요시사TV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https://youtu.be/3y5HbnRx7UU>

12. 26. 오마이뉴스 <2019 올해의 인물로 선정.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엄마들 '남은 아이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http://omn.kr/1lv16>

● 2020년

01. 06. 월간복지동향 <어린이 생명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78191>

01. 10. 청와대 국민청원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답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02. 13. 국회 정론관,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및 서울 양천구 주유소굴착기사망사건 대책촉구 기자회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16>

02. 19.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촉구 전화문자 행동. 행정안전위원회 2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명

<https://t.me/politicalmamas/1441>

03. 31. 베이비뉴스 <더 이상 '민식이'를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6>



- 04. 29.** 주간경향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004241541551&code=124>
- 04. 30.**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체육시설법 개정안) 통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25>
- 05. 25.** OBS 막전막후 <송도축구교실 교통사고 1주년 태호유찬이, 그리고 민식이법 막전막후>
<https://youtu.be/br1DgH3ZpC0>
- 05. 04.** 베이비뉴스 <‘태호·유찬이법’ 통과... 체육교습업 통학버스 관리 나선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57>
- 05. 07.** 베이비뉴스 <어린이가 타는 차는 모두 ‘어린이 보호차량’입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51>
- 05. 07.** 청와대 앞,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41>
- 06. 10.** 생명안전시민넷 칼럼 <스쿨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어린이 보호는 시작된다>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20/06/blog-post_9.html
- 06. 21.** SBS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https://t.me/politicalmamas/1919>
- 06. 25.** 하준이법 시행. 베이비뉴스 <“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 살 수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 06. 27.** MBC 뉴스 <엄마는 낙선했지만 아이들 위한 ‘어린이 안전법’은 국회로>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24400_32524.html
- 07. 24.**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아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안전처 신설 국회 토론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574>
- 07. 31.** 베이비뉴스 <‘어린이안전처’를 만들어야 할 이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08>
- 11. 26.** [성명서] 우리는 모두 보행자다! 생명과 편의를 저울질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2>
- 12. 18.** 제10회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상 수상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08>
- **2021년**
- 01. 29.** 오마이뉴스 <민식이법 간절했는데... 1년만의 획기적인 변화>
<http://omn.kr/1rvqc>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조교사의 부정경마를 폭로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2019.11.29)

기록 : 오은주 / 한대식

(문중원 기수 부인) / (공공운수노조 연대사업국장)

1. 사건 개요

2019년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마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 3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이 2005년 개장한 이래 2019년까지 14년간 고 문중원 기수 포함 7명의 말관리사, 기수가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년간 반복된 죽음은 불법과 비리에 둔감한 한국마사회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인은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마사대부(실질 조교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인은 유서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전 경마처장이 친분이 있는 기수에게 조교사개업 허가를 내준 조교사개업 심사과정의 비리와 조교사의 부당지시(부정경마)를 폭로하였다.

2019년 11월 29일 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한 점을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하였다.

유족은 김해시 갑을장유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을 안치한 이후 장례 등 일체의 사항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에 위임하였다.

유족은 요구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게 않을 것임을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는 고 문중원 기수의 자결이 한국마사회가 오랫동안 자정하지 못한 구조적인 부조리와 다단계 갑질을 폭로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항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을 노동열사로 칭하고 조직적인 역량을 다해 고인과 유족의 뜻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후 민주노총 열사대책위 구성, 한국마사회 고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약 3개월간 투쟁을 진행하였다.

2020년 3월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유족은 김해시 갑을장유병원 장례식장에서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와 면담 후 장례 등 일체의 사상을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에 위임하였다.

고인이 돌아가신 계기가 마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함 때문임을 확인한 유족은 요구사항(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이 해결되기 전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후 유족들은 광화문 분향소에서 매일 이어진 촛불문화제, 청와대 헛상여 행진, 오체투지 등 한국마사회와 합의하기까지 약 3개월간의 투쟁을 민주노총 열사대책위, 한국마사회 고문중원기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와 함께 했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경찰은 유서 등 사안이 명확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마사회는 유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한국마사회와 조교사, 정부는 유족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1) 가해자의 사과 여부

한국마사회는 2020년 3월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합의 이후 경마본부장이 고문중원기수 죽음에 대해서 경마방송과 게시문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다.

직접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은 아무런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다.

2) 책임자 처벌

지난 1월 14일 부산지검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전 경마처장을 조교사 개업심사비리 혐의(업무방해혐의)로 기소하였다.

전 경마처장은 현재 직위부여해제 상태이며 한국마사회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진상조사를 방해한 요소들

①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진상조사를 전면 거부 했다. 한국마사회가 진상조사를 거부한 주요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가) 외부인이 한국마사회 직원 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

나) 경찰 수사를 한국마사회가 요청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자체적으로 할 것

②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고 문중원 기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4) 조사보고서나 백서 여부

고 문중원 기수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대책위는 자체적인 진상조사팀을 구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자 간담회,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고 문중원 기수 투쟁 백서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상황을 포함하여 발간하기로 하였다.

* 현재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추진 중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1)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2020년 3월 6일 합의를 작성했다.

① 합의서 주요내용

구분	합의 내용
연구용역(제1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책임자 처벌(제2조)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 부의
제도개선(제3조)	기수 경쟁성 완화, 외국인기수와 차별금지, 건강권, 조교사 개업심사, 기승계약서 표준안 마련, 면허갱신 보완, 기수 소득 안정, 부경기수 사무국 운영, 2017년 합의보완 등
유족 관련(제4조)	마사회 유감표명, 장례지원 및 위로금 모금 위로



② 이행여부

가) 연구용역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부경경마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2020. 5. 27~8.26 3개월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 했다.

나) 주요 내용

구분		개선안
제도	경쟁성 완화	기수 비경쟁성 상금비중 강화, 말관리사 급여체계 개선 검토
	직업안정성 강화	기수 퇴직지원기금 도입
	마사회 권한 조정	상벌위 말관리사 제재권한 축소, 개업 조교사 선발과정 폐지
문화	경마관계자 간 갈등 조율	부경조교사협회 전원가입 및 운영 안정화
	시행체-경마관계자간 갈등 조율	고충처리·내부고발 위탁운영, 다자간 사고대응 협의회 구축 등
환경	지리적 폐쇄성 보완	경마관계자 복지시설 강화, 부경기수숙소 폐지 등
	직업적 특성 보완	근무시간 조정, 심리상담 강화, 생애주기 관점 재테크 교육 도입 등

③ 책임자 처벌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예정

④ 제도 개선

구분	이행여부	비고
경쟁성 완화	이행	비경쟁성 상금(기승료) 조정을 통하여 경쟁성 완화
차별금지	이행	외국인기수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항목만 지원
건강권	이행	재해위로기금 증액 및 운동처방사 지원
조교사 개업심사	이행	개업조교사 선발 절차 폐지
기승계약서 표준안	진행 중	기승계약서 표준안 조교사와 기수에게 제시 (서울조교사·기수협회, 부경·제주 조교사협회 표준안 수용)
기수면허갱신제도 보완	이행	관련 규정 삭제(경마시행규정시행세칙 제52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기수 소득안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마사회는 충실한 조교훈련, 기승횟수 월8회 충족기수의 경우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 보장된다고 밝힘 * '20.1~2월 위 조건과 유사한 부경기수의 상금수득액 약 365만원 - 마사회가 밝힌 조건에 따른 기수 소득 보장 여부는 해당 기간(1개월에 불과)이 너무 짧아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현재는 확인 어려움. 경마 정상화이후 최소 1년간 모니터링 필요
한국경마기수협회 부경지부 사무국 운영	이행	사무국 운영 지원
2017 합의보완	이행	미배치 말관리사 승계 조교사에게 승계인원 1인당 정기마사대부 가점 부여 및 마방 추가대부

⑤ 유족 관련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유감 표명(경마방송, 기사문 게재 등)을 했다.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 했다.

7. 지원 또는 연대

1) 사고 초기의 법률 지원 여부와 내용

시민대책위에 참여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등 법률 단체 등이 유족 지원 및 한국마사회에 대한 고소고발, 공익감사청구 등을 진행하였다.

2) 이후 상황

시민대책위가 진행한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3월 29일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익감사의 주요 내용 중 한국마사회가 '고객만족도조사를 조작하여 부당한 성과급을 챙긴 건'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성과급 환급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고 문중원기수 관련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국(JTBC, MBC, SBS)과 일간지(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인터넷 언론(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도에 나섰다.

특히 부산지역 언론(부산일보, 부산MBC 등)에서는 투쟁 초기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보도했다. 부산일보 기사는 이 보도 건으로 기자회견로부터 지난 3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에 나선 것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이 개장한 2005년 이래 2019년까지 14년간 7명의 말관리사, 기수가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은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말관리사가 자결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기수가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한국마사회의 문제점을 보도하려고 하였다.

9. 추모 사업

마사회와 합의 이후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마사회법 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11월 고인의 기일에 맞춰 1주기 추모주간 사업 및 부산역 광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되었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남편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긴 유서 확인 후 도저히 눈 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힘들겠지만 마사회와의 싸움을 결심했다. 긴 싸움이였다. 진상을 규명하고자 마사회장 면담 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건 경찰 병력을 앞세워 유가족을 폭행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었다. 더욱 오기를 품고 마사회에 맞섰다. 3개월이라는 긴 투쟁을 끝으로 마사회와 합의했다. 현재 합의사항들은 이행되고 있으며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은 현재 검찰기소 된 상태이며 4월30일 1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한다. 합의 이후 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죽음의 경주를 멈추어야한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별도의 추모단체는 있지 않으며 다만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가 활동하고 있다. 유족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 중이며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가 진행되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3개월 투쟁기간 동안 남편의 시신을 광화문 길 한복판에 두고 있었던 시간들이 가장 힘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싸움이 끝나 남편을 차가운 냉동차 안이 아닌 따뜻한 곳으로 묻어주고 싶었다. 투쟁이 끝나고 지금 제일 힘든 건 남편의 빈자리이다. 아이들도 아직 많이 어려 엄마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남은 우리 세 가족은 아빠 없이 살아가야한다.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슬픔이고 영원히 남편을 가슴에 묻어야한다.

13. 현재의 과제

한국마사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경마구락부'가 설치된 이후 약 72년간 경마와 관련한 독점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말생산자(말생산농가),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 경마관계자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영향력

은 막대하다. 경마관계자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한국마사회가 쥐고 있는 것이다. 경마산업 말단에 위치한 말관리사와 기수는 한국마사회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해도 감당해야만 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임계치에 다다른 기수와 말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마사회의 독점 권한을 분산하고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권과 인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과제이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1) 정부

정부는 축산발전기금의 90%를 충당하고 있는 마사회 권력 앞에 무기력하다.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일개 부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공기업인 마사회는 정부로부터 매출을 증대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매출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박산업인 경마의 매출증대는 결국 도박 산업에 더 많은 국민들이 빠져들고 도박 중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모순과 마주친다.

매출중심인 경영평가를 바꿔야 한다. 경영평가는 사회공헌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가치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

2) 국회

국회 역시 한국마사회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다. 말생산자(축산농가)의 목줄을 쥐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마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조차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다. 14년간 반복된 죽음에는 마사회라는 경마산업의 거대 권력이 나눠주는 떡고물에 취해 눈 가리고 귀 막은 국회의 책임도 있다. 국회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경마 산업이 소수의 경마팬 중심이다 보니 시민들은 마사회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다.

박근혜 퇴진 투쟁 시 정유라와 연관하여 한국마사회가 언론에서 다뤄지기는 하였으나 그뿐이었다. 한국마사회가 언급되는 경우는 이미 혐오시설화 된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폐쇄 관련 뉴스 정도였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산업의 독점 시행체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떨어져 있어 사회적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말관리사 2019년 문중원 기수의 죽음이 그나마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미약하나마 합의에



이른 것은 이들이 모두 노조에 가입돼 있었고 그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함께 싸운 시민사회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피해자에 대한 마음은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 자체가 산산조각나는 심정이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먼저 보낸 그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억울함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남은 이들이 살 수 있다. 소리 내야만 세상은 바뀔 것이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먼저 떠나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고개 숙이고 움츠려 들 필요는 없다. 죄를 지은 것은 남은 가족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19년

11월 29일(목) 문중원 열사 자결. 갑을장유병원에서 김해성모병원으로 장례식장 변경(조문객 정보 마사회 측에 유출)

12월 2일(월) ‘갑질과 부조리가 만든 타살, 마사회는 문중원을 살려내라!’ 기자회견(광화문광장)

12월 4일(수) 노동열사 문중원 동지 죽음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부산경남경마공원 본관)

12월 11일(수) 경마기수 노동건강 실태조사(12.4) 결과 발표 및 문중원 열사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정부서울청사)

12월 16일(월) 유가족 우롱하는 한국마사회 강력 규탄 및 보전경마 취소 촉구 기자회견(부산경남경마공원 본관)

유가족 등 마사회의 보전경기 강행 항의하며 부산경남경마본부장 면담 및 본부장실 농성. ‘경기 취소’ 답변 듣고 철수

12월 17일(화) 죽음의 반복 재생산, 돈벌이 혈안 보전 경주 추진 한국마사회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12월 21일(토) 공공운수노조 1차 결의대회(과천 경마장)

마사회 김낙순 회장 면담 촉구 본관 진입. 본관 앞에서 유가족 경찰 측에 폭행당함

12월 24일(화) 문중원 노동열사 유족 면담 외면, 경찰 동원 유족 폭행 한국마사회 규탄 및 고소고발

기자회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2월 27일(금) 유가족 상경투쟁 선포 기자회견(김해성모병원 장례식장)

정부서울청사 앞에 문중원 열사를 모시고, 시민분향소 설치해 농성 시작

문중원 열사 매일 추모 촛불문화제 시작

12월 27일(금)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청와대 분수대) 및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청와대 효자치안센터)

12월 30일(월) 마사회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광화문 시민분향소)

● 2020년

01월 03일(금)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토론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01월 04일(토)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과천경마공원)

정문 진입 시도 중 5명 연행, 과천경찰서 항의 투쟁으로 4시간여 만에 연행자 석방

‘근조 마사회 김낙순 퇴진’ 대형 현수막 마사회 정문에 게시

01월 06일(월) ‘공기업 한국마사회 연이은 죽음,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기자브리핑(광화문 시민분향소)

01월 06일(월) 청와대 헛상여 행진(~ 21일)

01월 06일(월) 문중원 열사 극락왕생 발원기도(광화문 시민분향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유가족 등 주 2~3회 개최. ~03월 8일

01월 07일(화) 고 문중원 기수 죽음 철저한 수사 촉구, 폭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경찰청)

01월 08일(수)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 구성

01월 13일(월)~23일(목) 산별노조 별로 농성투쟁 결합. 청와대 헛상여 행진, 선전전, 추모문화제 결합

01월 08일(수) 경마기수노조 설립 총회(부산경남경마공원)

설립 총회 당일 노조 상급단체와 시민대책위 출입 금지 항의

01월 08일(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한국마사회의 제대로 된 공공기관 역할 촉구! 공공기관노조 기자회견(광화문 시민분향소)

01월 10일(금)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면담

설 전 해결을 위해 집중 교섭 진행기로 합의

01월 13일(월)~30일(목) 11차례 집중 교섭 후 결렬

01월 15일(수) 마사회 업무방해 고소고발 기자회견(대검찰청)

김낙순 마사회장 포함 13명에 대해 문중원 기수 조교사 개업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01월 16일(목) 문중원 열사 49재 및 행진(조계사)

조계사 → 청와대 → 문중원 열사 시민분향소

01월 17일(금)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대책위 오체투지 행진

선포 기자회견(과천경마공원)



- 01월 17일(금)~21일(화)** 한국마사회 문중원 기수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오체투지
 - 17일(금) 과천경마공원 앞 출발 → 양재 시민의 숲
 - 18일(토) 양재 시민의 숲 → 강남역 삼성 고공농성장
 - 19일(일) 강남역 삼성 고공농성장 → 한강진역
 - 20일(월) 한강진역 → 서울역
 - 21일(화) 서울역 → 청와대 앞
- 01월 18일(토)**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종로타워 앞)
 - 종로타워 앞 본대회 → 청와대(126맨션 방향) → 시민분향소
 - 문중원 열사와 함께 1박 2일 농성 투쟁
- 01월 20일(월)** 부산경남 경마기수 노동조합 설립신고 기자회견(부산시청)
- 01월 28일(화)** 노동청에 설립신고 접수
- 01월 21일(화)** 오체투지 행진단 청와대 앞 투쟁
 - 오체투지 행진단의 청와대 앞 행진이 막히면서 투쟁 돌입. 추모문화제 청와대 인근서 진행
- 01월 22일(수)**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청와대 분수대)
- 01월 29일(수)** 유가족 매일 1인 시위 돌입(청와대 분수대, ~ 02월 21일)
- 02월 5일(수)**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마사회의 구조와 노동 실태 조사보고회(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02월 8일(토)**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민주노총
 - 전국노동자대회(과천경마공원)
- 02월 11일(화)**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민주노총)
- 02월 11일(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기자간담회(민주노총)
- 02월 12일(수)~02월 20일(목)**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동네망신 난장 선전전(목동 스타팰리스)
- 02월 12일(수)** 죽음을 경주를 멈추는 2·22 희망버스 선포 기자회견(세종문화회관)
- 02월 19일(수)** 한국마사회 불법·부패 행위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감사원)
- 02월 21일(금)**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단과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면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 02월 21일(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를 잠정 연기 기자회견(광화문 시민분향소)
- 02월 24일(월)**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매일 108배(청와대 분수대, ~ 03월 03일)
- 02월 27일(목)** 경찰 12개 중대, 용역 300명 동원 문중원 열사 추모 공간 폭력 침탈, 철거
 - 유가족과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맞섰으나, 경찰의 방조, 용역들의 무차별 폭력 속에서 추모 공간 철거 및 유가족 폭행당함.
 - 공공운수노조 임원 8명 전 총리 이낙연 선거사무소 농성(~ 03월 06일)
- 02월 28일(금)** 문중원 열사 추모 공간 강제 철거 규탄 및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 기자회견 진행하고자 했으나

막힘(청와대 인근)

경찰 측, 코로나 예방 빌미로 기자회견과 108배 금지. 이에 대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항의 면담 투쟁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청와대 인근 막힌 지점에서 항의 투쟁 및 추모 문화제 진행

03월 02일(월)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교섭 재개

한국마사회 01월 30일(목) 교섭 중단 시보다 후퇴한 안 제시. 03월 05일(목)까지 교섭 정회

03월 02일(월) 유가족이 폭행당했다. 문재인 정부 사과하라! 문중원 열사 추모 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민주노총)

03월 03일(화) <3.7 죽음을 멈추는 1000대 희망차량행진> 계획 발표 기자회견(세종문화회관)

03월 04일(수)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 유보된 해결, 지연된 정의가 불러온 죽음
증언대회(민주노총)

03월 04일(수) 문중원 기수 부인 오은주 님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광화문 시민분향소)
비정규직 이제 그만 소집권자, 인권활동가 등 6명 동조 단식 돌입

03월 06일(금)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

03월 07일(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및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청산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일정 발표 기자회견(광화문 시민분향소)

03월 07일(토) 3.7 죽음을 멈추는 1000대 희망차량행진

과천경마공원 → 광화문 시민분향소 → 청와대, 총리공관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03월 07일(토)~03월 09일(월)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청산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4호실

03월 09일(월) 오전 7시 발인, 오후 2시 영결식(부산경남경마공원), 오후 4시30분 하관식(양산 솔밭산 공원묘역)

03월 09일(월) 장례 진행도중 한국마사회의 합의파기 시도로 부산경남경마공원 본부 타격 투쟁 진행
<장례>

14시 → 17시 영결식 진행

19시경 하관식 진행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2020.04.29)

기록 : 권미정

((사)김용균재단 사무처장)

1. 사건 개요

2020년 4월 29일 13시 32분쯤 한익스프레스가 공사 발주한 남이천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물류창고는 3개동으로 이뤄져있고 사고 장소는 B동이며 지하2층 지상4층이 전소했다. 2019년 4월 23일 착공하였고 6월 30일 완공예정이었으며, 공정률 85% 상태였다. 사고 당시는 내부 마감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발주자는 한익스프레스이고 시공사는 건우이며, 전기-도장-타설 등 9개의 하청도급업체에서 일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다.

* 한익스프레스: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이전에는 한화그룹 소속사였던 종합물류회사다. 이석환 대표이사는 한화 회장의 조카이며, 주요 거래처는 한화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업무를 위탁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공사 기일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노동자를 동시에 작업하게 하여 혼재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우레탄 폼의 특성상 화재를 키웠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피하려 했으나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한 상황에 지하 2층 비상구는 결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폐쇄되어 있었고 화재경보장치나 소방시설은 없었으며, 유증기를 빼내는 환풍 환기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020년 6월 15일 중간수사결과, 지하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발생한 불꽃이 천장의 우레탄폼 마감재로 튀어 발생한 화재라고 발표했다. 용접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들은 없었다. 검찰은 공사기간의 무리한 단축도 사고의 원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공사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설계도가 변경된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문제제기 되었다.

사고 초기 5월 1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가 유족들을 만나 설명회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내용 없는 머리 숙임만 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설명이었으나 발주처와 시공사는 설명과 해명을 하지는 않았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완공을 앞두고 이런 사고가 나서 황망하다는 발언을 했다.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사회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욱 요구하게 했다. 유족들은 한익스프레스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진행과정에 개입하기는 어려웠다.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2020년 6월 10일 4명의 희생자가족, 선 합의를 한 두 가족을 제외한 34명의 유족들은 시공사, 하청업체와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한익스프레스와는 책임 및 보상합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고 발생 53일째인 2020년 6월 20일에 38명의 합동영결식을 가진 후 분향소는 폐쇄되고 각자 장례를 치렀다.

이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2020년 12월 29일 1차 판결이 나왔고 2021년 3월 24일 1차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4월 16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당시 재해자들을 보면 사망한 노동자는 7개 업체의 38명이다. 작업별로 보면 설비(냉동창고) 7명, 배관 12명, 도장 4명, 방수 5명, 수장 4명, 화물승강기 3명, 판넬 3명이다. 이주노동자는 3명이었고 부상자는 10명으로 확인된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중에는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유족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의 사고로 모이다보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확인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사고 이후 초기에는 유족들이 두 장소로 나뉘어 있다 보니 유족협의회 구성이 일부 유족들로 진행되어 다시 모여서 재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합동분향소로 모인 이후 5월 4일 유가족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필요시 유가족협의회, 유가족 대책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중대재해 유가족일동 등의 이름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피해가족이 많다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고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점도 있었다. 입관과 화장을 먼저 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합동분향소에 계속 머무르기 어려운 조건의 가족들도 있었다.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유족들과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유족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럼에도 준비실무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여론형성 등의 문제로 5월 2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준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부 역할을 맡았고 발언도 함께 했다.

현재는 모든 유족들이 법률적 대응을 함께 진행하지는 않고, 분리되어 추진 중이다.

3. 관계 당국의 대응

2020년 4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였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TF구성을 지시했다.

2020년 4월 30일 한익스프레스 지문업체는 합동분향소에 설치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라고 쓰인 현수막에서 한익스프레스라는 업체 명칭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이천시에 제기했다.

대형사고의 피해자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소식과 입장을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고 정기적으로 유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나 합동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했으나 수사결과가 유족들보다 언론에 먼저 나간 경우도 있어서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부검을 하는 경우 유족의 동의가 필수적인 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설명 없이 부검을 진행하기도 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합동분향소로 유족들이 모인 이후에는 분향소 앞에서 경찰 중간수사 시간을 배치하기도 했지만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답답해했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한익스프레스 사고 당시 이천시는 피해자지원에 적극적이었고 초기부터 관심을 기울인 편이었다. 합동분향소를 중단하기 전까지 지자체의 행정체계를 활용하고 발주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이천시가 한익스프레스 설계변경과정에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론되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4월 30일 사고현장 근처 모가체육관에는 가족별 텐트가 설치되고, 피해자 지원안내팀-심리상담팀-의료팀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사고현장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센터에 합동분향소가 차려지면서 유족들은 체육관과 합동분향소로 분산되었다.

당시 체육관에 머무는 피해가족들의 공간은 큰 체육관 가운데 텐트가 설치되어 있어 체육관에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공간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후 합동분향소로 모두 옮겨온 이후는 합동분향소 건물 내에 유족들이 머물 별도의 공간에 가족별 텐트를 설치하고, 원하는 유족의 경우는 모텔을 별도로 잡아서 시가 제공했다. 유족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필요한 교통편은 지자체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공했다. 유족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 지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최대 15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했다.

지자체의 직접적 지원과 별도로 노동사회단체에서는 상담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초기 지자체에 유족지원에 대한 조언과 제안을 했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당시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참사 책임자로 보고 수사대상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결과 2020년 6월 23일 검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혐의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 6월 9일에 <이천냉동창고 화재원인조사 결과 및 향후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대책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경과보고를 위한 자료가 작성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그동안의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현장의 공사 진행경위와 사고 발생경위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인포함 10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시공사인 건우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 감리사는 금고 1년8개월,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금고 2년 3개월이 선고됐다. 하청업체 운영자는 벌금 700만원, 시공사 법인은 산안법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고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있었다.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 같은 화재 재발을 막겠다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건축 마감재 안전기준 강화 ▲적정 공기 의무화 ▲산안법 양형조정 ▲공사장 화재안전기준 마련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의무화 ▲패트를 점검 확대 ▲화재 예방활동 전문교육 개설 ▲다중인명피해처벌법 제정 등이다.

그러나 유족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건설현장 발주처는 노동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원칙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

7. 지원 또는 연대

사고 당일 현장을 갔던 지역 민주노총 단위가 있었고, 민주노총(중앙, 경기도본부, 이천시지부), 건설연맹, 김용균재단이 상황대응을 위한 단위를 구성하고, 합동분향소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지원 연대했다.

2020년 5월 7일 합동분향소 앞에 이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이천시지와 함께 '무료노동상담' 천막을 설치하였다. 생명안전 시민넷도 이천시와 면담을 통해 재난사고 공무원 매뉴얼을 전달하고 언론보도 준칙을 배포하였다.

상황대응 단위는 유족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유족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김용균재단은 유족의 권리에 대해 선전물을 작성하여 부착하였다.

민주노총 주최로 5월 12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원인진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사고조사방향, 건설현장 발주처의 책임, 산재사망 처벌에서의 검찰과 법원의 문제, 유족의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족협의회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였고 피해가족 내부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구성되지 않았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담배가 발화의 원인이라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떤 노동자가 담배를 켜

느냐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추적보도는 그다지 없었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2020년 5월 4일 유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언론에게도 호소합니다. 이번 화재사고에 대해 언론이 보도를 명확하게 하시고 오보나 추측성보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계와 착공, 공사기간, 투입인력, 파견구조, 안전상태 등의 보도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유족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익스프레스사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언론을 통해 많이 제기되었다. 2008년 코리아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사업주에 대한 벌금처분의 문제점 등이 다시 드러나고 제대로 된 처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이 왜 필요한지가 제기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9. 추모 사업

한익스프레스 유족모임은 장례를 치른 후 이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모두 흩어졌고, 이후 법률대응 등을 위해 간간이 만나는 상황이다.

2021년 4월 29일이 1주기가 되어 유족들도 추모 사업을 하고는 싶으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여, 시민사회단위에서 추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조건이 되는 유족들이 ‘이천유가족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한익스프레스 참사 피해자들은 다수가 경기도 이천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거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었다. 피해가족들 중 일부가 이런 참사를 다시는 만들지 않게 하고 싶다고 단체를 만들기는 했으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는 개별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고, 다수는 법률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13. 현재의 과제

건설산업에서의 불법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가 늘어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예정대로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공사와 도급업체에 공기 압박을 하면서 혼재작업이 일상화되는 조건을 만든다.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없다. 안전관리보건 조치가 모두 비용으로만 계상되어 있어서 발주처가 실질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발주처가 정하는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작업인원, 작업 기간, 작업시간, 자재의 질, 작업환경, 노동조건 등이 모두 결정된다. 그래서 발주처가 진짜 책임자인데 발주처에게는 실질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런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고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감리업체가 독립성을 갖고 제대로 감리하도록 해야 문제를 발견하고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지금은 감리사들이 일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 눈치를 보며 맞춰주는 상황이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건설현장이 산재발생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장감독이나 감시를 하기 위해 현장패트rollers를 강화하는 방식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다.

공사기간을 결정하고 공사금액을 정하고 감리업체에 압박도가할 수 있는 발주처가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같이 작업하면 위험한 일들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재해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거나 회사와의 협상으로 배보상문제가 정리되기 이전에는 생계문제가 대부분 큰 문제다. 안정적으로 일이 이어지는 노동이 아니라 작업 기간에 따라 불규칙한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된다. 비단 건설노동자들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유족들이 배보상문제가 정리되기 이전에 생계문제로 가족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지도 못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도록 초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20년

- 0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이천시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 구성
- 04월 30일 1차 현장 감식, 시공사 사장 방문, 합동분향소 설치
- 05월 01일 유족들 회의로 유족대표단 선출, 발주처와 시공사의 유족 설명회
- 05월 02일 이천시와 유족대표단 간담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합동분향소 조문
- 05월 03일 현장 2차 정밀수색, 유족대표단 집행부 15명으로 구성
- 05월 04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천여주지역 연대회의 기자회견. 이천 한익스프레스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된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 기자회견 ; 입장1. 진상규명, 안전관리지침 강화, 책임자처벌을 정부에게 요구/입장2. 정부의 관리감독소홀과 노동부 안전관리 인원부족 등의 문제 개선, 한익스프레스 잘못 철저히 수사/입장3. 2008년에도 같은 사고가 났던 만큼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체계 개선/입장4.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보도 유감
- 05월 06일 유족 합동추모제 진행. 건설연맹,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 참사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05월 07일 고용노동부에서 원정보사 및 건설현장 특별감독 실시(~05.20). 건우 시공현장 특별감독(05.07~05.20), 전국 물류창고 건설현장 337개 긴급감독(05.07~06.05)
- 05월 08일 매일 6시 유족 합동추모식, 법률대리인 선임, 일부 유족은 개별 장례진행
- 05월 10일 수사본부 브리핑
- 05월 12일 민주노총,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 원인진단 긴급토론회.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 대한 건설노조 추모행동 돌입 기자회견 ; 유족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면담(화재원인 진상조사, 유족과 정보공유 후 발표, 현장추모비 건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업재해로 명칭, 사고보상 정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카자흐스탄 유족의 체류 문제 해결, 개인사업자 산재처리 등 건의사항 전달)
- 05월 20일 유가족대표단과 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민주노총이천시지부 담당자 간담회(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보상, 대책위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 05월 21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천합동분향소 방문



- 05월 22일 수도권지역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에 추모현수막 게시
- 05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유가족 일동’ 주최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중대재해(이천화재)책임자 한익스프레스 처벌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
- 06월 02일 유족과 미래통합당의원 간담회(사고원인규명, 책임자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유가족의 참여권 보장,
국가가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 06월 06일 유족대표단 재구성, 시공사와 협상
- 06월 11일 시공사와 유족들 피해보상에 대해 일부 합의
- 06월 20일 합동영결식(‘범시민추모위원회’ 주최, 참가 53일)
- 12월 29일 1심 판결

<첨부자료 1>

2020년 4월 30일 김용균재단 성명서

[성명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산업재해·살인입니다

- 싼 재료, 짧은 공기, 다단계하청, 책임 없는 원청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을 막 하루 지난 4월 29일, 38명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절”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합니다.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아프고 힘든 피해노동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8년에도 우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제기했던 문제가 이번에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부가 어떠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일 작업자가 78명이라는 발표는 있지만 78명만이 일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했고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대피하기엔 통로가 부족했고 9개의 하청업체로 나뉘어 들어가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더 규명해야 하지만 화재사고의 찰나를 만든 원인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 값싼 재료라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미 샌드위치 판넬의 위험성은 씨랜드화재사건으로도 확인했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한 샌드위치 판넬에 대해 사용을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가스화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재료이지만 싸다는 이유로, 공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샌드위치 판넬과 우레탄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값싼 재료와 공사시간 단축의 후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고 대체재들도 있지만 기업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 책임지지 않기 위해 다단계하청구조를 이용합니다.

재료로만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9개의 하청업체가 작업을 했습니다. 설비공사, 화물승강기, 수장공사, 방수공사, 판넬공사, 방수공사 등을 맡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여러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여러 업체들이 각자의 작업공정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혼재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번 사고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업체는 2천만 원의 벌금만 받았습니다.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의 시공사 업체인 경우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도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물류를 주로 취급하며 성장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의 책임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원청은 언제나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는 계속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하도급구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원청이 산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원청은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법과 제도로도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이지만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산재사고가 나면 말단 담당직원, 하청업체 직원, 현장직원만 처벌을 받습니다.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가, 기업주가, 관리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공공기관의 책임을, 기업소유자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시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6차례에 걸쳐 화재위험의 문제에 대해 경고했고 조건부적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고를 한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화재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같은 서류작업만 더한 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는 살인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살인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분향소가 이천지역의 한 공간에 마련되었습니다. 애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위해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피해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사고과정과 이후 진행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가족들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시공무원과 경찰들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별적으로 묻고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어지고 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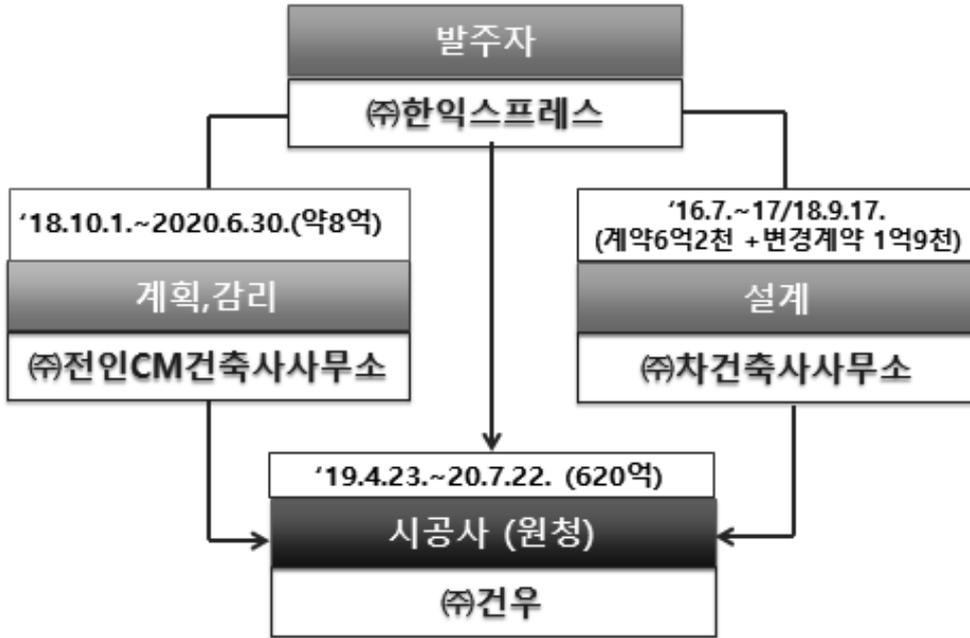
이천지역에만 물류창고가 170여개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없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비용보다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피해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첨부자료 2>

2020년 6월 9일 안전보건공단 (비공식) 중간보고 자료 중
발주처와 시공사 등 건설사 구조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2020.05.23)

기록 :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조혜연
((사)김용균재단,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1. 사건 개요

2020년 5월 23일,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쿠팡의 부천신선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천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84명, 그 노동자들의 가족과 지인 68명, 합해서 총 152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당시 쿠팡은 확진자 발생 후, 이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근무를 했다. 첫 확진자인 노동자 A님은 5월 12일 포장라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쿠팡측은 A님이 주로 근무했던 2층의 근무자들만 출근 후 집단조회에서 일부 밀접접촉자를 격리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방역조치를 다 해서 안전하니 일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일 오후 조 연장근무도 평상시대로 이루어졌다.

5월 25일 추가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25일 오후 7시 셧다운(부천센터 폐쇄) 공지를 내렸다. 결국 쿠팡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월 25일 오후 7시 셧다운 공지까지 '54시간' 동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꼴등타임을 흘려보냈다.

셧다운 이후 2020년 7월 2일, 부천센터는 영업을 재개했는데, 피해노동자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채였다. 피해노동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건강 등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일체의 안내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만 하다가, 7월 7일 경에야 치료기간 동안 유급처리를 해주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

방역조치도, 거리두기·소독·소독물품 비치 등 일부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노동조건과 관련한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었고 이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 되다가, 8월 중순 경,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커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을 당시 다시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쿠광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을 구성했고,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쿠광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모임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의 경험으로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감으로 외부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용기를 내어 부천센터와 잠실에 있는 쿠광 본사 앞에서 1인시위와 같은 활동을 지속했고,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에도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다.

쿠광은 15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과 지원도 일절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확진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재계약이 안된다던가 출근지원하는 앱이 막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고, 완치 후 복귀하여 출근을 했다가도 차별과 퇴사 압박에 시달리거나, 후유증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2명의 노동자는 해고(재계약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상황을 보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ㄱ님은 배우자와 자녀가 감염되었다가, 자녀는 회복했지만 배우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액의 병원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트라우마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생활 또는 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당시 피해(자) 상황

152명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모임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피해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대책위원회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통해 집단감염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일부 피해실태를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ㄱ님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감염이 되었다가 배우자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ㄴ님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ㄷ님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근무가 불가능해 완치 후 업무에 복귀를 했었지만,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또, 당시 부천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감염이 안 되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센터에서



받아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었다(쿠팡의 일용직인 단기알바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근무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알바를 하는 노동자들은 한 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갱신이 되던 재계약이 거부되거나, 지원할 수 없게 앱이 막혀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업무에 복귀한 뒤 차별과 퇴사 압력을 받아 그만두게 된 경우도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도 있다.

이렇게 피해상황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들 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후유증,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고용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상황들은 일부 피해자를 통해 사례로서 전해질 뿐 전체적인 규모와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부천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15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원인을 요약하면, 1) 쿠팡의 안일한 대응, 2) 쿠팡물류센터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의 고된 노동, 3)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노동 환경과 미흡한 방역조치이며, 4)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쿠팡의 태도가 피해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1) 쿠팡의 안일한 대응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쿠팡은 첫 확진자 발생 즉시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려 대응하지 않고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의 잇속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인데, 실제로 감염문제가 발생했을 때 쿠팡이 즉각적으로 했던 일은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2) 쿠팡물류센터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의 고된 노동

쿠팡의 물류센터는 쿠팡의 배송시스템인 ‘로켓배송’과 같이 쿠팡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신선센터는 냉동식품, 채소 등을 ‘로켓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당시 부천센터에는 1,300여명이 일하고 있었고,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계약직, 일용직인 불안정 노동자이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쿠팡치’라는 앱을 통해 하루하루 신청을 해서 출근을 하고, 계약직은 3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개월 수를 높여가며 계약을 갱신한다.

인터넷을 잠깐만 검색해 보아도 쿠팡의 물류센터는 지옥의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일이 힘들고 노동강도가 높다. 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3월 12일 안산에서 심야 새벽 배송을 하던 40대 쿠팡맨이 배송 중 사망한 사건 이후 2021년 3월 25일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쿠팡의 배송노동자·물류센터 노동자 9명이 과로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사망했다.

쿠광의 물류센터는 로켓배송을 위해 신속·정확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센터별로도 경쟁시키고, 개인별로도 UPH(시간당 작업속도)를 측정하여 초단위로 감시와 통제를 하며, 점점 더 빨리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리자들과 노동자들은 방역보다는 일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문제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3)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노동 환경과 미흡한 방역조치

이런 상황에서 방역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식품의 신선도를 위해 전체가 커다란 냉장고라고 할 수 있는 신선센터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밀폐된 상태가 유지된다. 결국 환풍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동선이 교차하며(언제 누구랑 마주쳤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밀집해 있는 환경에서, 점심시간 외에는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이 늘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일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관리자들도 역시 늘 큰소리를 치며 관리감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사람들끼리 밀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PDA, 컴퓨터 단말기와 같은 작업도구를 공유해서 사용했으며, 냉동고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하는 방한복은 세탁도 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돌려 입었다. 쿠광은 질병본부의 지시대로 방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손소독제가 일부 제한된 지점에만 비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4)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쿠광의 태도

이렇게 한번 감염자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확산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쿠광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쉬쉬하며 물류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 2020년 5월 25일 오후 7시 쯤에 온 공지 이후에도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정리 등을 위한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에도 피해노동자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성의조차 없었다. 일부 노동자들은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뉴스나 동료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먼저 연락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답을 듣기가 어려웠다. 보상과 지원, 고용보장과 같은 어떤 약속이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노동자들은 불안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쿠광의 노동환경과 직장대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피해자모임과 지원대책위원회는 계속해서 쿠광에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쿠광은 응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원회 등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쿠광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의가 결렬되었다.

3. 관계 당국(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담당 부서 또는 책임 있는 회사)의 대응(구조, 수습, 복구, 지원 등)

집단감염 발생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그 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단감염을 일으켰던 쿠광의 열악하고 문제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광 측에도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태파악도 되지 않은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방안도 일절 없는 상태이다.

4. 당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 (책임 있는 관계 당국 또는 회사의 지원)

감염 피해자들은 다른 코로나19 감염자들과 마찬가지로 음성판정을 받는 순간까지만 치료를 받고 이후로는 어떠한 심각한 증상이 있어도 치료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쫓겨난 기간 동안 휴업급여(계약직에 한해)가 지급되었고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정확한 규정은 알 수 없음) 유급 병가처리가 된 사례가 있으나 그 외에는 확인된 바 없다.

이 외에는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지워지고 있는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쿠광도 쿠광이지만, 이렇게 쿠광에서만도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5.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쿠광측은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었다. 지원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자모임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피해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2020년 9월 28일 '쿠광은 어떻게 무권리의 위험 현장이 되었나: 쿠광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부기관이나 쿠광 사측의 협조 없이 진행되어 전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일부 피해 실태와,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게 만든 쿠광의 태도, 노동조건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은 위 '1. 사건 개요, 2. 당시 피해(자) 상황'에 담았고,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쿠광은 어떻게 무권리의 위험 현장이 되었나' 검색)

법적인 대응으로는, 총 10명의 피해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9명이 승인을 받았고, 1명은 진행 중이

다. 후유증으로 1명이 추가상병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모임 활동이 발미가 되어 재계약을 거부당한 2명의 노동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족 감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다른 피해노동자들의 집단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원대책위원회와 피해자모임 차원에서 쿠광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2020년 9월 고발 접수했다.

6.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 (제도 개선 등)

7. 지원 또는 연대

사건 발생 직후 노동·인권·시민단체 등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모여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자모임을 통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쿠광에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산재신청, 각종 민형사소송 등 법률적인 지원과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8. 언론의 보도 형태 : 쿠광의 언론에 대한 태도 포함

쿠광은 최근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였는지, 이미지 관리를 중요시 하고, 언론에 굉장히 민감했다. 자체적으로도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운영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측의 입장을 직접 밝혀왔는데 이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지원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할 때마다 언론사에 쿠광을 선전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인터넷을 ‘도배’하는 행위를 해오기도 했다. 이런 기사를 받아 적는 언론사는 주로는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라는 사안 때문인지, 피해자들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몇몇 언론에 대해 쿠광 측은 언론탄압으로 대응했다.

최근 쿠광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쿠광은 쿠광의 극심한 노동조건을 다룬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에게 1억 원의 손해소송을 하기도 하고, 기사를 내릴 것을 집요하게 종용하기도 했다. 집단감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쿠광의 전반적인 노동 조건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점에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여, 언론탄압의 문제도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9. 추모 사업 (공공차원 또는 피해자 차원)

10. 3~9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

“구광은 개인을 소모품으로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도 그러하지만 물류센터도 필수노동자이다. 의무와 책임만 있지 보호조치는 정부나 기업 아무 것도 없이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일로 여긴다.”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동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도 대응하지 않는다. 이는 나라가 무성의한 것이다. 부천시에서도 자신들은 대답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보건당국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사안인지 알 수 없다. 기업이 문제라면 정부가 질타를 해서라도 고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 것도 없었다. 정부가 기업의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취약계층이 재난에서 보호를 더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몰려가고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 같다.”

“을지로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 같다.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11. 피해자의 현재 상황

- 피해자들은 “구광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을 구성하여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 한 분은 남편이 확진되어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 구광에 다니는 분은 한 분이고 대부분이 일을 못한다. 후유증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법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다.
-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두통과 몸살, 기운 없음, 탈모 등 여러 후유증이 있으나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산재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안한 상태이다.
- 피해자들은 함께 1인시위를 하거나 집회 등을 통해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시기에는 움직이지 못했다.)

12. 피해자로서 가장 힘들었거나 현재 힘든 점

“피해자인데도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이유로 바이러스 전파자로 인식되어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자가격리

하면 주황색 박스가 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우 위축되고 스스로 죄인이 된 것 같다.”

“단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렸고, 누구는 가장을 잃고, 누구는 가족과 분리되고, 누구는 생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는데 아무도 그 이후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고통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도 정부 방침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이다. 걸리면 재수 없는 것이 된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다.”

13. 현재의 과제 (참사 관련 또는 피해자들의 과제)

“벌써 감염 이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후유증도 있고, 일하기가 힘들어 생계가 어렵다. 치료비도 어렵다.”

“트라우마 치유문제도 크다. 상담을 받아도 금방 치유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터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건강문제도 있지만 주변의 인식도 필요하다.”

“후유증에 대해 추가상병 인정이 필요하다.”

14.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요구 사항

“정부나 정당의 경우 쿠광과 같은 기업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면 실천을 해야 한다.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후유증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산재 인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족감염에 대해서도 산재인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예방지침만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피해자들의 차별과 불이익이 없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15.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바라는 점)

“확진자가 늘고 삶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렇다면 더 경계하고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져야 하는데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확진자도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감염병을 퍼뜨리는 자로 취급해서 혐오하는 것이 문제이다.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변의 인식 때문에 더 숨게 되는 것 같다.”



16. 비슷한 피해나 참사를 당한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조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직장 내 집단감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숨기지 말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감염 되었다고 움츠릴 필요가 없다.”

17. 주요 일자별 사건 일지

● 2020년

05월 23일 부천물류센터 첫 확진자 발생

05월 24일 정상 근무 지시. 2층 근무자들은 출근 후 집단조회에서 밀접접촉자 분류 및 격리조치. “방역 다 지켰고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 계속 일을 하라.” 2층 외 다른 층 근무자들은 별도 상황설명 없이 정상 근무

05월 24일 오전조, 오후조 2시간 연장근무

05월 25일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오전조 2시간 연장근무

05월 25일 오후 7시 휴게실로 모이게 함. 첫다운 공지 (이 시각부터 5월 25일 오후 7시 근무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지할 때까지 무려 54시간 동안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대부분 종사자는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근무했고 이로 인해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졌다.)

05월 26일 오전 1시 36분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 발송.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는 증상이 없어도 관할 군구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금일 중으로 반드시 받으라.’

05월 27일 오전 9시 36명 확진자 발생(인천 계양구, 부평구, 동구, 연수구, 경기 광명 등 인천 거주자 22명, 경기도 10명, 서울 4명)

· 부천시와 각 지자체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근무자, 납품업체 직원, 아르바이트생, 퇴직자 등 3,626명 대상으로 전수 검사

· 32명 직원, 가족 4명에게 2차 전파

07월 02일 부천신선센터 재가동 (쿠팡 부천신선센터 감염자 수는 총 152명으로 쿠팡 노동자 84명, 추가전파 68명으로 집계됨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07월 02일 부천센터 피켓시위 시작. 피해자들과 지원대책위원회 참석. 이후부터 부천센터 피켓시위와 1인시위 주기적으로 진행

07월 08일 쿠팡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증언대회(정의당 주최)

07월 15일 쿠팡본사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07월 22일 법적 대응 등을 위한 피해노동자 대상 공개 설명회

07월 23일 쿠팡 잠실 본사 앞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함

07월 31일 피해자모임 2인 해고

08월 18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투쟁 공동행동 기자회견

08월 13일 언론사 연속기고 시작 [코로나19가 드러낸 '쿠팡식 성장모델 민낯'] (총 5회)

08월 13일 쿠팡 셔틀버스 선전전 시작

09월 01일 쿠팡 피해자 지지선언 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 광고면 게재

09월 02일 쿠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접수

09월 28일 쿠팡 집단감염, 부천물류센터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10월 28일 잠실 본사 기자회견(집단감염 160일차)

12월 09일 잠실 본사 기자회견(집단감염 201일차)

12월 29일 집단 민사소송

이후 코로나19 확산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선전전과 같은 활동을 일정 기간 쉬기도 하였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기간 동안 제정운동 활동 참여, 쿠팡의 물류센터·배송노동자의 과로사문제와
연계한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음

2부

모색과 토론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상황과 개선 과제

오민애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7개의 기록을 읽으면서, 기록 하나하나를 작성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정리하셨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리해주신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참사를 대해왔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참사가 일어난 장소와 일어난 이유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구조적 원인,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점,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할 피해자들이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서야 했던 점, 무엇보다도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닌,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치부하는 문화가 참사 자체의 원인이 되고 동시에 참사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참사와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는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과 안전 = 비용?

부실한 시공, 불법 인허가, 2인 1조가 필요한 현장에서의 1인 근무, 저렴하고 위험한 재료나 물질의 사용. 이 모든 행위의 원인은 일하는 사람 혹은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비용으로 치환되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단가를

줄이기 위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들은 참사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고, 비용절감을 위한 선택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당화 되어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참사의 극복 과정은 관계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참사의 교훈과 과제를 온전히 사회가 실현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참사와 관련해서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법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재난과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법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재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하면서,¹⁾ 사후적인 대책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후적인 대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 '기본법'이 존재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제3조)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선행적인 인권임을 보여줍니다. 사후적인 관리와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가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기업이 노력해야한다는 것,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사발생 순간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권리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을 비용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존중하고, 이를 경시하고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의 여러 가지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수많은 참사가 반복되면서 법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확인해온 결과 제정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이마저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기록된 참사들은 피해자의 노력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나갈 수 있었거나 현재도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밝히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고 수사기관, 정부기관과 싸워야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밝혀졌는지,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요구하지 않으면 먼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사 중 이라거나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도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현재 ‘재해구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연 재해를 전제하여 발생하는 ‘이재민’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가 아니라, 국가가 일정기간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시혜의 대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참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향유할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참사와 참사의 피해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권’(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과 안전약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명문화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

참사 기록을 살피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기구의 활동 경과 혹은 진상기구를 꾸리기 위한 싸움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부터 피해자의 몫이 되어왔습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면 매번 조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마련할 법적 근거를 두고 조사기구가 설치되도록 한다면, 조사기구



를 만들기 위해 들여야 했던 노력을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는 데에 쏟을 수 있고 보다 신속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참사가 발생하면 현장을 훼손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닉하는 등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참사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수 있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하는 별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은닉해도 이를 마땅히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더 큰 책임을 면하려 하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사고현장을 은폐하려거나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려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현장훼손과 은폐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들의 의무를 확인하고 위반하여 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²⁾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두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달라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실한 감독, 불법 인·허가로 인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인허가 업무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 국민입법청원안 제8조

(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 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및 인허가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지난해 11월, 우원식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한편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제도화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핀 피해자의 권리,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 등을 명문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과 관련된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정책수립 시 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발의되어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대로 논의되고 제정되는 것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 공무원 책임 조항의 삭제, 발주자의 책임근거 불분명 등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법 제정의 의의가 큰만큼, 그 한계를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큼니다. 아직 시행 전인 이 법이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내용, 법이 적용되는 대상 질병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통령령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참사를 예방하고 참사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참사의 교훈과 과제가 반영되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법입니다. 두개의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완성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여겨왔는지, 참사를 어떻게 대하고 극복해왔는지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안전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래군 | 인권재단 사람 소장, 4.16재단 운영위원장

1. 증언과 기록의 의미

여기 모아진 증언과 기록은 2003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17건의 참사들에 대한 것이다. 이 증언과 기록은 피해 당사자와 각 사건 대책위원회에 깊이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정리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록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17건의 참사들 중에 세월호 이전의 참사는 대구지하철, 삼성 백혈병, 용산, 춘천봉사대, 기습기살균제 등 5건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11건이다. 세월호 참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을 대하는 피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4.16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4.16 이전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고 돈만 쫓는 야만사회였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외면한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승선한 승객’이라는 자각이 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전히 이전과 같은 참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사망사고가 속출하면서 OECD 1위를 기록하는 산재사망률은 줄지 않고 있다. 그걸 반증하듯이 이 증언과 기록에도 노동사건은 모두 10건으로 3분의 2에 육박한다.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분명 달라지고 있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 증언과 기록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태도다. 물론 여기에 제출된 기록과 증언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돈보다는 생명

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싸움들이 있었음을 말해주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그런 흐름들이 단연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제 피해자들은 고분고분하지 않는다. 보상만 받고 입 다물고 물러나고 평생을 남은 가족들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살아가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보상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가장 앞세우는 것은 진실규명이고, 책임자 처벌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다. 이런 주장들은 모든 사건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다. 그런 흐름들은 결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이 애초에 주장했던 법안에서 많이 후퇴하였다고 하지만, 이 법률의 제정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우리 사회는 이제야 안전사회로 한 걸음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해당사자인 유가족과 활동가, 전문가의 결합이 눈에 띈다.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태도와 입장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이제는 '피해자 활동가'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나 활동가로 변화해가고 있다. 거기에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가 결합하고,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결합할 경우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싸움을 언론이 제대로만 조명해준다면 문제의 해결이 빨라질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여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주체들의 결집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권도 움직이면서 사건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활동가로 성장하고, 그들이 안전사회운동의 한 축을 맡게 되면서 생기는 힘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사회 안전사고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안전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안전하지 않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도리어 가족들의 건강을 해쳤고, 노동현장은 항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와 함께 생존권의 요구를 갖고 싸웠던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당국의 살인진압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와 공권력은 늘 위험사회를 만드는 세력들의 편을 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은 안전 문제에서는 항상 기업에 편향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규제들을 풀어주면서 안전 관련 규제도 함께 풀어 버리고는 해왔다. 법과 제도, 심지어 검찰 권력이나 법원조차도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기득권 세력의 일부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안전사회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면 이런 총체적인 위험사회 유지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번 증언과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은 참사의 피해 당사자에게 사건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피해당사자에게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될 뿐이고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운명이 되어버린다. 참사를 겪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는 정치권력의 배신이나 언론, 주변인들, 혐오세력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더욱 심해진다. 피해 당사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은 남은 이들이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죽어간 원인들을 제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열린다. 헛된 죽음이 아니라, 잊히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서 사회적 의미가 더해지고, 그 사회적 의미를 이룰 때 피해 당사자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동료들도 또한 그렇다. 그러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런 사회적 의미를 실현해가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닌 소중한 증언들이 여기에 모였지만, 사실 여기에 모인 사건 증언과 기록들은 일부일 뿐이다. 여기에 모인 참사들, 사건들은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참사들의 끝을 보지 못했고, 그 죽음들이 던진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이들 참사들이 던진 과제를 늘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과제를 현실화해가야 한다.

2. 안전사회운동은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에는 안전사회운동이 태동되고 있다. 이전에는 산재추방운동 등이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 조례제정운동이 있었고,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축적시켜왔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문제는 기업의 경우는 비용의 문제, 정부의 경우는 재정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변화시켜가면서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운동들이 본격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사회를 향한 운동들이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느낌이다. 당사자를 넘어선 시민 모두의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세월호 참사 투쟁에 여전히 함께 하는 시민들이 있고,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인식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서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제출된 증언과 기록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듯이 우리 사회는 곳곳에 위험이 넘치는 사회다. 그런 위험 요소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회다. 참사가 당연한 세상에 사는 일은 불행하다. 안전권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안전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위협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이런 안전권에 대한 규정은 생명안전 시민넷이 준비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에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 제3조에 담겨 있다. 현재의 헌법에 안전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므로 개헌이 되면 이런 내용의 기본권이 신설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왔다.

그러므로 안전사회운동은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다. 안전을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게 만들지는 운동이다. 지금까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렴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면,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곧 안전권 확보운동이고, 안전사회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참사의 증언 자리에서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면 좋겠다.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오민에 변호사의 토론문에도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소개하는 일은 여기서는 생략한다.

안전사회운동이 시민사회운동의 한 분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 전문 단체와 활동가들의 확보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안전과 관련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민관 협치에 바탕한 안전 거버넌스 기구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국가 안전대진단도 시행하고, 5년 단위로 국가안전관리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형식화되어 있거나 정부 분야에서도 안전 전문인력은 많이 부족하다. 그간의 안전 대책과 정책들도 점검하고, 그를 현실화시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안전사회운동이 발전해야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정책을 모니터하고,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제안과 함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운동도 전개해야 하는 등 실로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분야도 교통, 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안전 관련한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안전 분야만큼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같은, 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참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안전 분야의 사회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무척 긴요한 일 아닐 수 없다.

항상 도사린 위험 속에서 우연치 않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참사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3.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럼 안전사회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먼저 다각적인 연대망의 구축부터 가능하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연대를 통해서 성과들을 내고 있다. 피해자와 활동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그물망처럼 엮히는 연결망을 구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역량만으로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안전사회운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4.16재단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피해자 역량 강화교육과 시민안전교육은 민간의 안전역량을 창출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된 것이다.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안전교육을 한다면, 시민들 속에서 우리 마을과 현장부터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활동가들이 나온다면 안전사회운동은 새로운 운동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안전사회운동을 창출할 역량을 키워내는 일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에서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사업으로 배치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학의 전문 연구자와 변호사와 노무사, 산업안전 전문의 등이 결합하면 운동의 동력을 확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명안전 시민넷이 현 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했던 일도 당장의 안전사회운동이 시작할 수 있는 지점들이다. 지난 2018년 6월에 생명안전 시민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안전 평가와 과제 “안전한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그때 제출한 제안서의 결론으로 문재인 정부가 안전 분야에서 역점을 두어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①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전면 보장
- ②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안전규제 완화를 전면 재점검
- ③ 재난 피해자와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실효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
- ④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 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일터를 보장
- ⑥ 피해자와 시민·노동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 ⑦ 일선 현장의 안전 인력과 예산을 조속히 보장하여, 재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 ⑧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과 사고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신중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고, 위에 제시한 대부분의 사항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요란하기만 했지 실속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의 각 분야의 전문 단체와 활동가들, 연구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시적인 정책 모니터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 의식을 심화시켜가는 일은 언제고 가능하다.

이 토론회에 제출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이 서로의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고, 같이 점검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공동의 정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전개해간다면

고립 분산적인 투쟁이 아니라 연대투쟁이 실질적인 투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안전사회운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재난 참사, 사회적 참사,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위험사회는 끝내야 한다. 그를 위해서 피해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참사 기록과 증언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김자영 김 훈 안진걸 김현수 송경용 김혜진 문호승 김동춘
박영선 방정균 이윤희 김정희 홍준의 김경란 곽선희 김수원 조선이
한재숙 박경환 라이프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생문제연구소
보임디자인(주) 걷는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주최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  생명안전 시민넷

후원 |  국회 생명안전포럼